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사업 학술대회

일제 지배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2. 11. 18.(금)

학술대회 일정표

학술대회 개요

-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40~18:00
- 장소 및 방식: 재단 대회의실 / 대면 비대면 병행 추진
- 주 제: 일제 지배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발표 식순 및 주제

식 순	구 성
개 회 10:40~11:00	개회사
기조강연 11:00~11:15	일제 식민지조선 지배정책 연구의 과제 박찬승(편찬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
제1발표 11:15~11:40	조선 총독의 지배정책 전상숙(광운대)
제2발표 11:40~12:05	일본군 연구와 지배정책 신주백(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오찬 및 휴식 12:05~14:00	
제3발표 14:00~14:25	일제의 농업생산정책 이영학(한국외대)
제4발표 14:25~14:50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김인호(동일대)
제5발표 14:50~15:15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허광무(강평연)
제6발표 15:15~15:40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이승순(고려대)
휴식 및 정리 15:40~16:00	
종합토론 16:00~17:30	종합토론 사회: 정태현(고려대) 1. <정치> 장신(한중연) 2. <경제> 조석곤(상지대) 3. <전시동원> 김민영(군산대) ※ 개별 주제에 대한 토론 없이 종합토론만 진행

목 차

기조강연 일제 식민지조선 지배정책 연구의 과제	9
- 박찬승(편찬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	
<hr/>	
제1발표 조선 총독의 지배정책	25
- 전상숙(광운대)	
<hr/>	
제2발표 일본군 연구와 지배정책	39
- 신주백(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hr/>	
제3발표 일제의 농업생산정책	45
- 이영학(한국외대)	
<hr/>	
제4발표 조선총독부 공업정책	63
- 김인호(동의대)	
<hr/>	
제5발표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87
- 허광무(강평연)	
<hr/>	
제6발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105
- 이송순(고려대)	
<hr/>	

기조강연

일제 식민지조선 지배정책 연구의 과제

박찬승

(편찬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

일제 식민지조선 지배정책 연구의 과제

박찬승
(편찬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

1. 들어가며 - 『일제침탈사연구총서』의 발간 취지

지난 2019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은 일제의 식민지조선 지배정책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일제침탈사연구총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편찬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로 나누어 총 50권의 연구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5권을 발간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10권을 추가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도까지는 원고 집필을 모두 마감하여 늦어도 2024년도까지는 나머지 분량을 모두 발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제침탈사연구총서』의 발간 취지는 이미 배포된 연구총서의 앞부분에 실린 ‘편찬사’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기에서 잠시 편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일제는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한국을 지배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 기회와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군사력과 경찰력, 각종 악법을 동원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한국인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참정권을 박탈하였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자본이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본인 위주의 경제

정책을 수행했으며, 식량과 공업원료, 지하자원 등을 헐값으로 빼앗아 갔고, 농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한국인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한국인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하여 결국은 일본의 2등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문화적으로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글 대신 일본어를 주로 가르치고, 언론과 대중문화를 통제하였다.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뒤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강제동원하고, 많은 이들을 전장에 징집하여 생명까지 희생시켰다.

『일제침탈사연구총서』는 침탈, 억압, 차별, 동화, 수탈, 통제, 동원 등의 단어로 요약되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실상과 그 기제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의 강제 병합을 정당화하거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논리들을 비판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일제 식민 지배의 특성이 무엇이었는지, 식민통치의 부정적 유산이 해방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편찬사는 일제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침탈, 억압, 차별, 동화, 수탈, 통제, 동원 등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주요 연구 성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본 연구총서에 반영된 학계에서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연구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흡한 분야와 주제들은 무엇이었는지 점검해보기로 한다. 이로써 향후 학계의 연구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이 글에서는 식민지시기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들을 검토해보고, 각 관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관점 위에서 식민지시기를 연구해야 할지, 특히 식민지배정책을 연구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이 글은 편찬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필자의 의견을 밝힌 것임을 부언해둔다).

2. 일제의 식민지조선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

1945년 해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는 같은 시기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도 적었고, 정부 연구

기관에서의 관심도 적었다.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일본의 소장 한국사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각 시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1970년대 일본에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정리는 1946년 일본 대장성이 일본의 각지 식민지 지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집필한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총 37책, 그 가운데 조선편은 10책)으로 시작되었다. 이 책의 집필에는 주로 구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이 책에서 ‘병합’ 이전의 한국은 현저하게 후진, 낙후해 있었으며, 일본의 조선통치는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 향상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썼다. 이 책의 집필자 중의 한 사람인 스즈키 다케오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서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시동인의 입장에서 조선을 문명사회로 만들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¹⁾ 스즈키 다케오의 주장은 식민지시기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지식인, 관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1960년대 도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조선인 소장학자들과 식민지기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들은 1) 20세기 초 일본의 조선 병합은 일본의 안보상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2)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서 간주하지 않고, ‘내지연장주의’의 입장에서 조선을 근대 문명사회로 개발하려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²⁾ 이들의 이와 같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은 전후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일부 일본의 보수파 정치인이나 관료, 학자들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나온 일제지배정책사와 관련된 책으로는 문정창이 쓴 『軍國日本 朝鮮強占 36年史』(전3권)(1965-1967)이 그 첫 번째 책이 아닌가 싶다.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사(1919-1945)』(1970)를 펴냈다. 일본에서는 朴慶植이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1973)를 펴냈고, 山邊健太郎이 『日本統治下の朝鮮』(1971)을 펴냈다. 이들 책은 일제의 지배정책을 정치, 경제, 사회, 문

1) 다른 필자들은 익명으로 집필했지만, 鈴木武雄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의 조선편 결론 부분을 실명으로 집필하였다.

2) 미야다 세쓰코 해설 감수, 정재정 번역, 2002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혜안, 서울)

화의 여러 측면에서 서술한 것인데, 대체로 당시의 일반적인 제국주의론, 즉 ‘식민지 = 본국의 원료(식량)공급지·상품판매지·자본수출지’라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는 무단적 억압과 기만적 ‘문화정치’, 경제적으로는 식량과 원료(면화·생사)의 생산과 수탈, 지하자원의 약탈과 수탈,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말살 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쓰여졌다.

각 분야별 지배정책사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朴慶植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1965), 강동진의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1920年代を中心として』(1978), 신용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사연구』(1979) 등의 책이 중요했다.

지배정책사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김운태가 행정학의 입장에서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정리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1986), 임종국의 『일본군의 조선침략사』(1,2)(1988), 鈴木敬夫의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1989), 宮田節子の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1985), 강재언의 개설서 『日本による朝鮮支配40年』(1983)이 나왔다. 경제사쪽에서는 河合和男의 『朝鮮産米増殖計劃』(1986), 조기준의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1981), 권태익의 『韓國近代綿業史研究』(1989) 등이 중요한 성과였다. 한편 安秉直 등 남한의 경제사학자와 中村哲 등 일본의 경제사학자들은 『朝鮮近代의 歴史像』(1988), 『近代朝鮮의 經濟構造』(1989)라는 책을 펴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책들은 기존의 이른바 ‘수탈론’을 비판하고 ‘개발과 수탈’론을 주장하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지배정책사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다. 경제사 쪽에서는 김용섭의 『한국 근현대농업사연구-한말·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문제-』(1992), 홍성찬의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20세기 전반기 전남 화순군 동북면 일대의 사례-』(1992), 김옥근의 『일제하 조선재정사논고』(1994), 정태현의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1996), 김인호의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 연구』(1998)가 나왔다. 또 이영훈·宮嶋博史등의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1992), 안병직 등의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1930~1945년-』(1993)가 나왔는데, 이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책들이었다. 한편 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1991), 조석곤의 『한국근대토지제도의 형성』(2003)은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 책들이었다. 또 철도와 관련해서는 정재정의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1999)가 나왔다.

또 정치·사회사쪽에서는 김진균·정근식 등의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1997)이 나왔는데, 뒤에 언급할 ‘식민지근대성’을 국내에서 처음 언급한 책이었다. 일제 말기에 대해서는 崔由利의 『일제말기 식민지배정책 연구』(1997)가 나왔다. 한편 동화정책에 대해서는 최석영의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1997), 호사가 유우지(保

坂祐二)의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2002), 고마고메 타케시(駒込武)의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1996) 등을 내놓았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징병·징용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져 왔다. 박경식은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1965)을 펴낸 바 있었고, 이후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여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朝鮮人強制連行強制勞動の記録』(북해도, 간도, 사할린편)(1974)을 펴낸 바 있었다. 또 남한에서는 김대상이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1973)를 펴냈고, 김민영이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1995)를 펴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사에서는 김동명의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2006), 마쓰다 도시히코 등의 『日本·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2009), 이형식의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2013), 前상숙의 『조선총독정치 연구』(2012) 등이 나왔다. 민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승일의 『조선총독부법제정책』(2008), 사법제도와 형정에 관해서는 문준영의 『법원과 검찰의 탄생』(2010), 박경목의 『서대문형무소-식민지 근대 감옥』(2019) 등이 나왔다. 경찰에 대해서는 마쓰다 도시히코의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2009)이 나왔다. 파시즘기에 대해서는 방기중편, 『일제 파시즘지배정책과 민중생활』(2004) 등 3권이 나왔다.

지방제도와 지방유력자 문제에 대해서는 동선희의 『식민권력과 지역유력자-도평의회, 도회 의원을 중심으로』(2011), 홍순권의 『근대도시와 지방권력·한말 일제하 부산의 도시발전과 지방세력의 형성』(2010), 김동명의 『지배와 협력 :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참여』(2018) 등이 나왔다.

경제사 분야 가운데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팀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2011), 『일제의 창원군토지조사사업』(2013), 이영호의 『토지소유의 장기변동』(2018), 崔원규의 『한말 일제초기 국유지조사와 토지조사사업』 등이 나와서 토지조사사업의 구체적인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총독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김도형의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연구』(2009), 정연태의 『식민권력과 한국농업』(2014), 이송순의 『일제하 전시농업정책과 농촌경제』(2008)이 나왔다. 또 공업정책에 대해서는 김인호의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2000),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이상희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2006)가 나왔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정병욱의 『한국근대금융연구-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경제』(2004), 최재성의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2006) 등이 있다.

문화사 분야에서는 오성철의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2000), 안홍선의 『식민지중등교육체제형성과 실업교육』(2017), 미쓰이 다카시의 『朝鮮植民地支配と言語』(2010), 수요역사연구회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1910년대)』(2005), 정진석의 『언론조선총독부』(2005), 하우라 사토코의 『神社·學校·植民地』(2013) 등이 나왔다.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에는 일제 지배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당한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고, 그 결과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제침탈사연구총서』 50권도 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총서의 필자 선정과정에서 필자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주제도 많았다. 그것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연구하지 않아 새로 연구를 진행하여 집필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이 연구자의 수가 적은 분야나 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정치사 분야에서는 조선주둔 일본군, 조선총독부의 관리와 경찰, 조선의 지방제도와 지방자치,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활동, 재만조선인 정책 등의 연구와 연구자가 크게 부족하다. 경제사 분야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수산업정책, 광업정책과 지하자원 수탈 등의 연구와 연구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사 분야의 연구는 뒤에 보는 ‘식민지근대성론’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이 많고 연구성과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문화분야에서는 대중문화 통제정책, 일본어 보급과 조선어 통제정책, 식민주의 역사학, 사상통제 정책, 총독부의 각종 조사와 통계 등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부문은 경찰, 수산업, 광업 등의 분야였다. 향후 이러한 분야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뛰어든 필요가 있다.

3. 식민지 시대를 보는 관점의 차이

식민지시대의 역사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일제의 지배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남한, 북한, 그리고 재일조선인 역사가들의 ‘반제국주의’의 입장에 선 ‘일본제국주의 비판론’ 내지 ‘반제국주의론’이다. ‘일본제국주의 비판론’(‘반제국주의론’)은 19세기 말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팽창주의, 침략주의, 군국주의를 비판함과 함께,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하여 원료와 식량의 생산기지, 상품의 독점적 판매기지, 과잉자본의 진출기지로 삼았음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다.³⁾

1950년대에 북한에서 나온 전석담·최윤규 등의 『조선근대사회경제사』(1958)는 일제는 1910년 조선을 완전 점령한 후 “(조선을) 자기의 농업-원료공급의 부속물로서 과잉 상품의 판매시장으로서, 값싼 노동력의 공급기지로써뿐만 아니라 대륙침략의 군사기지로써 군수산업의 주요 근거지의 하나”로 삼았다고 보았다.⁴⁾ 이 책에서 일제 하의 경제정책에 관해 서술한 절 제목들을 열거해보면, 1910년대에서는 점령 직후의 경제정책, 교통·운수·항만시설 및 통신체계의 확장과 정비, 일본과의 무역관계, 토지약탈 정책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업과 농업생산관계의 변화, 조선의 공업 등의 절 제목이 있다. 1920년대에서는 조선의 대외무역과 일제 자본수출의 증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와 농산물 약탈의 증대, 신용기구를 통한 농촌수탈의 강화, 농민대중의 영락과 농업생산력의 정체, 1920년대의 공업과 노동자계급의 성장 등의 절 제목이 있다. 1930년대에서는 1929년 세계공황과 일본경제의 파국, 1930년대 이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약탈적 무역과 자본투하의 증대, 농촌수탈의 강화와 농민의 궁핍 심화, 임야자원의 약탈과 임업, 수산업의 약탈, 지하자원의 약탈과 광업의 발전,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가공공업의 발전, 조선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 노동자계급의 상태 등의 절 제목이 있다.

1970년대에 일본에서 나온 박경식의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1973)에서는 강제 병합 이후 191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경제정책의 일반적 특징은 식량, 공업원료의 약탈 및 상품판매 시장으로서 식민지적 경제로의 재편성에 있었다고 보았다.⁵⁾ 또 “1927년의 금융공황, 1929년의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일본의 금융독점체제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된 반면, 물가의 하락, 임금인하, 쌀값의 저락 등 일본의 국민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일본의 지배계급은 공황에 의한 자신들의 부담을 노

3) ‘일제’라는 말은 ‘일본제국주의’의 줄임말로써,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4) 전석담 외, 『조선근대사회경제사』(1958). 이성과 현실사 복간본(1989), 97쪽 참조.

5) 박경식,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1973). 청아출판사 번역본(1986), 57쪽.

동자, 농민,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위기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조선은 ‘경기순환의 완충장치’로서 이용되었고, 그 부담은 누구보다도 조선민중에게 가중되었다. 또한 금융독점자본, 대지주 등의 대변자인 일본의 지배계급은 착취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였다.”⁶⁾ 이 책에서 서술한 경제사 부분의 장 제목을 살펴보면, 토지약탈과 식민지적 농업, 민족산업의 억압,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농민수탈, 식민지적 산업수탈(1920년대), 전쟁경제에 따른 수탈의 강화 등이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 남한에서 나온 이기백의 『한국사신론』(1973)은 1905~1910년대의 ‘일제의 경제침략과 민족자본’이라는 항목에서 토지의 약탈, 자원의 독점, 일본의 공공사업지배, 일본의 금융지배, 민족산업의 수탈 등을 서술했고, 1920년대 이후의 일제 식민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정치의 표방, 식량의 약탈, 상품시장의 구실, 중공업에의 투자, 광산자원의 약탈, 민족말살정책 등을 서술했다.

1990년대 이후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대두하면서 이들이 ‘일본제국주의 비판론’을 ‘수탈론’이라 부르면서 이를 비판하였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민간 토지의 수탈 주장은 오류이며, 일본으로의 식량의 이출도 자본주의적 기제를 통한 이출이기 때문에 ‘수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탈론 전체를 오류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비판론에는 수탈론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고율소작료율에 의한 수탈,⁷⁾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수탈이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수탈론’ 자체도 모두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식민지근대화론’이다. 1980년대 동아시아에서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이 신흥공업국으로 대두하였다. 그런데 이들 나라 혹은 도시는 과거 식민지를 경험한 곳이었다. 이에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구 식민지 지배가 전후 이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6) 같은 책, 333쪽.

7)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소작료율을 3분의 1로 정했을 때, 농민들은 큰 불만을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를 적절한 소작료율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일제 시기 소작료율이 대체로 5할 이상이었던 것은 지주에 의한 ‘수탈’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의 일부 경제사학자들(안병직, 이영훈, 김낙년, 주익중 등)도 동조하고 나서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수탈자, 약탈자로서의 일본제국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개발자로서의 일본제국주의를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일제는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근대적 제도를 도입·보급함으로써 식민지를 개발하였고, 조선인도 그 영향을 받아 자기 성장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제의 식민지개발로 인한 인프라와 한인들의 맨과 위의 성장으로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들은 또한 이른바 ‘개발을 통한 수탈’론을 주장한다. 즉 일본제국주의의 조선경제에 대한 약탈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착취’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래의 역사인식에서는 개발이라는 측면은 과소평가되고 착취라는 측면은 과대평가되어 왔다면서 조선에서도 일본자본에 의한 자본주의가 전개되고, 그에 따라 조선인 내부에서도 근대적 계급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록 그 주체는 일본자본에 의한 것이었지만 1945년 이전 시기에도 ‘자본주의의 발전’은 있었으며, 조선인도 이 자본주의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역사학계의 정재정, 정태현, 정연태, 그리고 경제사학계의 허수열 등이 비판을 하고 나왔다. 허수열은 이 이론이 “조선경제의 발전 = 조선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잘못된 등식에서 출발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식민지시기 조선농민의 농업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보다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증가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농업 ‘개발’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통해 보면 농업생산에서 조선인 몫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광공업의 ‘개발’과 더불어 조선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임금 수취로 인한 조선인 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고 보았다. 또 조선인 기업은 전시체제기를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대부분 영세규모였고, 소수의 경쟁적 분야에 몰려 있었으며, 조선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수적 증가로 인한 소득창출도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개발’을 통한 조선인들의 소득증대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⁸⁾ 허수열은 이와 같은 비판론을 주로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2005년 『개발없는 개발』이라는 책을 펴냈다.

8) 허수열, 「‘개발과 수탈’론 비판」 『역사비평』 48호, 1999년 가을호.

그 주요 논지는 일제시대 경제개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낙년, 주익중, 차명수 등이 반비판에 나섰다. 김낙년은 일제시기 일본으로의 쌀의 대량 수출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경제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거래였다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거래를 수탈이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⁹⁾ 또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제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였다. 즉 1911년부터 1940년까지 GDP를 추계해보면, 이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7%, 인구증가율은 1.3%, 따라서 1인당 소득증가율은 2.4%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러나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지 않은 가운데 식민지 조선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계산한 것이고, 또 조선인들 가운데에서도 빈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채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의 소득 격차, 그리고 조선인 내부의 소득 격차는 대단히 크게 벌어져 있었고, 따라서 평균치를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또 식민지 조선은 과연 독립된 경제단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주익중은 식민지시기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악화되어 갔다는 허수열·길인성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는 1910년대초부터 1930년대말까지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은 각각 연 2.3%, 연 1.9%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비록 곡물의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육류, 소채과실, 어패류, 장류, 가공식품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여 1인당 총 칼로리의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영양상태의 결과물이라 할 신장도 1920년대말까지는 커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식민지시기에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 그러나 그의 논증 가운데 육류, 소채과실, 가공식품 등의 소비 주체가 주로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와 같이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주장은 1930년대 후반 이후 농촌의 춘궁농가 호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던 현실과 상반된다. 당시 신문을 보면 절량농가, 춘궁농가에 관한 기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1940년의 경우, 춘궁농가는 전체 농가의 48.3%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과연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에도 경제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인적 자원의 양성과 같은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 학계의 ‘일본제국주의 비판론’ 내지는 ‘식민주의 비판론’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세 번째는 이른바 ‘식민지근대성론’이다. 식민지근대성론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한국사학계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당시 이들은 탈민족주의, 탈식민주의 등을 내건 ‘탈근대주의’(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이른바 ‘수탈론’(그 연장으로서의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을 모두 비판하고 나왔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경향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1999년 “Colonial Modernity in Korea”라는 이름의 책으로 펴냈다.

국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진균·정근식 등이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1997)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들도 역시 수탈론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은 모두 ‘근대성’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근대화는 언제가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면서, ‘근대성’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논의의 지형은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식민지시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식민지성과 근대성은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얽혀져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식민성과 근대성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면서 한국사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제국주의 지배권력은 주민들을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동시에 그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규율해가도록 요구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근대적 규율은 ‘근대적 주체’ 형성의 주요한 場들인 가족, 학교, 공장, 수용소, 병원, 그리고 군대 등에서 새로운 인간형에 각인되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들이 ‘근대의 규율’이 각인된 ‘근대적 주체’의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된 이론적 배경에는 미셸 푸코 등 근대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있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출현한 근대성은 ‘자유’와 ‘규율’

9)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농업에서의 수탈은 시장에 쌀이 나오기 이전 단계, 즉 소작료 수취단계에서 고율소작료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

10) 김낙년,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제12장 「국민계정」, 서울대출판부, 2006 ; 김낙년, 「식민지근대화 재론」 『경제사학』43호, 2007, 162~163쪽.

11) 주익중, 「식민지기 조선인의 생활수준 - 논쟁의 재검토」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 2005.

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고, 식민지적 근대의 경우 ‘자유’보다는 ‘규율’이 더 강조되는 근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정근식·공제욱 등은 이 책에 이어 2006년 『식민지의 일상 - 지배와 균열』을 내놓았다. 이 책의 서론적인 「식민지 일상생활 연구의 의의와 과제」에서 정근식은 1997년의 책이 식민지 규율권력과 근대주체의 형성 문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로 살핀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구조와 제도를 넘어 일상 속에서 근대주체의 형성 문제를 포착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일상의 영역은 의식주 외에 시간과 공간, 언어, 의식, 의례,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리고 정근식은 “일상 연구에서 핵심적 관점은 지배와 저항, 강압과 동의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제시대 일상생활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기존의 침략과 저항, 억압과 동화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본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까지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 규정된 것들 외에 일상적인 저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력과 저항 이외에 무수한 무관심과 회피, 유흥과 향락이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상을 통한 연구는 지배의 관철보다는 식민권력이나 지배층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균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식민지배의 규율권력은 완벽할 수 없고,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사학계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2006년에 출판된 『근대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탈근대주의적인 역사학의 방법론으로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과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을 제기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윤해동은 민족주의와 근대화라는 프리즘에서 벗어날 것, 식민지에는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했으므로 저항과 협력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것을 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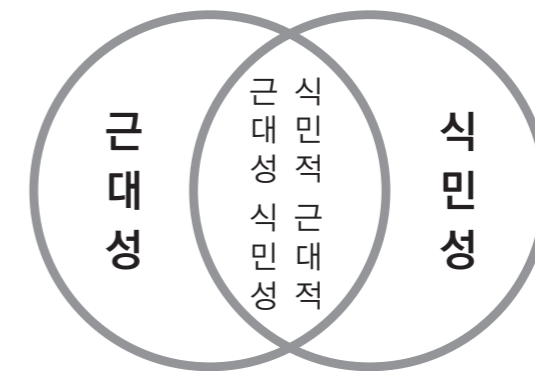
이들의 문제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으로 식민지시대를 다시 보자는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식민지시대를 ‘민족’이 아닌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족주의와 ‘지배와 저항’의 틀에서 벗어나 이 시기의 다양한 모습, 근대적인 모습을 보자는 것이었다. 이후 식민지근대성론은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여, 특히 국문학과 역사학계에서의 식민지시대 일상사, 문화사, 미시사 연구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식민지근대성론’은 앞서 본 것처럼 구 제국주의 국가의 지식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과거 ‘근대성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천착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성의 어두운 부분으로서 ‘식민지근대성’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¹²⁾ 따라서 여기에서는 식민성(coloniality), 혹은 식민주의(colonialism)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다.¹³⁾ 1990년대 구 식민지였던 한국의 지식인들도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식민지근대성론’에 관심을 갖고 이를 수용하였고, 2000년대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¹⁴⁾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족주의, 저항과 협력과 같은 틀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근대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식민지 조선사회를 다시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은 조선사회의 다양한 모습(여성, 소수자, 약자 등)은 볼 수 있었지만, 민족 간의 차별이나 혐오, 민족 간의 분리와 격차 같은 ‘식민성’의 모습은 잘 볼 수 없었다.¹⁵⁾

근대성과 식민성의 개념을 도식화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을 것이다.

〈그림 1〉 근대성과 식민성의 상관관계



12) 월터 D. 미놀로(김영주·배윤기·하상복역), 『서구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전 지구적 미래들과 탈식민적 선택들』, 현암사, 2018.

13) 도면희, 「식민주의가 누락된 ‘식민지근대성’」(Colonial Modernity in Korea 서평), 『역사문제연구』 7호, 2001.

14) 식민지근대성론의 유행에 대해서는 조형근, 「비판과 굴절, 전화 속의 한국 식민지근대성론 : 구조, 주체, 경험의 삼각구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3호, 2009 참조.

15) 2000년대 이후의 식민지근대성론에 대한 점검은 아래 좌담을 참조. 「좌담. 식민지근대성론의 역사와 현재」 『역사비평』 136, 2021년 가을호.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근대성과 식민성은 서로 개념이 다르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우리는 ‘식민지근대성’ 혹은 ‘근대적 식민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근대성에 더 방점을 두면 ‘식민지근대성’이 되고, 식민성에 더 방점을 두면 ‘근대적 식민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과 식민성 사이에는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근대성에는 식민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고, 식민성에도 근대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 즉 ‘비식민적 근대성’과 ‘비근대적 식민성’이 있는 것이다.

식민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결국 식민성(식민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근대적 식민성’과 ‘비근대적 식민성’이 포함된다. 여기서 ‘비근대적 식민성’에는 민족 차별과 혐오,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국 학계에서 크게 유행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근대적 식민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고, 이와 상관없는 ‘비근대적 식민성’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정책과 관련이 있는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이 떨어졌다.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늘어났지만, 특히 정치·경제 부문에 대한 지배정책사 연구는 여전히 가뭄 상태에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 식민지 지배정책사 연구의 방향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식민지 지배정책사 연구가 상당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연구 내지 연구자가 크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식민지근대성론’의 유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식민성보다는 근대성에 더 관심이 있는 ‘식민지근대성론’에 의지하다 보니, 식민성 내지는 식민주의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고, 이는 식민지 지배정책사 연구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식민지시기 연구는 근대성보다는 식민성에 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또 식민주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종전 후의 ‘일본제국주의 비판론’에서 계승할 부분이 있다면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1발표

조선 총독의 지배정책

전상숙
(광운대)

조선 총독의 지배정책

전상숙
(광운대)

1.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총독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총독부 지배정책의 일관된 흐름과 변화상을 일본정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정치변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지배 정책의 본질과 의미를 드러내 근현대 한일관계에 임하는 일본의 기본적인 관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종래 일면적 또는 일국사적으로 강조된 수탈과 억압의 심화요인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일본육군의 북진대륙정책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확산·수용된 일본총력전체제 구상과 실행이라는 1920~1930년대 다이쇼기에서 쇼와기로 전개되며 일어난 일본 군부와 정치세력의 제국주의정책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통치의 전제적인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조선총독이 어떻게 본국정부의 정책과 정치변동에 대응하며 통치했는지 다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각을 20세기 초 제 1~2차 세계대전으로 전개된 전지구적 근대화의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전개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정책과 전시 총력전/총동원 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여 '조선총독정치'를 고찰하였다.

이른바 '총독정치'란 식민지 국가에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의 한 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조선총독'은 현역 무관이 '일본 천황에 직예(直隸)'한 특별한

지위로서 한국지배의 전권을 위임받아 통치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갖는다. 이는 조선총독이 본국정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총독이 천황에 직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황에게만 책임지고 일본정부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않는 전제적인 통치권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이는 군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일본육군이 추진한 북진대륙정책 선상에서 이루어진 한국 ‘병합(併合)’의 추진력이자 귀결이었다. 일제의 한국 ‘병합’은 경제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한 단순한 식민지화가 아니었다. “한국이 완전히 폐멸(廢滅)하여 제국(帝國) 영토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¹⁾ 하고자 당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용어인 ‘병합’을 찾아내 활용한 것이었다. 섬나라 일본이 반도 조선을 영토화하여 대륙국가로 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발효일에 칙령 제318호로 ‘한국의 국호를 개정하여 조선으로 하는 건’을 공포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며 개항 이후 한국인의 자주적 근대 국가 건설의 지향 속에서 선포된 ‘대한제국’을 이른바 ‘일본제국’의 식민 지역 ‘조선’으로 폄하하였다. 국호 ‘조선’을 일제의 지역명으로 공식화해 사용하였다. 일제의 ‘조선’이라는 지역명은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이씨 왕조 ‘조선’과 한민족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폄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당시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조선총독’이나 ‘조선총독정치’ 등과 같은 경우에 한정해 사용하였다. 그 밖의 부분에서는 러일전쟁 전후 한국인들의 대자적인 민족의식이 각성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같은 의미에서 ‘지배’와 ‘통치’라는 용어도 ‘지배’는 한국 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통치’는 일본 정치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 지역에 대한 일본의 통치책을 언급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한 일본제국주의는 스스로 ‘일본제국’을 표방하였다. 이는 개국 이래 제국주의 서양 열강의 ‘제국’에 대한 대자적인 관점에서 문명화된 근대적 대국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 일본의 국가 상이었다.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서양 열강의 ‘제국’과의 대자적인 관점에 선 ‘제국’의 표상화는 새로운 세계상을 찾으려 화이(華夷) 관념에서 벗어난 ‘황국(皇國)’ 일본의 우월성이라는 발상이었다. 막말 이래 긴장관계에 있던 서양으로부터 민족으로서의 자립의 원리를 모색하며 추

1) 倉知鐵吉, 1939, 『倉知鐵吉氏述韓國併合ノ經緯』, 外務省調査部第四課, 11-12쪽.

진한 ‘근대화’를 서양의 우월한 ‘문명’을 담지한 ‘제국’의 개념으로 표상하여 근대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 열강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근대 일본천황제와 결합된 ‘일본제국’은 일본적 근대의 특수한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조선’ 지배의 전권을 위임받은 현역 무관 조선총독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총독부 지배정책의 일관된 흐름과 변화상을 일본정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치변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정책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글의 구성

본 연구는, 조선총독 각 시기 주요 지배정책을 20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 다이쇼데모크라시기에 정당정치와 군부의 총력전체제 구상이 대두하고, 군부의 총력전/총동원 체제구상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서 이른바 ‘혁신’을 표방하며 현재화된 일본의 정치변동을 배경으로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선총독의 일본제국주의 조선지배정책이 조선을 영구 복속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를 무단통치체제로 구축하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무단통치/통제 체제를 강화하며 민족의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상통제 강화정책으로 전개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이 글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시기를 1910년대 무단통치기, 1920년대 문화정치기, 1930년대 이후 군부 파시즘기로 분류한 것을 존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본국 정부와 조선총독이 정치적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로 길항관계를 가지며 ‘일본제국’의 대륙국가화와 성장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시행한 ‘조선총독정치’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상 1930년대 이후 일본제국주의 군부 파시즘기 곧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던 것을 두 시기로 나누었다. 일본 육군 관동군의 만주사변 도발 전후로부터 중일전쟁시기까지, 조선총독이 육군 군부와 같은 목적에서 ‘총력전체제’ 구상을 가지면서도

2) 전상숙, 2017, 『한국인의 근대 국가관, ‘민주공화국’』, 선인, 128-133쪽.

만주개발을 중심으로 한 본국과는 별도로 조선교두보관에 입각하여 ‘조선산업화’를 추진하여 ‘조선대륙전진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조선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를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가 1941년 12월 진주만과 필리핀에 공격을 가하고 본격적으로 결전체제(決戰體制)화 한 이른바 ‘태평양전쟁’시기를 또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여 조선총독의 지배정책을 고찰하였다.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것은, 두 시기의 차이를 드러내어 각 총독시기별 차이에 따른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정책이 갖는 일관된 흐름과 차이를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표방한 이른바 ‘국민’화 이데올로기 정책과 이와 병행된 ‘조선 산업화·공업화’의 의미와 영향을 전시 일본 지배체제의 총력전/총동원 체제 구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내 고찰하기 위해서였다. 앞 시기, 1930년대에 조선총독 우가키는 조선을 조공업지대로 하여 일본과 만주를 잇는 총력전체제 구상을 가지고 조선산업화를 시작하였다. 이는 후임 미나미총독의 조선병참기지화정책으로 연계되었다. 1930년대 조선총독들은 만주산업화와 마찰하는 조선산업화에 부정적인 본국 정부와 갈등하면서도 정치/정책적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조선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북진 대륙 팽창에 기여하는 조선의 지정학적인 입지를 국제적 차원에서 중시하고 조선산업개발의 정책적 의미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서 1940년대 ‘태평양전쟁’시기 일본정부는 본국에 연합군이 상륙하여 이른바 ‘내지’가 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내지를 전시체제’화하며 악화된 전시 물자동원을 위하여 식민지와 영향권역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자급자족적 광역경제권 구축 구상을 가지고 전시 총동원체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본국의 정책변화에 맞추어서 조선총독의 지배정책도 대륙전진병참기지화정책에서 더 나아가 본국의 전시체제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식민지 결전체제’화 정책, 본격적으로 명실공히 ‘전시 조선총동원체제’ 정책으로 강화되며 ‘일선동조론’에 이르는 민족말살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일본제국주의의 강제 징용과 지역적 불균형 개발, 공업화와 근대화의 시원이 되었다. 또한 ‘내선일체’와 ‘황민화’라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는, 한국인을 일본 ‘국민화’하는 조작적 지배이데올로기 정책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일본의 ‘국민’의식으로 대체하고자 했으므로 사실상 한민족 말살 정책이 되고 일선동조론이 유포되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일본 군부, 특히 육군의 북진대륙정책과 총력전체제 구상에 입각하여 전개된 조선총독정치의 변화상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선총독부관계 개정에 따른 형식상의 조선총독의 신분 변화(무관전임→문무병용) 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각 조선총독의 주요 지배정책을 드러내 고찰하고자 하였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무단통치체제를 구축한 현역 무관 총독.

1920년대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시행한 무관 출신 총독.

1930년대 일본 군부의 북진대륙침략과 조선총독의 총력전체제 구상에 입각한 ‘산업개발정책’을 추진한 총독.

1940년대 일본 본토의 전시체제화에 맞춰 조선에서도 총동원체제를 구축한 총독.

이렇게 구분한 각 시기를 다시 각 조선총독 별로 세분화하여, 같은 시기에도 조선총독 교체에 따른 정책상의 차이와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齊藤實)의 경우 1929년 8월 17일부터 1931년 6월 16일까지 제5대 조선총독도 역임했지만, 그의 재임 시기가 만주사변으로 정책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전이었고 또한 그가 시행한 ‘문화정치’의 의미와 추이를 일관되게 고찰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3대 조선총독시기와 함께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각 조선총독 시기 별 주요 지배정책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적극 참조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정치면은 위와 같이 조선총독의 지배정책 연구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연동된 시책들을 다루었다. 경제면은 지배정책의 시기 구분을 가능하게 한 상부구조적인 정책상의 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된 하부구조적인 실생활상의 변화를 야기한 경제시책의 본질을 다루었다. 사회면은, 이 글은 각 총독시기 별로 조선총독부의 주요 지배정책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조선사회의 측면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일시동인의 동화주의 시정방침에 입각하여 일본천황의 교육칙어에 준한 ‘조선인’의 ‘일본국민 만들기’를 실제 정책 수준으로 확립한 ‘조선교육령’의³⁾ 시행을 통한 조선인의 사상/이데올로기 통제, ‘일본국민화’ 지배이데올로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3) 전상숙, 2015, 「‘한국인’ 정치 참여 부재와 조선총독부의 관학을 통한 사회과학의 전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1호, 240-241쪽.

3. 조선총독의 지배정책

1910년 대한제국의 병합(併合)을 주도한 것은 일본 조슈육군벌이었다. 근대 일본 육군의 시조로 불리는 야마가타를 필두로 하여 수상 가츠라와 육군대신 데라우치를 중심으로 군사와 정치가 일치하여 한국을 병합하였다. 조슈군벌은 조선총독을 일본천황에 직예시켜서 조선총독에게 일본천황의 대권(代權)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상대적 자율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현역 무관 친임관인 조선총독에게 부여된 독특한 전제적인 자율통치권은 실질적으로 일본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함으로써 한반도를 메이지 근대 일본 육군 북진 대륙정책의 기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육군이 '대륙국가 일본제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고자 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도 '조선'을 섬나라 일본국가의 한 지역으로 공고히 복속하여 일본을 대륙과 직결시키려는 것이었다. 일본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지'로 설정된 조선은 일본이 대륙국가가 되는 초석이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육군대신 데라우치를 앞세운 한국병합은 조슈육군벌의 야마가타-가츠라-데라우치가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그 위세가 절정에 달했던 때 이루어졌다. 정치와 군사를 모두 장악한 조슈벌이 북진대륙정책을 국책으로 결정하고 내딛은 첫 걸음이 반도 대한제국의 병합이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기본 관점은 한반도가 '일본제국'의 "군비상 중요한 지점으로서 제국의 국방상 조선을 병합하지 않으면 제국 백년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⁴⁾

그러므로 일본은 1910년 사용하지 않던 '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 사용하였다. 일제는 한반도를 통해서 북쪽 대륙으로 연결된 대륙국가가 되려는 야망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조슈육군벌은 한반도에서 역사문화적 공동체로 존속해온 한국인들이 개항 이후 자주적 근대 국가 건설의 지향 속에서 선포한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의 '외지' '조선'이라는 지역명으로 바꾸어 공식화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국가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해온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를 계승한 이씨 왕조 국가 '조선'과 그 국민의 역사('조선사')를 '일본제국'의 '한 지역 조선'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었다. 조선사를 '일본제국사' 체계의 하위에 종속시켜서 조선 왕조와 민족을 폄하하는 것이었다.

4) 靑柳綱太郎, 1928, 앞의 글, 63쪽.

1911년 한국병합 직후 메이지천황의 뒤를 이어 다이쇼천황(大正天皇, 1912~1926 재임)이 즉위하였다. 다이쇼기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에 가까웠지만 기업 합병과 자본 집중으로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스미토모(住友) 같은 재벌기업이 등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맞아 침체되었던 일본 경제가 회생하고 경공업과 중공업이 발전하여 무역 흑자국이자 채권국이 되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적으로 제국주의로 성장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비판하는 '개조'사조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또한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도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여 도시 중간층과 무산계급이 성장하며 이른바 '다이쇼데모크라시' 풍조가 확산되었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교육이 확충되어,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국적인 사회, 노동, 농민 운동이 전개되고 도시 중간층이 자유주의적 민주정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25년에 25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재래의 군벌과 군벌정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정당정치가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병합 이후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조선통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영향은 조슈육군벌의 수상 가츠라가 정당세력과 제휴하여 군정가로서 명망이 높아진 육군대신 데라우치를 견제해 데라우치의 육군대신 귀임을 저지하고 전임 조선총독으로 유임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데라우치가 조선을 육군벌의 독자적인 통치영역화 하여 조선을 교두보로 북진대륙정책을 도모하는 조선총독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 영향은 정당내각 수상 하라가 3·1운동을 계기로 외지 총독의 문무병용제 관제 개정을 하고 조선을 정당세력화 하고자 전 해군대신 사이토를 조선총독으로 임용한 것이었다. 이는 군벌정치가 약화되고 정당정치가 강화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관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문관이 아닌 전 해군대신을 현직으로 복귀시켜서 조선총독으로 임명한 것으로 천황에 직예하여 군통수권을 가진 군부와 메이지 국가를 수립한 원로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두 번째 영향은 현상적으로는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정치'로 바뀌는 변화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문화정치'는 정당내각이 임용한 '전 해군대신 사이토 조선총독'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일제 조선통치정책의 이율배반성을 의미하였다. 정당내각의 내지연장주의의 문화정치를 실시한 조선총독 사이토는 실질적으로 순 무관이었다. 그는 재벌과 결합한 정당세력의 부정부패와 정당내각의 잦은 교체에 따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교체로

인하여 조선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정당세력과 정당세력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순무관인 사이토는 국방의 관점에서 조선통치의 안정성을 우선시 하였다. 그 결과 그는 조선총독의 상대적 자율통치권을 활용하여 조선을 본국의 정치변화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인 조선총독정치체제로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결국 사이토의 '문화정치'는 헌병경찰을 대신한 보통경찰을 증대하여 사실상 무단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사이토총독은 당초에 데라우치총독이 구축한 무단적 조선총독정치체제를 실질적으로 견지하며 통제를 강화하였다.

1910년대와 20년대 조선총독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총독의 특수한 권한에 의거하여 조선을 본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총독정치체제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의 재정 독립을 요하는 것이었다. 데라우치와 사이토 등 조선총독들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본국정부로부터 독립시켜서 안정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자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일본정부는 한반도 이북 만주에 더 관심을 가졌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나누어야 하는 조선의 산업개발에 반대였다. 그러나 상대적인 자율통치권을 가진 조선총독들은 독자적으로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1910~20년대 조선총독들의 조선산업화 노력은 금융공황으로 정당정치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1931년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가 조선산업화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토대가 되었다.

우가키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직후 1930년대 일본에서는 이른바 '혁신'을 표방한 관동군의 만주사변이 발생하고, 1932년 5월 15일 해군 청년장교들을 중심으로 국가개조를 목적으로 한 쿠데타가 일어나 이누카이(犬養毅)수상을 살해하는 등 사실상 정당정치가 붕괴되었다. '거국일치'를 표방한 사이토 군부내각이 들어서 군이 다시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일본정치의 전면으로 재등장한 군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부상한 총력전체제 구상과 경제공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당정치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처한 난관을 공세적인 북진정책을 실행하여 돌파하고 반재벌 반정당의 혁신 정치체제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만주사변이 시발이 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1930년대 일본 군부 북진정책의 중심은 만주를 필두로 한 한반도 이북이었다.

일본총력전체제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영국이나 미국과의 전쟁도 이겨내는 데 있었다. 우가키의 조선산업화를 통한 일본해(동해)의 세토나이카이화 총력전체제 구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을 총력전체제의 핵심으로 위치지운 우가키의 구상은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 만주의 산업개발을 통한 일만지 엔블록의 자급자족적 경제권역을 추구하

는 1930년대 혁신 세력과 차별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만주의 산업화와 마찰을 일으키는 조선의 산업화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 우가키는 자신의 총력전체제구상에 입각한 조선산업화를 통해서 정치적 역량과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우가키의 조선산업화 정책은 본국의 총력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선통치를 통해서 일본의 총력전체제 구축을 사실상 준비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일본총력전체제 구축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문화정치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미나미총독은 일본정부의 경제통제를 원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조선의 특수성'을 근거로 조선총독의 자치통제에 의한 조선산업화를 일본정부가 원론적으로 인정하게 하여 길항관계 속에서 조선공업화를 지속하였다. 그리하여 혁신세력의 몰락을 배경으로 조선병참기지정책을 선언하고 전시 조선공업화를 강화하였다. 미나미총독의 조선공업화는 우가키총독의 조선산업화를 전시적으로 재편한 것이었다. 미나미의 병참기지정책은 조선이 일본 총력전체제의 총후로서 중요 물자를 동원하는 배후지로 기능하게 하였다.

1930년대 조선총독들은 '거국일치'를 표방한 사이토 군부내각의 수립을 계기로 새로운 군부세력이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하자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군부에서 확산된 일본총력전체제 구상에 입각하여 본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조선산업화를 추진하였다. 1930년대 전반 우가키총독의 조선산업화는 사실상 일본총력전체제의 구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적으로 재편한 1930년대 후반 미나미총독의 조선병참기지정책의 전시 공업화정책은 일본정부가 구축하는 총력전체제에 조선총독이 솔선해서 일본총력전체제에 기여하는 전시 산업체제를 갖추어 조선의 입지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미나미총독의 병참기지정책과 조선신체제 천명은 일본혁신세력이 주창한 공익우선 반독점 일본신체제의 대동아공영권 총력전체제에 대하여, 친자본 반공 황도주의에 입각한 복고적 국가주의 조선신체제를 천명하고 일본독점자본과의 전시 조선공업화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는 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관료가 몰락하고 군부파시즘체제가 황도주의의 국가주의로 귀일한 것과 기초를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본국의 총동원체제에 병참기지정책을 통해서 솔선적으로 기여한 미나미총독의 조선신체제는 조선을 만주와 병렬적으로 위치지우고 전시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것이 일본정부가 내지의 결전을 준비하며 대동아공영권의 내용을 수정하여 외지 조선을 내지와 같이 취급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대 고이소총독이 식민지 조선을 결전체제화 하여 일본총동원의 물자

동원 요구에 부응하는 기반이 되었다. 일본은 패색이 짙어지자 '군수성'을 설치하여 일본 국내방위체제 정비와 군수생산 확충에 집중하며 식민지 조선에 대한 물자동원 요구를 증대하였다. 이에 고이소총독은 조선을 결전체제화 하여 본국의 물자동원 요구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조선을 수탈하였다. 고이소총독 시기에 식민지 조선은 공식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본의 전시 물자동원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후임 아베총독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을 인정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최후의 유일한 물동지로 기능하였다. 1940년대 조선총독들은 조선의 물자동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결전체제를 유지하며 남김없이 동원하였다.

4. 맺음말

역대 조선총독들은 모두 무관이었다. 그들은 1910년대 조슈육군벌에서 1920년대 정당정치기의 전 해군대신 사이토를 거쳐서 쇼와군벌을 대표하는 우가키, 그리고 우가키별로 분류되던 군인들이었다. 근대 일본제국 육군의 창설자이자 교육칙어를 제정하고 육군의 북진대륙정책을 국책으로 만든 야마가타를 정점으로 한 조슈육군벌은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 천황제 일본제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정립하고 한국을 복속하여 만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일본을 대륙의 제국으로 만들고자 한 메이지 일본의 핵심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조슈육군벌은 다이쇼기의 변화를 주도한 데모크라시 풍조 및 육군대학 출신의 대두와 함께 데라우치의 사망을 끝으로 사실상 맥이 끊겼다. 육군대학 출신 신세대 군부를 대표하는 다나카 육군대신은 데라우치의 후임 조슈벌의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당 세력과 제휴하여 대륙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나카의 눈에 띄어 군정가로 성장한 우가키를 필두로 육군대학 출신 쇼와군벌이 조슈벌을 대체하였다.

쇼와군벌을 대표하는 우가키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루며 확산된 총력전체제의 자급적 경제권 구축과 거국일치체제 구상을 갖고 일본이 영·미와도 필적할 수 있는 '대륙의 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가키는 육군대신으로서 자신의 총력전체제 구상에 입각하여 군제를 개혁하고 현대화하여 새로운 쇼와군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혁신적인 청년장교들의 신망을 얻은 우가키는 조슈육군벌의 직계인 다나카가 발탁하여

군정가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번벌세력 및 재벌과 인연이 깊었다. 이 인연은 우가키가 일본정부와 갈등하면서까지 조선을 조공업지대화하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

자신을 옹립하려 한 3월사건을 유산시키고 사이토의 후임 조선총독을 자청한 우가키는 러일전쟁 당시 주목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신해혁명을 계기로 작성했던 조선주둔 2개사단증설주장의견서에서 일찍이 조선의 대륙진출 전진기지 확립을 주창했었다. 그는 조선의 민족항일운동을 억압하고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가키총독의 조선통치는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리하여 우가키총독이 자신의 총력전체제 구상에 입각하여 실시한 농공병진의 조선산업화는 미나미총독의 병참기지화를 위한 전시공업화와 육군특별지원병제 및 1944년 조선인징병제 시행으로 이어져 고이소총독이 조선을 결전체제화하고 아베총독이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우가키는 일본 총력전사상의 원형이자 실현자라고 평가된다. 이는 조선을 조공업지대로 한 일본총력전체제 구상을 갖고 이를 실현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가키총독이 조선인의 민족항일을 억압하며 조선산업화를 통해서 자신의 총력전체제 구상을 현재화하기 시작한 것이 우가키군벌로 알려진 미나미와 고이소, 아베 총독으로 이어지며 조선을 일본총력전 최후의 물동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우가키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조선산업화는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 일본의 전황이 악화되며 반도 조선이 일본총력전의 주요 물동지에서 유일한 물동지로 기능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 결과 일본정부가 외지 조선을 내지와 같이 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을 병합을 단행한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의 조선총독정치체제 구축에서부터 1920년대 사이토총독의 문화정치, 1930년대 우가키총독의 농공병진정책과 이후 1940년대로 이어진 미나미총독의 대륙전진병참기지정책의 전시공업화, 그리고 1940년대 조선식민지총동원정책을 통시적으로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천황에 직예한 조선총독의 상대적 자율통치권이 조선총독정치체제의 특질을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제 조선지배정책의 기본입장이 '일시동인'주의→내지연장주의→내선융화→내선일체→황국신민화로 이어지며 한국인에 대한 '일본국민화', 일본국민의식을 강제한 민족말살정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민족을 일본국민화하여 말살하는 통치이데올로기정책은 일본천황에 직예하여 형성된 조선총독정치체제의 특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천황에 직예한 조선총독의 상대적 자율통치권은

대륙정책과 총력전체제의 조선교두보관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일제 무관 총독의 조선통치에서 ‘국방’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국방’과 ‘국민화 통치이데올로기’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산업화를 실시한 우가키의 총력전체제 구상은 한국을 병합한 일본육군 군부의 국방관에 입각한 북진대륙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에 비해서 대표적인 우가키군벌로 평가되는 미나미총독의 조선공업화는 우가키를 ‘혁신’의 대상으로 본 혁신 청년장교들의 통제파와 제휴하여 북수남진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1930년대 이래 일본정치변동을 배경으로 조선총독들의 일본총력전체제 구상에는 차이가 있어도 조선총독정치의 조선교두보관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근대 일본천황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쟁에 조선은 최후의 물자동원지로 기능하며 남김없이 동원되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정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식민지시기에 일어난 양적 경제지표 변화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그 성과가 근원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경제적 성장의 목적과 이익의 주체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식민지시기 양적 경제지표의 성과를 낸 식민지배자의 정책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하여 동원된 피지배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과 생활조건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조선총독정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라는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제2발표

일본군 연구와 지배정책

신주백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일본군 연구와 지배정책

신주백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일본군 연구와 지배정책

-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운영>>
과 관련 지어

목 차

1. 군사사 연구성과
2. 연구총서 소개 - 특징과 의의
3. 연구과제

1. 군사사 연구성과

- 연구 제한성 : 자료의 제약 / 연구주제의 주변취급
=> 2000.1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개설
- 논문 : 21세기 들어 연구 활발(신주백, 조건)
지역 연구와 군사연구 : 용산, 진해, 부산
박사논문 : 조건⁽¹⁵⁾, 김윤미⁽¹⁵⁾, 김상규⁽²²⁾
- 일본 : 이승희^(06->08), 신창우⁽⁰⁸⁾, 마쓰다 도시히코⁽⁰⁹⁾
- 70여년사 전체의 흐름을 정리. 기초 築城

2. 연구총서 소개 - 특징과 의의

• 구성

- 1부 침략과 지배의 터를 닦은 주차군(1882~1918)
- 2부 조선군, 상주하는 주둔군(1918~1931)
- 3부 15년전쟁에 나선 조선군(1931~1944)
- 4부 제17방면군, 마지막 버티기와 패전(1945)

- 편제 : 공사관수비대 -> 청일전쟁 -> 한국주차대사령부 -> 조선주차군 -> 한국주차군 -> 조선군 -> 제17방면군 및 조선군관구
- 각 시기 주요 침략 행동 검토 : 동학농민군 탄압, 의병 탄압, 한국병합 / 헌병경찰제 / 3.1운동 탄압 및 간도침략과 국경경비 / 만주침략, 군수동원, 예비군사교육 및 징병제 / 병사노무동원, 전후처리

• 특징

- '군'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사를 접근.
=> 일본의 침략방식과 침략과정, 일본군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제노사이드, 군수동원 구조와 병력동원을 해명
- '편제'의 변화를 종횡의 관계(규정과 역규정) 측면에서 정리
=> 군과 공사관, 통감부, 총독부와의 관계
=> 군과 본국 및 피지배지역(관동군)과의 관계에도 주목
- 제국의 대외정책과 조선군의 위상 및 역할에 주목
=> 대륙침략 거점 마련 -> 상대적 협조외교 -> 고립외교 및 전쟁
=> '隊' -> '軍'(주차->주둔) -> 上肥下弱 구조 -> 작전군과 군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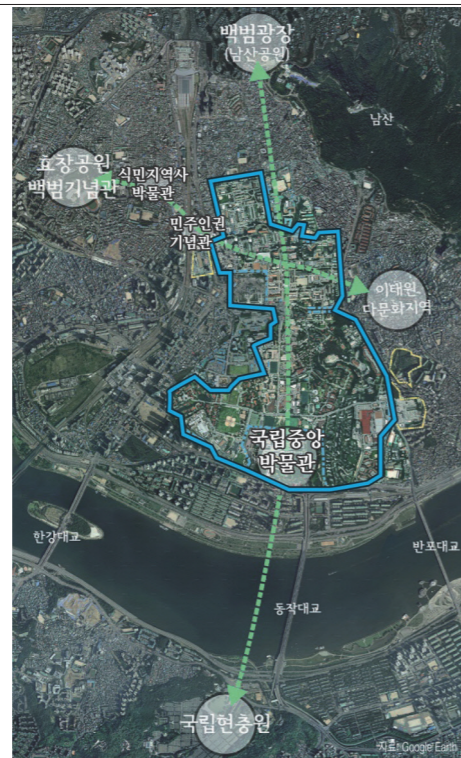
3. 연구과제

- **군**
 - 실증 연구: 인물, 편제
 - 미세 연구: 저항과 군사 작전, 광폭 연구: 전쟁과 기능
 - 횡적 연구: 군과 통치(기구)
- **지배정책**
 - 통치체제의 구축과 주차군
 - 대외정책, 특히 對中政策(戰略)과 조선군
 - 군수동원과 조선군
 - 1945년과 군

제3발표 일제의 농업생산정책

이영학
(한국외대)

- **군과 기념, 기억**
 - 군사 유적과 기억, 역사교육
 - 군사 유적과 공원화



일제의 농업생산정책

이영학
(한국외대)

1. 학계 연구 동향과 쟁점

1) 연구사 정리

한국사 연구에서 일제시기 일제의 농업정책에 대한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1970년대 한국사학계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부각하면서 일제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은 ‘수탈을 위한 측량’이었으며,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은 ‘수탈을 위한 증산’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1980년대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사학자들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의 등장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근대화를 가져온 전환기적 사업이었으며,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사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한 논쟁의 시발점은 19세기 말로 올라간다. 19세기 말 일제의 관학자와 관료들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침략해 들어왔다.¹⁾ 그러한 논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일본

1) 강진철, 1986, 「일제 관학자가 본 한국사의 '정체성'과 그 이론」, 『한국사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의 근대적 경제학자인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1874~1930)이었다. 후쿠다는 서구의 경제학을 일본에 도입·소개한 경제학자로서 독일 라이프찌히대학과 문헌대학에 유학한 뒤 귀국하여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과 동경상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1902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1904년에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사정을 언급하였다. 그는 그 논문에서 조선의 농업기술은 극히 유치하고 수확량은 매우 적으며, 19세기 중엽까지도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독립자영의 수공업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조직은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20세기 초 사회경제 상태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1천 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것이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필수조건인 봉건제도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유력한 힘이 작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였다.

그의 논리는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등 식민정책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관리들과 고쿠쇼 이와오(黒正巖),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카츠미 모리타니(森谷克己),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등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이론적으로 이끌었던 학자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선사회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경성제대 교수인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1900~1973)이었다. 그는 조선사회는 토지국유제하의 소작관계에 의해 농민이 궁핍하였고, 농사의 개량이 없었으며, 농구가 부족하거나 발달하지 못하였고, 지주계급이 농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농민의 근로의욕이 부족하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조선의 농업은 생산력이 낮았으며 자본집적이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조선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관학자들은 조선의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으며, 일본에 비해 1천 년이나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대사회를 이룩할 수 없어서 주변 나라의 힘을 빌려야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 역할을 일본이 담당하였던 것이고, 조선은 일본에 동화되어야만 근대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었다는 ‘조선사회 정체성론’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사회 정체성론’은 일제 시기는 물론 해방 후의 한국사회에서도 절대적

2) 이영학, 1987,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현황」, 『한국 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한울, 20~22쪽.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1960, 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역사학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조선후기 이후 일제시기의 경제사 연구가 심화되고 일제의 식민사관은 점차 극복되어 갔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를 경험하였던 제3세계의 국가들은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사회가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만히 발전해오고 있었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러한 점진적 발전이 왜곡 좌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으로 이론화되었다.

반면 1960년 4.19 혁명은 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민족문제, 통일문제 등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역사학계에는 ‘민족사학론’이 제기되고,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한 움직임은 한국사 연구에서 ‘시대구분논쟁’, ‘자본주의맹아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³⁾

‘자본주의맹아론’은 조선후기 경제가 세계사적으로 봉건 사회 후기의 형태로, 농촌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싹이 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시대구분논쟁’은 1970년 경제사학회가 주관하는 전국역사학대회 주제로 선정되어 역사적 단계 설정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과 사회성격 등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역사적 단계 및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였다.

1970년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조선 경제사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적 생산력을 지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부문에서는 김용섭의 연구가 두드러졌다. 그는 내재적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조선시기 경제사를 체계화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 발전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는 논에서 벼의 파종법이 직파법으로부터 이앙법으로 전환됨과 아울러 수전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밭에서는 밭작물의 파종법이 농종법으로부터 견종법으로 전화되어 노동력의 절감과 수확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였다.⁴⁾

김용섭은 조선후기 사회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어 1인당 경작가능면적이 확대되었고, 이를 토대로 18세기에는 광작이 성행하여 그 결과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되는 농민층분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즉

3) 이영호, 1994, 「해방 후 남한사학계의 한국사인식」, 『한국사』 23, 한길사.

4) 민성기는 밭에서는 견종법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후기 농촌 사회는 농민층분화 현상 속에서 경작 가능면적의 확대, 상업적 농업의 경영, 임노동의 고용 등 근대적 농업 경영을 추구하는 부농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 하나의 변혁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북한의 역사학계도 1960년대의 최대 과제는 한국사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을 검증하는데 있었다. 그 결과물이 역사학계의 공동 연구 성과로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전석담·허중호·홍희유, 1970),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김광진·정영술·손전후, 1973)이라는 저서로 출간되었다. 전자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쳐서 상품화폐관계의 광범한 전개에 의하여 농민층 분해와 지주로부터의 분리, 상인의 화폐축적 등 자본주의 발생의 전제조건 내지 역사적 전제가 준비되고, 19세기 중엽에는 급속히 하나의 경제형태로까지 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전제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후자에서는 19세기에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해갔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재적 발전론에 의한 경제사 연구는 조선사회는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맹아가 발생하는 등 역동적 사회이며, 자주적 근대화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세 특히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근대화의 가능성은 왜곡 좌절되었다고 파악한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생산력 발전이 제약되고, 그 성과물은 일제에 의해 수탈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론을 ‘식민지수탈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식민지수탈론’의 역사인식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도전받고 있다. 국내의 일부 경제학자들과 미국 및 일본의 한국사연구자들이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식민지수탈론’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의 연구자는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일제는 한국을 수탈한 측면도 있지만, 개발 혹은 근대화를 이룬 측면도 있다는 주장한다.

이들은 식민지 개발자로서의 일제를 주목한다. 일제는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근대적 제도를 도입·보급함으로써 식민지를 개발했고, 한인도 일제의 개발에 자극받아 근대적 기술과 제도를 적극 수용해갔다고 파악한다. 그 결과 한인은 근대적 역량을 축적하여 주체적으로 자기 성장을 도모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식민지 상태에서도 주체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민족해방 없이는 민족경제의 예측과 파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식민지수탈론’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경향은 조선후기부터 일제시기의 경제사 연구에서 출현하였으며, 나아가 한국 현대경제의 평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대표적 주창자는 안병직이다. 안병직은 1970년대 말까지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일본을 연구차 방문한 후 교토대학(京都大學) 나카무라 사

토루(中村哲)의 영향을 받으면서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경제의 1960, 1970년대 고도성장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연원을 고찰하면서,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조선은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근대적, 자본주의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1960, 1970년대 자본주의적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⁵⁾ 그리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일본의 교토대학(京都大學) 교수인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는 1970년대 중반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국자본주의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몰두하게 되었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4개국이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달성한 요인을 검토하면서, 그 공통점으로 식민지의 의미를 음미하게 되었다.⁶⁾ 그들 네 나라가 다 같이 식민지였으면서도 다른 독립국가였던 나라들보다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공통점은 4개국이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 외에 첫째 식민지화에 의하여 구사회=전근대사회 경제구조가 철저히 파괴되고 해체되었다는 것, 둘째 그 위에 본국에 종속하는 경제구조가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보다 깊이 만들어졌다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본국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가 급속하게 발달하였다는 것인데, 한국과 대만이 특히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바로 이러한 점들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중요한 역사적 조건의 하나’였다고 주장하였다.⁷⁾ 즉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 구체제가 철저히 파괴된 것이 고도의 근대적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서도 일제하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전통사회가 철저히 파괴되고 근대적인 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 한국사회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고자 하는 취지에

5) 안병직, 1995,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과 근대사연구」, 『제3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6) 中村哲, 1991, 『세계자본주의와 이행의 이론』(안병직 역, 비봉출판사, 1991).

7) 이만열, 1997,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서 연구를 시작하여 그것의 역사적 기원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즉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자본주의 형태가 갖추어졌거나, 자본가들이 출현하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차이는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후기 사회도 달리 파악하였다. 먼저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조선후기의 경제상황을 생산력의 발전 등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갔다고 파악하는 데 반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18세기까지는 생산력의 발전 등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갔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생산력의 정체와 사회체제의 위기를 겪었다고 파악하였다. 즉 19세기의 조선에는 토지생산성과 임금 수준 및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갔다고 파악한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삼림의 황폐화, 불안정한 재산권제도, 제언의 붕괴, 국가 통합능력의 이완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파악한다. 즉 18세기의 조선후기에서는 토지생산성과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생활수준이 계속 하락되어 갔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사망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인구의 감소 내지 정체로 말미암아 조선 국가의 경제능력은 점차 소진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⁸⁾

개항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차이를 드러낸다.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조선후기에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갔고, 개항 이후에도 경제적 근대화를 서서히 이루어가고자 하였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침탈 속에 근대적 지향이 좌절되었다고 파악한다. 반면에 식민지근대화론의 입장에서는 조선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사회로 발전해갈 수 없다고 파악한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새로운 동력은 내부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1876년 개항 이후 외부에서 출현한 것으로 파악한다. 내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갈 동력이 소진하게 된 후, 개항으로 인하여 외부 자본주의세력이 조선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보는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한 조선의 강제 병합은 정치적으로는 침탈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활로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제하 식민지 시기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누어진다.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일제의 식민농정에 의해 개항 이후의 근대적 발전이 왜곡·좌절되었다고 평가하는

8) 이영훈편, 2004,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 이영훈편, 2001,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 안병직편, 2001,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출판부. ; 이대근외, 2005,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

반면에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 측면보다는 근대화 측면을 강조하는 성과를 주로 제출하고 있다. 1930년대 농업생산력의 발달, 공업화의 전개 등은 조선사회의 근대화를 추동하였다고 한다.⁹⁾ 후자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농촌·농업 개발과 한국 농민의 자기 개발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일제의 농업정책이 한국의 농업·농촌을 수탈해가는 측면보다는 농업 발전과 농민 성장을 촉진한 측면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일제시기의 경제성장이 한국 현대의 자본주의를 이루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이와 같이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후기부터 일제시기뿐 아니라 현대에 걸친 한국 역사의 노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심도있는 실증작업을 바탕으로 양 이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이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쟁점

일제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조선의 농업을 재편해갔다. 일본의 농업은 우월하였고, 조선의 농업은 계도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권업모범장과 종묘장 등을 통하여 일본의 개량 품종을 전파하는 시도를 행하였다.

통감부시기와 1910년대는 일제의 벼 품종과 육지면 등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리고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증산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해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1929년 세계대공황에 의해 미가가 폭락하면서 1934년 산미증식계획이 중지되었다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 식량의 충족을 위해 1939년에 다시 조선증미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 농업생산정책의 추진 내용 중 그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910년대 중점을 두었던 일제의 우량 벼 품종의 도입에 대한 평가이다. 1910년 전후 일본의 논 생산력은 조선의 그것보다 1.5~2배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의 벼 품종을 조선에 들여와 이식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생산력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12년에 일본 벼 개량품종의

9) 조석곤, 2003,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10) 안병직, 1997, 「한국근현대사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 비평』, 97, 창작과 비평사.

식부면적은 논 2.2%에 불과했는데, 점차 증가하여 1915년에 19%, 1919년에 46.8%, 1921년에 54%로 급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했고, 수확물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쌀의 상품화를 이루기도 용이하였다. 1912년 당시 조선의 재래 벼 품종은 1,450종 정도 존재하였다.¹¹⁾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 개량된 일본 벼 품종 6개 종류를 이식하였다.

반면, 이렇게 몇 종류의 일본 벼 개량품종을 식부하자,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생기면 벼의 자생력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벼 도열병과 병충해로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기도 했고, 가뭄이 들었을 때 조선 재래종보다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일본 개량품종은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비료를 충분히 뿌려줄 때 생산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서는 수리시설을 갖추고, 비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

1912년 당시 1,450종이던 조선의 재래 벼 품종은 1920년대에 4백여 종으로 줄었으며, 1935년경에는 수도(水稻) 12개 품종, 육도(陸稻) 13개 품종, 건답도(乾畚稻) 29개 품종만이 겨우 남게 되었다. 조선 재래의 벼 품종은 지형적·기후적 특징이 남아있는 지방 또는 지대에서만 계속 재배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²⁾ 조선에는 빗물에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畚)이 많았기 때문에 재래 벼 품종은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서 가뭄에 강하거나 혹은 가뭄에도 모를 낼 수 있도록 개량되면서 발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벼 품종과 일본의 농법을 조선에 이식하는 것이 과연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두 번째,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평가이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농업생산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미증식계획이다. 일제의 『시정 25년사』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은 쌀의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조선 농업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일제시기 이후 1960년대까지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근대농법이 한국의 재래농법을 시정하면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가 축적되면서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

게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로 농업생산력이 증가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①수리시설이 확대되면서 관개면적의 혜택을 받는 농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리조합비 등 제 비용은 농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②일본의 우량품종 식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 우량품종의 식부면적이 1912년 2.2%, 1920년에 51%, 1930년에 70%, 1940년에 91%로 급증하였다. ③시비량이 늘었으며, 그 결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의 부정적 측면도 크게 나타났다. ①한국의 농업구조가 미곡을 중시하는 수전농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미곡 단작화 농업지대로 재편되었다. ②벼·품종이 몇 개의 우량품종으로 교체됨으로써 상품화에는 유리하지만 농학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단일품종으로 식부되어 수확된 벼는 판매하기에 좋고 특히 일본 시장에 판매되어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가뭄과 병충해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었다. ③조선의 전통농법 혹은 재래 품종이 축소되거나 소멸되었다.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일본 관료들은 일본의 근대식 농법 및 품종은 우수한 것이고, 조선의 재래식 농법 및 품종은 열등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농법을 조선에 이식하는데 몰두하였다. 농법과 품종은 몇천 년 동안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개량되어 온 것인데, 그것이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 행하는 것으로 축소되거나 소멸되었다. 예를 들면, 비가 오지 않을 때 마른 논에 이앙을 하는 건양법(乾秧法)이라는 농법은 소멸되었다. 비가 오지 않을 마른 논에 직파하는 건도(乾稻) 등의 품종은 소멸하였다. 나아가 일제시기에 한전은 경시되었기 때문에 한전의 품종과 한전재배기술이 소멸되거나 위축되었다. ④증산된 쌀이 대부분 일본에 수출됨으로써 조선 농민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조선농민의 노동 강도는 강해졌지만, 부담해야 하는 수리조합비와 세금 등의 공과금 증가로 인하여 지주와 일부의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 농가는 경영수지가 적자였고, 채무도 누적되어 갔다.

그리하여 농촌사회는 전반적으로 피해해갔으며 대부분의 농민(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은 몰락하였다. 자작농과 소작농은 자신의 토지를 방패할 수밖에 없었고, 지주들은 그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소유를 확대해갔으며, 대토지소유자는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인 대지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소작지는 더욱 확대되어 갔으며 소작조건은 소작농에게 불리해지면서 지주의 권한이 커졌고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농가의 경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1920년대 후반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폭증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소작농들을 위무하면서 농민

11)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1913, 『朝鮮稻品種一覽』.

12) 김도형, 2009,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연구』, 한국연구원, 401~403쪽.

들을 안정시키는 농촌진흥운동 및 농가개생계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 번째, 일본식 근대농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평가이다.¹³⁾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영훈, 안병직, 박섭 등은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추진된 일본식 근대농업의 발전방향은 조선 농법의 발전 방향과 기술적으로 공통된 지향을 지닌다고 평가하였다.¹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이식하려고 한 일본식 근대농법이 조선에 잘 착근되어 조선의 농법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제시하였다. ①조선은 일본과 비슷한 기후이며, ②한국 농민의 경영규모가 일본 농민과 거의 같으며, ③수전농업의 비중이 50%를 넘어 미작농업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농민은 조선총독부가 도입하는 다비다로(多肥多勞: 비료를 많이 주고 노동력을 많이 투여)한 일본의 미작농업기술을 이해하기 쉬워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밭농사 기술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¹⁵⁾ 일제의 근대농법은 ‘수탈을 위한 증산’ 혹은 ‘수탈을 위한 근대화’의 수단으로, 즉 조선의 재래농법과 일본의 근대농법은 완전히 다른 기술체계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시기의 농업개량정책은 조선의 농업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일본식 농법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식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농업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농법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3] 안승택, 2009,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신구문화사, 364~371쪽.

14] 이영훈, 1996,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21; 안병직, 1997,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사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25(4); 박섭, 1997,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일조각; 박섭, 2004, 「식민지기 한국의 경제성장: 제국주의정책과 식민지민의 상호작용」,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백산서당.

15] 김용섭, 1972, 「한말·일제하의 지주제: 사례1 강화 김씨의 추수기를 통해서 본 지주경영」, 『동아문화』 11(김용섭, 1992,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재수록); 안승택, 2009,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신구문화사; 堀和生, 1976, 「日本帝國主義の朝鮮における植民地農業政策-1920年代植民地地主制の形成」, 『日本史研究』 171(堀和生, 1983,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 농업정책」,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재수록); 河合和男, 1979, 「『産米増殖計画』と植民地農業の展開」, 『朝鮮史叢』 2(河合和男, 1983,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 농업정책」,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재수록)

2. 총서의 특징 및 의의

『일제의 농업생산정책』은 일제하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서술한 개설서이다. 이 분야의 연구업적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이 개설서는 출간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특히 김도형, 정연태, 이송순, 松本武祝, 河合和男 등의 연구업적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이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일제의 농업생산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제의 농업생산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개항기에는 조선 정부의 농업정책을 살펴 보았고, 통감부 시기 이후 일제의 농업생산정책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어 특징을 부여하며 정리하였다. 통감부시기에는 일본인들의 광범위한 조선 농업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일본 농상무성에서 관료와 도쿄제국대학 농학과 교수를 파견해 조선 8도의 농업사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게 하여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1906)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이토 통감은 대한제국 정부가 농업의 근대화를 위해 설립하려고 했던 농사시험장을 저지하고, 일본인 관료와 경비로 권업모범장을 설립하여 대한제국에 이양한 뒤 다시 인계받아 일본의 명치농법을 실험하여 조선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면서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예산 중 30%~40%를 헌병경찰 유지비용에 사용하고, 사회간접자본에 30~40%를 지출하여 산업진흥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20~30%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 몇 부문에 한정하여 농업 부문에서는 미작, 면화, 양잠의 종자 개량을 추진하였다. 장차 조선 쌀을 증산하여 일본에 이출하고, 면화와 양잠을 증식하여 일본 자본가의 원료로 충당하고자 한 의도였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1918년 일본 본국에서 ‘쌀소동’이 일어나고, 일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본은 만성적 쌀 수입국이였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 쌀을 증산하여 일본으로 이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의 농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수리시설이 확대되면서 관개면적의 혜택을 받는 농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본의 우량품종 식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비량이 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나타났다. 한국의 농업구조가 미곡을 중시하는 수전농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미곡 단작화 농업지대로 재편되었으며, 조선의 전통농법 혹은 재래품종이 축소되거나 소멸되었고, 증산된 쌀이 대부분 일본에 이출됨으로써 조선 농민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조선 농민의 노동 강도는 강해졌지만, 수리조합비와 세금 등 공과금의 증가로 인해 지주와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선 농가의 경영수지는 적자였고, 채무도 누적되어 갔다. 그리하여 농촌사회는 전반적으로 피폐해 갔으며 대부분의 농민은 몰락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이 진행된 결과 소작지는 증가하고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면서 소작 기간의 단축, 소작료율의 상승, 소작인의 공과금 인상 등 소작조건이 악화되었다. 1920년대 후반 농민층이 전반적으로 몰락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소작쟁의가 폭증하였다.

1929년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 자본주의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 농림성과 일본 지주들은 조선과 대만에서의 쌀 수입이 일본 미가를 더욱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보았다. 1933년 대폭작으로 일본과 조선의 쌀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선미가 일본에 들어온다면 일본 미가의 큰 폭락을 가져올 것이란 이유로 일본 정부가 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자 조선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 대신 농촌 경제가 피폐해 가는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농업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전작개량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농가 경제 수지는 악화되고 부채는 누증되면서 1920년 후반부터 농민의 소작쟁의는 격렬해졌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농가갱생계획' 혹은 '농촌진흥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농촌재생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37년 일제는 중국 본토를 공격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전쟁 상태로 돌입하였다. 1940년 동남아시아 침략, 1941년 하와이 침공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되었다.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과 조선은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체제로 재편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한 군량미의 확보와 노동력의 차출은 가장 긴급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39년에 '조선증미계획'을 마련하였고, 대가뭄이 발생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940년에 다시 실시하면서 경종법 개선에 의한 증산에 치중하였다. 1939년에 1,400만 석의 수확량에 그쳤지만, 1940년과 1941년에는 각각 2,153만 석과 2,489만 석을 수확하여 겨우 평년작에 도달하였다. 1940년의 조선증미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941년 일본에서 대흉년이 발생하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식량 증산이 긴급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2년에 '조선증미갱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지만, 전시체제로 인한 농촌 노동력과 자재 부족 및 비료의 부족 등과 함께 대가뭄이 겹치면서 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70%에 해당하는 1,600~1,800만 석 정도의 쌀 수확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였다.

둘째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지배의 목적이 식량·원료의 공급기지 구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당시 일본은 1년에 인구가 70만 명씩 증가하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려 매년 600~900만 석의 미곡을 수입하는 만성적 쌀 수입국이였다. 이 부족분을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에서 충당하려고 하였다. 조선이 식량의 공급기지란 사실은 1910년대 미작개량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4년 산미증식계획의 중지, 1939년 조선증미계획의 실시 등을 중심으로 미곡생산의 추이와 이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료의 공급기지는 육지면의 재배와 양잠의 품종 개량과 증산으로 구현되었으며, 일본 자본가 공장의 원료로 공급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셋째, 조선총독부의 농업생산정책은 명목적으로 조선인의 식량 수급과 농촌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본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과 이익을 위해 추진하였다는 점을 밝히려려고 하였다. 1910년대 벼 품종 개량은 일본 시장에서 쌀을 상품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면화와 양잠의 품종 개량은 일본 자본가 공장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서구로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권장되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1918년 일본의 '쌀소동'으로 촉발된 일본 본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실제로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증산된 생산량보다 더 많은 미곡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1934년에 산미증식계획이 중지된 것도 일본 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에 의해 일본의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조선에서 이출되는 쌀이 쌀값을 더욱 폭락시킨다는 일본 지주와 농림성의 주장에 의해 일본 내각이 조선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자 조선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940년의 조선증미계획도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 1940년 동남아 침략, 1941년 하와이 침공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물자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농업생산정책은 조선 내부의 요구보다 일본 본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3. 앞으로의 과제

먼저 조선 농업의 내재적 발전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개항 이후 조선 정부가 실시해왔던 농업생산정책이 통감부 시기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①조선정부가 추진해왔던 개간정책이 처음에는 관 주도 농상회사 설립으로부터 대한제국 시기에는 민간 주도 농상회사 추진으로

변화되어 갔는데, 통감부 시기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조선 정부의 근대농사시험장의 변화 양상을 더욱 세밀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1884년 농무목축시험장이 설립되었고, 최경석과 제프리의 죽음 이후 공내부 종목국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1894년 이후의 종목국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나아가 1905년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근대 농사시험장이 통감부의 권업모범장의 설립으로 좌절되면서 권업모범장에서 실험한 일본의 명치농법이 어떻게 조선 농업에 적용되어 갔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③조선의 개화 지식인들이 서양의 농학을 소개하기 위해 농서를 간행하여 조선농민에게 보급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제의 조선 병합 후에는 개화 지식인의 농서 간행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제하 식민지 시기의 농서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 담당자들은 일본의 개량농법이 조선의 재래농법보다 매우 우수하므로 일본의 선진적 농업기술을 조선에 그대로 이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초기에 정책 담당자들은 일본의 농업기술이 조선의 농업기술보다 우수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농업생산정책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 관료와 농업기술자들은 일본이 조선보다 단위면적당 벼의 생산량이 1.5~2배에 달했기 때문에 일본의 선진적 농업기술을 조선에 이식하기만 하면 조선의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겼다. 따라서 1910년대는 일본 벼 품종을 우선적으로 조선에 보급하였다. 1920년대는 조선에 천수답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개량사업을 벌여 수리안전담을 확보하면서 비료의 시비를 강화한다면 생산력이 고양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이 되어 벼농사의 생산력이 더 이상 제고되지 못하고 수확량이 정체되면서 일본 농업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원인과 실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농업생산력이 발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왜 농촌의 수지는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증가된 생산량 이상으로 일본으로 값싸게 수출되거나 혹은 수리조합비와 세금 등 공과금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조선 농가의 수지가 적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통계적 수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일제하 식민지 시기에 조선 재래의 한전농법체계와 농업기술의 변화 양상

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930년대에 가서야 조선총독부가 밭농사 개량과 밭작물 증산을 시도하였고, 밭농사 개량과 증산계획에 대한 예산 집행도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자료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조선 재래의 한전농업과 농업기술이 일제하 식민지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규명한다면 일제의 농업생산정책의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끝으로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적용하려고 하였던 일본식 근대농법이 조선의 재래농법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개량 벼 품종의 이식, 논농사 중심의 농업개량, 수리조합사업의 전개, 시비정책 등이 조선 농업 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4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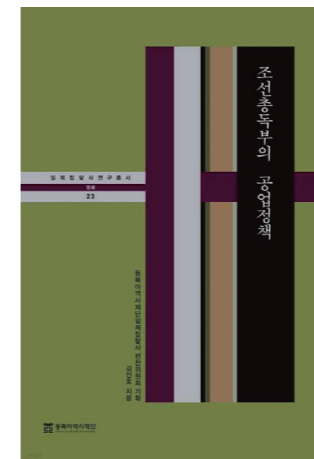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김인호
(동의대)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김인호
(동의대)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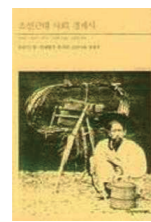
- 1. 연구 목적과 연구 성과
- 2. 공업화 성격 논쟁
- 3. 공업정책사 주요 논쟁
- 4. 식민지공업화의 의미와 향후 연구 과제

1. 본 연구의 목적

- 본 저작은 '전쟁 물자가 긴급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고, 땅 짚고 헤엄치려던 자본과 시장의 교활한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제국에 충성을 다하려 했던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시 기별 총독부의 '공업 정책'을 일련의 정책구상과 입안과정, 실행내용, 추진전략 등으로 해부하여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조선공업의 실상을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로 확인한다.
- 이런 고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적 공업 진흥을 홍보하며 증산과 개발의 가면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본토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선인의 희생(犧牲)과 내핍(耐乏)에 기반한 물자 염출에 몰두함으로써 조선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해방 후 조선경제의 재건에 고난의 단초를 심은 총독부 공업정책의 '진상(真相)'(본토 위주 공업화, 전쟁 편승 공업화, 대체품 중심 증산, 중소기업·조선인 및 시장 희생 기반 공업화)을 명확히 하려고 함.

2. 조선 공업화 문제의 시각

(1) 공업 파탄론 ; 구조적 파행, 산업연관의 탈구, 조선인 무관 공업화론, 비지론 등



- ① 일제 금융자본의 조선공업 독점
- ② 중공업 낙후와 예측성
- ③ 경공업 낙후와 식민지적 예측성
- ④ 광업과 공업의 불균형
- ⑤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 ⑥ 공업 배치의 지역 편중성
- ⑦ 기술 수준의 저열
- ⑧ 민족자본의 완전한 낙후

수탈적 성격(전석담)

전석담, 최운규, 1958, 『조선근대사회경제사』

조선의 존재의의가 모제국주의금융자본벌(母帝國主義金融資本團)의 이윤실현 시장으로써 잉여자본의 투하시장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조선의 공업발전은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보아 가망이 없는 바이다. (파탄론)

그는 조선의 뿔조아지가 다 모제국주의금융자본벌과 野合한다면 반드시 최후의 단계에까지 진출될 것을 몽상하고 있으며 또는 그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접근할 수 있다고까지는 보는 바이다.(개발론 비판)

洪性夏, 1930.12, 『朝鮮工業의 現段階』, 『별건곤』 35호

조선인 자본 열세론 : 일본인이 몽땅 해먹었다.

J. B. Cohen 저, 大内兵衛 역, 1950, 『戰時戰後日本經濟』(上), 岩波書店

비지론 : 일제의 군수공업은 이른바 조선과 상관없는 것

小林英夫, 1984, 『1930년대 조선공업화 정책의 전개과정』,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김철, 1965, 『韓國의 人口と 經濟』, 岩波書店.

민족경제론 : "민족경제와 국민경제 간의 괴리를 심화시켜 경제기반마저 파탄"시키는 것일 뿐

박헌재, 1988, 『민족경제와 민족운동』, 창작사.

독자적인 시장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경쟁적인 토착자본의 검출 노력 이어짐
식민지 공업의 '이중적 파행 구조'를 설명하는데 기여
조선인 부르주아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운동 여부에도 관심 집중

반론의 시작(호리 가즈오)

조선 공업화는 단순한 외산이 아니라 일본자본에 포섭되는 동시에 조선 내부의 사회적 분업의 확산(비군수산업의 확대, 시장에 의한 전상품화된 가내공업생산 확산)이나 공업의 지역적 특성화 등과 같은 특수상황이 결합하여 독특한 공업구조로 전환되었다

堀和生, 1993, 『1930년대 사회적 분업의 재편성』, 『近代朝鮮의 公業화 연구』, 일조각
1989,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재생산조건』,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비봉출판사, 1989.

(2) 개발론 : 공산품 시장확대론, 사회적 분업 확산론, 공업 수요 확장론

한국 측 개발론 연구자들의 부응 → 기존 연구 비판

: 정책보다 시장 논리에 더 민감한 것이 경제인데...왜?

- 기존 연구는 '이자대항적 결론'을 내포하면서 計量 방식으로 빚어진 신념과 열망의 경제사일 뿐

김낙년, 1993,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서평』, 『경제사학』 17호, 196쪽.

수탈과 억압이 아닌 개발과 성장으로 → 식민지에서 경제성장 현상이 일어난 유일한 경우

(安秉直·中村哲, 1994,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一潮閣)

→ 조선내 분업의 심화, 시장요소의 이식과 시장제도의 축적됨 → 호리 가즈오 논의를 그대로 답습 수용 심화

김낙년, 1993, 『일본의 자본수출과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인식』 제17호, 경제사학회

→ 자본주의 마인드로 훈련된 일본인 주도의 공업화가 조선인 삶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함

김낙년, 2008, 『일제시기 우리나라 GDP의 도별 분할』, 『경제사학』 제45호
김낙년, 2013,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33~194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제55호
정연기, 2002, 『朝鮮紡織의 戰時經濟와 資本蓄積의 전개』, 『經濟史學』 제 32호
정연기, 2005, 『戰時期 朝鮮방직의 對滿洲投資와 蠶口紡織』, 『역사와 경계』 제 48호

"공업화와 사회적 분업의 확산에 따라 27년간 1인당 소득이 연 성장률 2.3%, 소비지출 연 증가율 1.9%, 영양 상태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신장이 커지거나 감소하지 않는 등 삶이 질적으로 향상

주익중, 2008, 『식민지기 조선인의 생활수준』

공업 정책의 시기구분

구분	시기	기간	핵심 정책	주요 내용
제1기	무단정치	1910.10~1920.4	공동은사수산업 및 공동협력 사업 경성은사수산업(기업장, 제사장) 사업 농촌 부업 육성 정책	전통적인 농산물 가공업의 재편을 도모하는 은사수산업 사업 전개
제2기	문화통치	1920.5~1931.9	은사수산업 축소 → 민영화 좌절 산미증식계획 수반 농산물 가공업 및 비료생 산시설 확충 '비공업화' 노선과 공장 설립 지원 정책	산미증식계획에 수반한 농산가공업 증대 산업경제조사위원회의 비공업화 노선 유류자본의 진출과 공산품 시장 확대
제3기	대공황시기	1931.10~1936. 10	본토자본 유치 운동 농공병진 정책 공민 구제 사업	재벌 주도 지하자원 가공업 확대 산업경제조사회의 독자적 농공병진 구상
제4기	중일전쟁	1936.10~1940.10	시국산업육성정책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 중소기업육성정책 국토계획실정요강	시국대책조사회의 본토순응증산노선 '조선경제 이그노드' 우려- 조선국토계획 산업물자 통제/ 폐품회수 착수
제5기	태평양전쟁	1940.10~1943. 2	대동아국토계획실정요강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 대동아산업건설기본방책 중소기업조직화정책	복방권의 맹주론 데드 복방권 물자동원기지화 정책 연불록 의존형 증산 물자 및 금속류 회수 강화
제6기	결전기	1943. 2~1945. 8	'초중점주의' 생산증강 정책 기업정비정책 기업소개정책	비철금속 및 설비회수, 시설공출 기업소개 확대 생산(구조)의 파국

2. '비(非)공업화' 노선과 과잉자본의 이주

비공업화론 : 조선에는 공업화 할 자원도 능력도 없었다.

穂積眞六郎, 1974, 『わが生涯を朝鮮に』, 友邦協會

산미증식계획 추진에 따른 농촌공업발흥론

정미공업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주조공업, 기타 식료품 공업 등의 발달을 촉진

鈴木武雄, 1942,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미국 단작지대화에 따른 조선인공장후퇴론

오미일, 2008, 『한국독립운동의 역사-경제운동』 제36권

은사수산업 퇴조론= 민간기업 이양론 - 국가가 공업화 선도할 필요가 없다! - 공업화 외면

김인호, 2020, 『조선총독부의 공든, 경상남도 배당 지방 임시은사금 연구』, 『지역과 역사』 제46호

인프라 확충론, 공업부진론

김낙년, 2008, 『식민지기 공업화의 전개』,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

과잉자본 탈출론

본토의 불황을 피해 조선으로 시설 이주

1918~1920, 1929 주된 이주. 20년대 전반적으로 급증은 아님

小林英夫, 1967, 『1930年代朝鮮工業化 政策の展開過程』
조기준, 1973,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본 저작 → 미국 단작화 자체만으로는 공업화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입장과 상반되게 본토 과잉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 착증

3. 공업정책사 주요 논쟁

1. 「회사령」과 풍선효과

회사령은 '비(非)공업화 법제'

小林英夫, 1975, 『會社令研究』, 『海峽』 제3호, 朝鮮問題研究所,

「회사령」은 본토자본의 무분별한 진출을 저지하려는 조치

鈴木武雄, 1942,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86쪽.

→??? 1911년 초 총독부가 조선피혁(주)의 설립을 중용·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미쓰비시제철(三菱製鐵), 오지제지(王子製紙), 다이니혼제당(大日本製糖), 오노다(小野田)시멘트 및 겸이포제철소(兼二浦製鐵所)가 설립

1916년은 기업 발흥의 터닝포인트

허수열, 1993, 『일제하 조선인 공장의 동향』, 『근대조선의 공업화 연구』, 일조각.

구매력 증가에 따른 공장 증가론

오미일, 2008, 『한국독립운동의 역사-경제운동』 제3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은사수산업(恩賜授産)산업 육성정책 견지

= 수산업, 기업장, 제사장, 잠종제조소 등 국영기업적 성격 → 양반 위우용, 나태 경영으로 실패

김인호, 2020, 『일제강점기 경기도 배당 임시은사금의 지방비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 민족운동사연구』(102)

공장자본 동향은 자본주의 이행기적 특성 보유

= 숙련공 우대=가변자본비율의 상대적 상승, 개인기업 중심=동력, 기계 확보 미흡

김인호, 2000, 『조선공업의 이행기적 특성』,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본 저작 → 당대 조선인 공장 증가는 사실. '회사화=조선인 자본의 조직화'를 저지하다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관점 피력

3. 조선인 자본의 생존방법 : 틈새시장론, 이중구조론, 수직분업론, 연고성장론, 민족주의결합론

조선인 자본 부진론/ 적응론

1930년까지는 조선인 자본의 성장이 극히 부진

허수열, 1989, 『日帝下 朝鮮人會社 및 朝鮮人 重役의 分析』,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비봉출판사

조선인 자본의 특징인 약체성, 영세성, 저기술성, 공공성, 전근대성 등은 일본인에 대비해 그럴 뿐이고 반드시 추세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 조선인 자본은 몰락의 관점이 아닌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해야

허수열, 1993, 『식민지기의 조선인 자본의 성장』,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조건』, 경제 사학회,

조선인 틈새 성장론

본토의 수요에 기반한 일부 정어리업, 생사업, 조선 내 수요에 기반한 메리야스, 고무신업 등 성장

權泰禧, 1989, 『韓國近代 綿業史研究』, 一潮閣.

權赫泰, 1991.3, 『日本帝國主義と植民地朝鮮の蠶絲業』,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 28호
1996, 『일제하 조선의 농촌직물업의 전개와 특질』, 『한국사학보』, 제1호

재래시장(니노유타카, 1983), 고무공업 사례(이승렬, 1990), 영천 가내공업 사례(李洪洛, 1995), 주조업 사례(허수열, 1994, 이승연, 1994)

연고성장론

지역적 가족투자, 혈연관계와 지연관계 등으로 연관, 정미·양조·인쇄업 등의 조선인 소자본 성장 규명

선우성혜, 2020, 『일제강점기 동래지역자본가 한성종의 경제활동과 연고결속』, 『지역과 역사』, 제47호

본 저작 → 1920년대 일본인 비진출 분야에서 조선인 시장 확장 가능

일본인 동반 파탄론

조선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정안기, 2020, 「1940년대기업정비3대업종의연구」, 『경영사연구』

일본인 동반 성장론

조선 내부의 사회적 분업이 급속화 및 시장조건의 변화가 발생. 독점자본의 기계제공업과 결합하지 않는 분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업종에서 조선인 공업 발전
堀和生, 1989, 「1930年代 朝鮮工業化の再生産條件」, 『近代朝鮮の經濟構造』, 비봉출판
주익중, 1997, 「식민지조선에서의 고무공업의 전개」, 『경제사학』 제22호.
김낙년, 2003, 「일제하의 한국경제」, 해남
김낙년, 2008, 「식민지기 공업화의 전개」,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

조선인 기업 역량론= 조선인 자본의 자기학습론 및 자율적 흡수론

제1세대 근대적 기업은 불굴의 의지와 도전, 갖가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 단련
예속자본이나 친일파라고 간단히 폄훼될 존재가 아님
일제하에서의 기업적 훈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세계적 대기업이 등장 가능

서문석, 2003, 「일제하 고급선유기술자들의 양성과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제34호
주익중, 2008, 「대군의 척후대군의 척후, 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김연수」, 푸른 역사

조선인 기업 무능론= 방만경영, 문자마 차입, 정책의존적 기회주의

정안기, 2005, 「식민지기 경영방식의 전시경영과 만주투자-제국의 침범 조선방직과 비교경영의 관점에서-」, 『경제사학』 제38호
2014, 「일제의 군수동원과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동북아역사논총』 제 46호

1933년 전환설/ 제2차 기업발흥 포인트

우가키 총독의 공업진흥책에 따라 공업생산액이 급증하면서 1932년 이후에는 공업제품의 자금률도 높아졌다.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일·선·만 블록 안으로 조선경제를 위치 지우고자 일본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고, 만주와 적극적으로 무역을 확장
(허수열, 배석만, 이승철, 이상의, 김경남 등 일반론)

호리 가즈오는 조선의 공업화가 '산업연관과 시장분업의 전체적인 확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이 미 1920년대 이후
이런 경향이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1930년대 초 반부터 공업이 급격히 발전했다는 허수열 공업화 촉진론 지지

堀和生 지, 주익중 역, 2003,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 현대,

30년대초 공업화부진론(개발론)

우가키 총독 시기에도 곧바로 공업화 정책이 본격화되지 못했으며, 공업진흥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보이지 않았다
김낙년, 2008, 「식민지기 공업화의 전개」,

1934년 이후에도 농업보조금은 감소했지만 공업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거나 중공업 등 특정 공업에 국가가 직접투자하고, 특정 공업제품에
고율의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주익중, 2003, 「일제하 한국의 식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공업화」, 『경제사학』 제35호,

30년대 초 총독부만으로 공업화 불가능 → 본토의 결단으로 조선공업화 실현 / 기존 총독부 독자성론과 충돌??

업종별 연구

석탄(김은정, 2007), 제당업(이은희, 2011), 조선중공업(배석만, 2006), 조선기계제작소(배석만, 2009), 일본강관(정안기, 2011),
이원철산(정안기, 2012) 중방그룹(정안기, 2011), 홍중상공(정안기, 2012) 부산주조업(김승, 2015), 일본경질도자기(배석만·김동철, 2011),
등등

지역별 연구

부산 제조업(박섭, 장지용 편, 2010), 부산제조업(박영구, 2005), 동래(선우성혜, 2020), 마산(허정호, 2005), 마산경제인(김예슬, 2019),
평택(김인호, 2018), 용산(김인호, 2018), 정진(송규진, 2013), 부산 香椎源太郎(김동철, 2005), 香椎源太郎(배석만, 2009),
大池忠助(전성현, 2013), 후쿠나가 마사지로(이가연, 2015) 등등

4. 독자적 공업진흥론의 대두

우가키 독자적 공업화 추진론 = 공황탈출론, 만주사변 추동론

조선산업경제조사회(1936)에서 '원시산업 중심 방책에서 다종 광범한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한 농공병진 혹은
... (중략)... 광공업의 그 비약적 진흥을 기(期)하는 「조선산업개발에 관한 일반방침」을 결정한 것은 '중래 자연발생적 공업화 운동을
정리하고 반도산업개발의 근본방침을 확립하며, 조선산업의 합리적 재출발을 도모' 하는 바로서, 그야말로 총독부 주도의 공업화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다

鈴木武雄, 1942,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일본본토의 공황 탈출 통로로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그리고 일본적 합리화나 일본산업의 군사적 재편성
혹은 식민지 정책의 강화와 같은 구조재편 과정에서 조선의 공업화 시작

小林英夫, 1967, 「1930年代朝鮮工業化 政策の展開過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3호

우가키의 선심과 본심

"조선을 경쟁시키고 조선을 통해서 모국(일본본토)의 약점을 보정하고 조선으로 모국의 위난(危難)을 구제하고 조선을 이끌어 모
국의 진운에 공헌하고자" (우가키 총독(1931.6.17.~1936.8.5.) 취임사)

일본경제의 전국적 발전으로부터 말하면, 이것에 의해 일본경제는 현 상태에서 조만간 없어질 조공업을 영속시킬 수 있다. 그 위에 조선에서
의 공업의 발전이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만일에 빠져 버리려고 하는 본토 공업계에 항상 청신한 분투 노력의 자극을 주어 일본공업이
대성(大成)하는데 기초공작의 역할을 계승하게 된다. (우가키 일기)

독자적 구상의 시도 기간(1936~1938) - 사실상 구상에만 머물 → 본토연계에서 본토본위로 정책 전환

산업경제조사회 소집, 총독부는 '동준비위원회' 설치 '조사회에 제출할 의안 개요'(1936. 4. 15.우가키 용) 및
조사회에 제출할 의안 참고서(미나미용)(1936. 9. 15.) 작성.

산업경제조사회 준비위의 의안과 조사회의 답신안

1. 공업통제에 관한 시설 계획	중요산업통제법 실시로 해결
2. 중요공업 특별진흥책(석탄액화, 액체주정, 경금속, 제철, 조선)	(1) 장려금교부, 동력요금, 운임경감, 운수시설 정비, 원료확보 용 수조사 등 각종 특전과 편의 부여 (2) 토지수용권의 부여, 조세특전 및 보호관세 설정
3. 공업의 합리적 분포 : 공업지대 설정, 공업의 지방분산	(1) 공업지대의 지가폭등 억제, 교통운수-전력-용수-산업교육 등에 관한 집약적 합리적 지원 (2) 중목별-지역별 필요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강화
4. 중소공업진흥 및 그것의 대공업과의 조정적 발달에 관한 시설 계획 -공업조합제도의 설정, 자금융통손실보상제의 설정, 조성시 설확충	자문안과 동일
5. 노동능률 향상 및 노자협조 관련 시설계획- 공장노동조사, 노자 협조기관 설치	자문안에 더하여 노동자의 자율정신 함양에 노력할 것

공업화= 원료+ 자본 + 설비→ 어느 하나 구현된 것이 없음. 우가키 취임 이후 국민구제사업(1931~1933 3개년 대규모 토목, 위생 사업), 농촌진흥
(1932년 농촌진흥위원회 개설, 자작농지장설사업, 소작령, 1933년 농가경생계획, 1934년 조선농지령, 1935년 농가경생10개년계획)을 위한 자금확보 중점→ 공업화 정책 추진
어려움. → 그러다 1935년경 공업화 급속한 공업화 구상이 확인되고, 자본유입이 급증하는 현상 확인

조선내 산업설비자본의 투하 비율

일본산업자본의 직접진출	총계(%)	소계(%)	(%)
미즈이계	4	2.96	
미즈비씨계	6	4.44	
쓰미토모계	2	1.48	
이치쓰계	36	26.64	
동척계	11	8.14	
닛산계	12	8.88	
중방계	6	4.44	
대일본방계	2	1.48	
도요방계	2	1.48	
닛테쓰계	4	2.96	
**기타주요산업 자본	15	11.10	
조선내 주요 산업자본계	18		
특수회사	17	3.06	
식은계	29	5.22	
기타 일본인계	48	8.64	
조선인계	6	1.08	
기타 일반 조선내 계획회사	8		
일본인계	50	4.00	
조선인계	50	4.00	
합계	100	100.00	

비고 : **기타 주요 산업자본 : 대천계, 대교계 등
출전 (1942) 『朝鮮産業の共榮關係加體制』 26~34쪽.

조선내 공업회사 및 불입자본금 증가 상황

연도 구분	본 점			지 점		
	수	불입액	사당불입	수	전원	당불입
1932	540	128,376	338	30	286,060	9,535
1935	672	141,627	211	32	355,567	11,111
1938	1,186	257,820	217	44	1,137,382	25,850
1941	1,187	390,269	329	39	605,057	15,514
(A)1932~1935	+132	+13,251	-127	+2	+69,507	+1,576
(B)1938-1941	+1	+132,449	+112	-5	-532,325	-10,336
(C)1932-1941	+647	+261,893	-9	+9	+318,997	+5,979

출전 : 『總督府 統計年報』 각년판
* 가스전기업은 제외
* 가스전기업은 제외

실제로 1942년 이후 공업시설이 급증 - 미반영

대용재 대체품 중심 공업화론

- 석유 대신 인조석유
 - 말레이산 철강 대신 무산 철강
 - 남방 보크사이트 대신 명반석반토항암으로 알루미나 추출 등
 - 자원 재생산업, 폐품 회수산업
-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제국 역량 한계론

일본제국의 각 경제행위 주체 간 불일치와 정책적 시행 착오, 국책과 영리의 대립, 엔블록 경제력의 한계, 식민지 권력의 한계가 상호작용한 결과

백석만, 2010.9, 『조선제철업 육성을 둘러싼 정책조율과정과 청진제철소 건설 (1935~1945)』, 『동방학지』 제151호

비군수(비시국)산업 육성론

"시국산업(군수산업, 계획산업)의 증대는 당연 평화산업의 위축을 불가피하게 하며 소위 파행상태를 필연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파행상태가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평화산업은 생산, 배급 양 부분에 걸친 희생이 강요되고 있지만 평화산업 자체의 발달이 불충분하여 항상 그 경제상 지위는 일본 본토처럼 크지 않기에, 다행히도 파행 현상은 시국산업의 발달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여기에 조선경제가 전지적 파멸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 발전상만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事變の進展と朝鮮經濟の動向』 『朝鮮經濟年報』 1940, 122쪽

김인호, 2003.6,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5호

본 저작→ 조선의 공산품 시장은 외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적 혹은 정책적 요구에 종속된 기형적 시장이었고, 가격 형성에서도 단일단가제 등 수급의 적정성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반(反)시장적인 지정가격이 지배되던 상황. 즉,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율적 확장이 아니라 정책적 동기에 깊이 침윤된 상황이었다.

5. 군수공업화론과 그 반론들

우가기 공업화 연장론 =군수공업화론

일본인과 조선인 공업간 연관은 부정적. 그러나 '군수공업화론' 지지 1930년대 10%대였던 군수공업생산이 1940년 31%로 증가 주목

허수열, 1996, 『식민지적 공업화의 특징』, 『공업화의 재유형』 II, 경문사

독자적 공업화론, 총독부 특수성론

사안에 따라 총독부가 본토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조선이라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관철(김재정)
[반론] 총독부가 일본정부와의 줄다리기/ 산업통제에 대한 조선의 '상대적인 독자성' 확보를 통해 본토자본 유지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독자성 상실(이상의)
[반론] 독자적 공업화 구상은 1935~38년간 한시적, 이후 본토 기획원은 조선의 이해를 무시한 본토 본위 생산력확충만 관철(김인호)

김재정, 2018,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의 조선특수성론』
이상의, 2007, 『1930년대 조선총독부 殖産局의 구성과 공업화정책』

『국가총동원법』의 발동 아래 완전히 내선일체 통제하에서 이전과 같은 특수성에 입각하여 독자성을 주장하던 여지는 사라지게 됨

鈴木武雄, 1942,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시국대책조사회 계기론 (시장론)

1938년 8월의 총독부가 시국대책조사회준비위원회의 자문안으로 작성한 「군수공업 확충에 관한 건」은 조선의 각종 공업, 특히 군수공업의 비약적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총독부의 굳은 결의

김낙년, 2008, 『식민지기 공업화의 전개』

[반론] 시국대책조사회 대신안에 기반한 시국산업육성계획은 이후 본토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외지(外地, 식민지 및 점령지) 간의 경쟁 유발책' 이상으로는 보기 힘들다

김인호, 2000, 『조선에서의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과 그 실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6호.

태평양전쟁 계기론

중일전쟁기 오히려 공장회사 설립 저조. 1941년 「(개정) 국가총 동원법」 시점부터 본토의 전쟁국책에 따라 공업 시설 확장(김인호)
전상숙은 1940년 기본국책요강 부타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 연구』, 신서원
전상숙, 2017, 『전시 일본 국토키획과 대동아공영권 그리고 조선국토계획』, 『사회이론』, 제51호

특수시기론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현상일 뿐... 공업화다운 의미가 없다는 니와스와 특이한 목적에 따른 조선공업화라는 니와스식 중

橋谷弘, 1990, 『1930・40年代朝鮮社會の性格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論文集』, 제27호

조선의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 대상 15품목 35개 물종(=계획산업)

업종	단위	총독부안				조사회안		기획원안 (제1차생활계획)		본토계획(조선포함)	
		1938	1939	1940	1941	1941	1938	1941	1938	1941	
알루미늄	원톤	-	4	5.5	27.5	28	2.3	3	19	126.4(70)	
마크테슈	톤	186	1,200	2,400	3,750	4,000	468	380	-	(3,900)	
휘발유	원배럴	100	152	249	355	485	-	-	-	-	
중유	"	72.5	104.8	150.6	189	236	-	-	-	-	
기계유	"	32.5	39.5	46.5	58.5	68	-	-	-	-	
소다회	원톤	10.5	17.5	35	35	35	14	3.35	-	-	
가성소다	"	14	14	28	42	40	12	12	-	(141)	
유안	"	420	450	550	650	850	455	505	1,510	(268.5)	
공작기계	원원	-	1,000	3,000	5,000	5,000	-	-	-	2,039(1,835)	
화물차	대	400	1,000	2,000	4,000	+6,000	-	-	-	-	
승용차	대	100	500	1,000	2,000	-	-	-	-	-	
기관차	대	9	12	12	12	65	-	14	-	-	
객차	대	72	72	72	72	20	109	145	-	-	
화차	대	580	1,804	1,804	1,804	3,600	3,350	5,197	-	-	
선박	톤	5,500	8,300	12,300	23,600	23,000	4,900	7,090	-	-	
발동유	마력	2,000	4,000	11,000	18,000	-	-	-	-	-	
항공기	백만원	-	-	-	-	30	-	-	-	-	
폐혁	원 배	-	-	-	-	400	-	-	-	-	
보통강강재	원톤	98	89.4	-	80	-	-	-	4,615	7,280(4,700)	
활용석	"	750	1,100	-	2,100	-	-	-	2,250	5,700(3,700)	
보통강강괴	"	173	111	-	-	-	-	-	6,310	9,950	
보통선	"	320	311	-	(250)	-	-	-	3,300	6,362(4,700)	
철벽	원kw	766	781	-	-	-	-	-	-	-	
석탄	원톤	(3,646)	(4,732)	(6,800)	(7,000)	-	-	-	-	-	
알루미늄	FCL	-	-	-	(1,500)	-	-	-	-	(73,000)	
중	원톤	-	-	-	(3.5)	-	-	-	-	(75.5)	
연	"	-	-	-	(9)	-	-	-	-	(24)	
아연	"	-	-	-	(6.5)	-	-	-	-	(61.5)	
텅스텐	"	-	-	-	(5.4)	-	-	-	-	(6)	
시멘트	"	-	-	-	(1,240)	-	-	-	-	(7,100)	
석면	"	-	-	-	(2)	-	-	-	-	(2.5)	
운모	"	-	-	-	(0.16)	-	-	-	-	(0.16)	
형석	"	-	-	-	(42)	-	-	-	-	(42.8)	
토상흑연	"	-	-	-	(20)	-	-	-	-	(20)	
인상흑연	"	-	-	-	(73)	-	-	-	-	(73)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과 총동원 물자 증산

본토의 생산력확충계획 관련 연구
 山崎志郎, 1995, 『戰時工業動員體制』, 『日本ノ戰時經濟』, 東京大學出版會
 山崎志郎, 1987, 『生産力擴充計劃展開過程』, 『戰時經濟』, 近代日本研究會
 小林英夫, 1975,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壊』, 御茶の水書房 등

조선의 경우
 김인호, 2002, 『조선에서의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과 실상(194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0호
 2004,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생산 증강 정책과 그 실상』, 『역사와 경계』 제52호

본토의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 대상품목(=계획산업)

①철강-보통강강재(지수 160), 특수강강재(200), 강괴(160) ②석탄(130) ③경금속-마그네슘(1,000)- ④비철금속-납(190), 아연(170) 등(180), 석(200)- ⑤석유 및 그 대용품-자동차 가솔린(천연 130, 인조 3000), 중유(140, 인조 900), 무수알콜(1300)- ⑥소다 및 공업염-소다회(120), 가정소다(140), 공업염(650)- ⑦유안(140) ⑧펠프-제지용(120), 인건용(310)- ⑨금(120) ⑩공작기계(260) ⑪철도차량-기관차(130), 객차(170), 화차(150)- ⑫선박 ⑬자동차(500) ⑭양모(340) ⑮전력 등 총 15개 품목(괄호 안은 1938년 100으로 한 41년까지의 증산목표)

총동원 물자

①병기, 함정, 탄약, 기타 군용물자, ②국가총동원에 필요한 피복, 식량, 음료 및 사료, ③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계 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축 위생용 물자, ④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 기타 수송용 물자, ⑤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 및 조영용 물자, ⑦필요한 연료 및 전력, ⑧ 지정 물품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기구, 장치, 기타 물자, ⑨ 칙령으로 지정한 물자

『국가총동원법』 제2조(1938.5)

1940~1942 조선 경제 이그노드 분위기

『기본국책요강』(1940.7.26)- 일만중국을 포괄하는 자주경제 건설을 기조로 국방경제의 발달을 확립하고, 이들을 하나의 원으로 포용하는 황국의 자급자족경제정책을 추진 → 「국토계획설정요강」(1940.9.29) 발표 → 조선에도 적용 → 조선은 황국계획의 하부단위로 국한함 → 일만지 중심의 경제적 자급권 확립 기획

조선에서 '대륙전진병참기지화' -- "적어도 고이소 총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당시 신문·잡지들이 만든 용어였고, 일부 총독부가 가용한 것은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용어로 이용한 것에 불과

田中武雄, 1960, 『小磯總督時代の統治概観』,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제3권.

대동아국토계획요강(1942.2)- 조선에서 카바이드, 경금속 공업 적극 육성 + 남방연계 → 대동아국토계획요강소안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 기점으로 일본군이 전선에서 후퇴

대동아건설심의회 제56부회는 「대동아산업건설기분방책」(광업·공업 및 전력건설)을 수립- 북방엔블록의 경제건설 지표 설정(1942.7.23.)

북방권은 조선, 남방권은 타이완을 병참루트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 엔블록 자급권 분할 전략이 입안

성전 원수상 시국산업취중 군수공업 부대의 산업 기타 중공업 일반의 발전육성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인데, 장래 남방 각지역에 생산되는 과잉자원을 기초한 제산공업을 조선에서 발흥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외에 미영세력의 쇠퇴 후에 대동아권의 현실적인 요구에 비추어 평화산업 그중 섬유공업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또한 긴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고이소 총독 훈시 1942.6.29)

6. 태평양전쟁과 조선공업의 위상: 대륙전진병참기 이론, 엔블록 연관론, 북방권의 맹주론

엔블록과 연관된 조선공업 이해= 엔블록 자급체제론 주로 기획자인 본토의 입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는 점

原朗, 1976, 『大東亞共榮圈の經濟的實態』, 『土地制度史學』 제71호; 原朗 編, 1995, 『日本の戰時經濟』, 東京大學出版會.
 小林英夫, 1975, 『大東亞共榮圈』의 形成と崩壊』, 御茶の水書房.
 山本有造, 1991, 『日本植民地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山本有造, 1995, 『大東亞 共榮圈』とその構想構造』,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東京大學人文科學研究所

조선공업의 대외적 성격론 1940년대 조선공업의 침략적 대외적 성격 → 세계대전 전국에 영향받는 조선 공업화

김인호, 2002,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과 북방 엔블록간의 경제적 연관에 관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0호.
 방기중, 2007,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강화정책: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특징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제138호
 송병권, 2013, 『1940년대 전방 일본의 동북아시아 정치경제 인식: 동아광역경제론을 중심으로』, 『사중』 제80호
 김인호, 2000, 『1940년대 조선공업의 대외적 성격과 조선인 자본의 중국침략』,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제15호

조선공업화 본격화론 결전기 공업은 '설비의 확장이나 기계화에 의한 것보다는 예전의 설비로써 수량적 증산만을 강요하는 공업정책 작동. 실질적으로 중요물자 생산처로서 조선공업의 위상이 형성됨.

김인호, 2004,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생산 증강 정책과 그 실상』, 『역사와 경계』 제52호, 부산경남사학회

북방엔블록의 맹주론 조선경제가 북방엔블록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남방권 편입에 따른 동아공영권의 확대에 의해서 대륙전진병참기 지로서 조선의 사명은 중식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공영권의 핵심이 종래 대륙에서 해양으로, 북방권에서 남방권으로 이행하는 금일에 있어서도 북방대륙권 또한 건설과정인 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선의 경제권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종래와 하등 변 화가 없다. 오히려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필자)하 "대륙은 조선이 인수한다"라고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후방의 우려를 벗어 버리고 그 전체의 자세를 태평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이상, 대륙 전진병참기 지로서 조선의 사명은 일층 강화되어야 한다.517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년판

6.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 추진과 본토기업의 조선 이주

김인호, 2004,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생산 증강 정책과 그 실상』, 『역사와 경계』 제52호, 부산경남사학회

2차 생산력 확충 계획(1942.10 ~ 무기) : 조선산 대체자원산업의 중요재 산업으로 전환

- 생산력확충 추진운동 실시요강(1942.10. 20) - 상공과 강화
- 강력한 국가통제
- 적극 동원 및 자급정책 추진

본격적인 조선공업화 진전 : 생산증강(1943 ~ 1945) : 5대 초중점 물자 집중생산

- 생산책임제실시요강(1944. 3. 13)
- 군수회사법(1944. 10) 공포
- 경금속, 석탄, 인조석유, 철강, 비료 초중점 물자 생산

조선의 산업배분은 전력의 유리성을 기반으로 속히 제2차 가공공업으로 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즉, 카바이드로부터 발전된 각종 비료공업 또는 연료공업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대체의 원칙으로서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은 속히 제1차 가공공업의 완성을 꾀하고 제2차 가공공업의 소지를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鹽田正洪 食산국장 金融組合聯合會 강연』(1942.4. 1)

조선·일본본토의 생산액 비교

구분	일본본토 공장(백만원)			조선내 공장(백만원)		
	1936	1941	배율	1936	1940	배율
금속공업	2,208	6,065	2.75	28	144	5.14
기계기구	1,716	9,093	5.30	7	70	10
화학공업	2,110	4,997	2.37	162	649	4.00
제재목제품	280	1,158	4.14	19	77	4.05
방직공업	3,654	4,840	1.32	90	231	2.57
식품공업	1,259	2,502	1.99	321	304	0.95
요업	329	725	2.20	19	52	2.74

출전: 일본본토의 1936년 통계는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1941~42년 합집), 1941년도는 大内力(1958), 알리 책, 朝鮮 통계는 總督府統計年報 1941년판.

조선공업의 부문별 생산액 증가상황 (단위:천원)

부문	업종	1931	1935	1937	1940	1942	1943
생산재	금속·기계·화학·전기·가스	66,457	185,744	363,041	862,629	901,511	1,045,000
		24.30%	29.30%	38%	53.30%	48.40%	46.10%
소비재	식품·방직	180,919	396,892	516,233	534,714	721,550	745,000
		66.10%	62.60%	54.10%	33%	39%	32.90%
기타	요업·인쇄·잡품	24,261	51,340	68,711	222,041	234,691	475,532
		9.60%	8.10%	7.20%	13.70%	12.60%	21%

1944년 2사분기 중요물자 일만지 교류계획안(석탄) [단위: 천 톤]

구분	일본본토	조선	대만	사할린	남양	만주관동주	몽강 북중국	중중국	남방	계	
공급력	생산	60,990	8,100	2,800	5,000	-	28,000	23,265	1200	-	129,355
	기타	-	-	-	-	-	-	-	-	-	-
	합계	60,990	8,100	2,800	5,000	-	28,000	23,265	1200	-	129,355
현지소비	60,370	7,200	2,480	2,500	-	25,680	13,515	1200	-	112,945	
(자급률)	99%	89	89	50	-	92	58	100	-	87	
수이출	본토	-	800	-	2,000	-	720	3,500*100	-	-	7,020
	조선	620	-	-	500	-	1,600	950	-	-	3,770
	대만	-	-	-	-	-	-	-	-	-	-
	사할린	-	-	-	-	-	-	-	-	-	-
	남양	-	-	-	-	-	-	-	-	-	-
	만주관동주	-	100	-	-	-	-	3,200	-	-	3,300
	몽강	-	-	-	-	-	-	-	-	-	-
	북중국	-	-	-	-	-	-	-	-	-	-
	중중국	-	-	-	-	-	-	-	-	-	-
	남중국	-	-	-	-	-	-	1,940	-	-	1,940
남방	-	-	200	-	-	-	60	-	-	260	
예비	-	-	120	-	-	-	-	-	-	120	
계	620	900	320	2,500	-	2,320	9,750	-	-	16,415	

비고: 1. 북중국단 조선항 *100은 조선내 수급상 절대필요로 하는 기대량(운송은 기법선을 예상함)
출전: 軍需省 總動員局, 『(極秘) 昭和 19年度 主要物資日滿支交流計劃(案)及2四分期 實施計劃(案)』(1944. 6. 12)

1944년 말까지 본토의 대기업 이전

-본토에서 「금속회수령」(1942.3)으로 스프게 방직공장 20%를 공출하는 결정이 있으면서 방직공장이 대대적으로 조선에 이주
-1942년 8월에는 후쿠이, 이시가와 등지의 30개 공장이 직기 2천여 대를 가지고 이주

-**이주 완료 기업** : 동면섬유 신의주공장[대마방직], 군시 대구공장[대마방직], 조선야마토방직 창동공장[면범포·중포], 조선모직 밀양공장[수방직], 동양제사방직 사리원공장[수방직], 제국(帝國)섬유 인천공장[아마방직], 조선방직 대구공장[메리야스], 조선어망 부산공장[어업용면연사·면어망], 북선(北鮮)제지 군산공장[양지] 등

-**이주 중 기업** : 조선오우방직 대전공장[면방직], 중연공업 춘천공장[대마방직], 조선마방직 전주공장[대마방직], 조선제지 순천공장[시멘트부대지], 왕자제지 신의주공장[신문지], 조선판지공업 경성공장[판지] 등

-**이주 예정 기업** : 조선야마토방직 서울공장[면사방직], 대일본방직 서울공장[면방직], 부사가스방직 대구공장[면사], 동면섬유 서울공장[대마방직], 군시 대전공장 등

엔블록 내 조선의 생산력 비중 (단위: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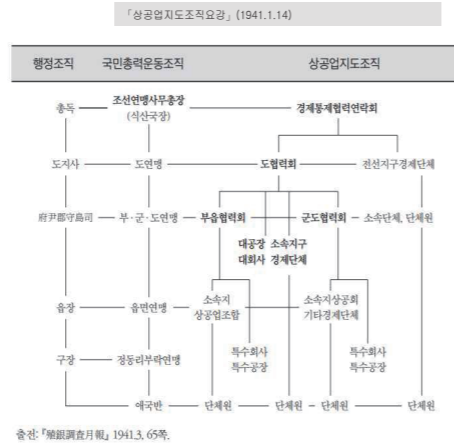
물자명	엔블록				조선				조선 비중		
	1941	1944	증감액	증감률	1941	1944	증감액	증감률	1941	1944	증감률(%p.)
알루미늄	73,000	133,100	60,100	82%	1,500	2,000	500	33%	2%	1.50%	-0.50
동	75.5	121.7	46.2	61	3.5	1.2	-2.3	-67	4.6	1	-3.6
연	24	55.4	31.4	131	9	6	3	50	37.5	1.1	-36.5
보통강강재	4,700	4,550	-150	-3	80	119	39	49	1.7	2.6	0.9
보통강하강	190	234	44	23	6	4	-2	-33	3.2	1.7	-1.5
보통강주강	247	339	92	37	10	15	5	50	4	4.4	0.4
가성소다	258.5	255	-3.5	-1	12	19	7	58	4.6	7.5	2.9
소다회	141	336.6	195.6	139	3.3	7.2	3.9	118	1	2.1	1.1
보통선	4,700	5,751	1,051	22	250	822	572	229	5.3	14.3	9
알루미늄	74	196.9	122.9	166	3	32.3	29.3	977	4.1	16.5	12.4
아연	61.5	82	20.5	33	6.5	11	4.5	69	1	13.4	12.4
팅스텐광	6	7	1	17	5.4	6	0.6	11	90	65.7	-24.3
시멘트	7,100	5,239	-1,861	-26	1,240	1,200	-40	-3	17.5	23	5.5
유안	1,835	1,403	-432	-24	505	468	-37	-7	27.5	33.3	2.8
철광석	3,700	11,000	7,300	197	2,100	4,100	2,000	95	56.8	35	-21.8
마그네슘	3.9	11	7.1	182	0.38	3.9	3.52	926	9.8	35.5	25.7
석면	2.5	15.4	12.9	516	2	5.5	3.5	175	80	35.5	-44.5
운모	0.16	0.46	0.3	188	0.16	0.16	0	0	100	34.8	-65.2
형석	42.8	120.2	77.6	181	42	61	19	45	98.1	50.7	-47.4
인상흑연	20	57.3	37.3	186	20	30.5	10.5	53	100	53.3	-46.7
토상흑연	73	136.2	63.2	87	73	73	0	0	100	53.6	-46.4

7. 기업통제의 전개

통제 가격의 형성

- ◆ 「물품가격취체규칙」(1938.10) : 물품별 판매가격 지정
- ◆ 「9·18조치」(1939.9.18) : 가격통제령 제7조로 9.18 이전 가격 정지
- ◆ 「조선물가통제요강」(1940.5.20) : 공정가격 확대, 중점주의 가격공정, 적정가격 유지, 적정이윤 확보, 가격평준기구 설립, 가격등귀 억제, 경제사범 단속, 물가위원회의 확충, 일본본토와 물가통제 긴밀화, 지방관청 상호연결, 민간협력기관 설치 등 명시
- ◆ 「폭리취체령」(1940.7.20) 개정 : 모든 물자에 대해서 원문자로 된 공·정·협 표시(물가통일, 암거래·매점매석 저지, 가격 위반 벌금 5만원(10배 인상), 범칙금은 3배 추징)
- ◆ 「8·11정지령」(1941.8.11) : 수선료·청부료 등의 재산적 급부 통제(1942.2 대상 확대)
- ◆ 1941년 2월까지 공정가격 지정 건수 → 총 57,640점, 1941년 10월까지 100,934점
- ◆ 「긴급물가대책」(1942.4) : 쌀·보리 등 가격조정기관 설립, 기업정비에 따른 산업물자영단의 가격조정, 원가계산제 시행 등
- ◆ 「원가계산규칙」, 「업종별 원가계산준칙」(1942.10.15) 공포 → 단일단가제도 시행 → 국가독점가격 체제 완성(시장가격 붕괴)

(1) 경제통제 협력연락회



조선내 군수회사법 적용 업체(단위: 개사, 만원, %)

구분		제1차 지정	제2차 지정	B/A
		(A)	(B)	(%)
회사수 (개사)	총 수	56	44	-
	본 점	37	31	-
	지 점	19	13	-
자본금 (만원)	총 액	426,921	152,370	35.69
	본 점	136,655	13,750	10.06
	지 점	290,266	138,620	47.76
1회사당 자본금 (만원)	전 체	7,762	3,463	44.61
	본 점	3,796	458	12.06
	지 점	15,403	9,901	64.28

비고 : 1) 지점 자본금은 본토 본사의 것이므로 실제 투자금 아님.
 2) 제1차 지정업체로 일본본토는 1944년 1월, 조선은 1944년 12월임. 제2차 지정은 일본본토는 1944년 4월, 조선은 1945년 1월.
 출처: 東洋經濟新報社, 『大陸東洋經濟』(1945. 5. 1.).

(3) 조선공업통제령(1944.8.16) 공포

- 산업(부문)별 통제회 설립(기계공업통제회 결성)
- 1945년 2월 「중요산업단체령 시행규칙」과 「중요산업 지정규칙」공포

(2) 군수회사법(군수생산책임제)

김인호, 일제 말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9), 1998
[Joungh An-Ki, The Wartime Economy in Imperial Japan and the Mobilization of Munitions in Its Colon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ume 14 Number 4, 2011.12 17.](#)

칙령 제427호 「총동원업무사업설비령」(1939.6.30)- 총동원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 명령 가능

「중요공장사업장관리령」(1938.5) 공포, 그러나 조선 적용은 1944년 3월 1일

「군수생산책임제실시요강」(1944. 3.13)

전매분야 「생산책임제요강」(소금·간수·연초·아편·인삼, 1944. 3.31)

「조선군수생산책임제도요강」「조선목재생산책임제도실시요강」「조선총독부군수행정책임제도요강」(1944. 4.11)

군수생산책임제- (1)병기, 항공기, 함정, 선박, 차량(부품) (2)철강, 경금속, 비철금속, 희귀금속 기타 중요광산물 (3)액체연료, 윤활유, 석탄, 가스, 코크스, 전력 (4)중요화학공업품 (5)중요기계기구(부품) (6)기타 총독이 지정하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사업

1944년 3월 30일 경금속 관계 10명/ 철강 및 제철 13명/ 특수광물 및 비철금속 82명 / 석탄 16명/ 액체연료 3명

화학공업 12명/ 전기 관계 2명 등 7개 부문 합계 138명(=138개사)에 지정영서 교부

총독부 공무원(工務官)으로 하여금 군수관리관

본토보다 약 1년이 늦게 「군수회사법의 조선 및 대만 실시 건」(1944. 10. 28.) 공포

「군수회사법시행규칙」(1944.10.28. 부령 357호)

1944년 12월 8일부터 제1차로 철강, 경금속, 군용광물 등 56개 회사 지정

「군수회사법」 실시와 더불어 「여자정신대근무령」, 「국민징용령」, 현원징용 조치 등으로 노동력 동원이 강화

조선의 현원징용(現員徵用) 상황

일시 구분	징용사업체				징용인원			**공장당 징용인원		
	공장	광산	기타	계	계	공장 징용인원 추계	광산 징용인원 추계	평균 징용 인원 추계	공장당 최대인원 추계	광산당 평균 인원 추계
1944. 8	73	56	-	129	147,480	83,439*124,688	22,792*64,008	1,143	1,732	407
1944. 11	72	71	1	144	153,580	76,752*124,683	28,897*75,686	1,066	1,708	407

조선내 중요공장 등 추계(1944.6)

조선내 총공장	전체 공장 노동자수(규모별)					중요공장		비중요공장		
	30인 이상	30인 이하	계(B)	평균	계(C)	[추계]	노동자수	공장수	비중	
(A)	382,497	130,410	512,907	38.6	162,668	*4,214	B-C	[추계]	(%)	
13,293							350,239	*9,079	68.3	

비고 : *비)군수공장수는 공장당평균노동자 38.6명을 1개 공장으로 보고 <비)군수노동자수>를 <공장당평균노동자수>로 나눈 수치임.

출전: ①중요 공장노동자수(1943.12)는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제4호 ②전체 공장 및 노동자수(1943.6)는 朝鮮銀行調査部(1949), 『朝鮮經濟統計要覽』.

8. 공업생산의 파국

조선인 중소공업 전면 몰락론

1944년 이후 일련의 기업정비, 기업합동, 전업, 기업소개, 시설회수, 금속회수 등으로 대부분의 조선인 자본은 '침략전쟁의 점병화'하거나 전면 몰락을 강요 받았고, 조선인 영세 중소기업 다수가 몰락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조선 기업정비 정책』, 『한국근현대사학회연구』
2004, 『1945년 부산지역의 都市疏開政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일본인 자본 파탄론

기업정비 국면에서 조선인 자본의 전면적인 붕괴라는 기존 인식은 잘못이며, 실제로는 일본인 자본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정언기, 2017, 『1940년대 식민지군수동원과 기업정비』, 『한일경상논집』 제75호.
, 2020, 『1940년대 기업정비 3대 업종의 연구』, 『경명사연구』 제35-2호(통권 94호), 139쪽

- ✓ 중요 물동물자의 부족 심화
- ✓ 산업현장에서 사라지는 석탄
- ✓ 화약생산을 위해 비료 감소
- ✓ 대용 석유마져 품귀
- ✓ 경금속 품귀
- ✓ 저품질 철강, 빈철광의 활용 실패

8·15 직전 조선 남부에 남아 있던 재고품을 보면 선철 120,000톤, 납 900톤, 강재류 50,000톤, 알루미늄원괴 1,400톤, 전기동 5,000톤, 알루미늄 폐품 및 비행기 폐기체 1,200톤, 동전 및 유기회수품 7,000톤, 합금철 1,800톤, 아연 1,100톤 등

朝鮮銀行調査部(1948), 朝鮮經濟年報,

중요 공산품 부족량 추이(1944.10)

물자명	단위	조선생산	조선수요	부족량	부족률(%)
석탄	천톤	20,000	11,230	8,770	78
공업용	톤	25,000	60,000	35,000	59
식용용	톤	320,000	458,024	138,024	31
소다회	톤	7,200	12,300	5,100	42
유산	톤	782,680	786,300	3,720	1
알코올	톤	2,000	4,100	2,100	52
인광석·인회석	톤	45,000	78,000	33,000	4
쌀	천석	16,606	17,261	655	4
보리	톤	4,599	6,819	2,220	33
밀	톤	1,909	1,990	81	5
옥수수	천톤	165	173	8	5
콩	톤	389,000	434,601	45,601	11
보통강강재	톤	119,000	220,000	2,000	9
보통강하강	톤	4,000	5,000	1,000	20
내화벽돌	톤	120,000	150,000	30,000	20
전기동	톤	1,200	2,000	800	40
수정석	톤	3,700	5,000	1,300	26
비치코크스	톤	2,000	5,500	3,500	64
인견사	천봉도	7,200	9,000	1,200	20
스프	톤	8,880	10,380	1,500	15
양지	톤	21,700	33,372	11,672	35
항공기용재	톤	70	200	130	65
철목	톤	1,143	1,600	457	29
경목	톤	2,124	2,400	276	12
전주	톤	224	234	10	5

중요공산품의 대외유출 추정량(1944.10)

물자명	단위	조선생산	조선수요	재고유출	유출률(%)
보통강주강	톤	15,000	12,000	300	25
보통선	톤	822,000	46,000	776,000	1,686
철광석	천톤	4,100	3,584	516	14
아연	천톤	6,000	1,800	4,200	233
아연	톤	11,000	2,100	8,900	423
알루미늄	톤	32,300	3,700	28,600	772
방적용 면화	천擔	489	276	213	77
제면용 면화	톤	68	35	33	94
양모	俄	781	245	536	218
탄닌재료	톤	1,800	600	1,200	200
차량-선박	천톤	468	239	229	95
일반용재	톤	5,454	4,871	583	11
농조산(98%)	톤	12,000	4,500	7,500	166
가성소다	천톤	19	15	4	24
희조산(90%)	톤	20,000	11,230	8,770	78
시멘트	천톤	1,200	952	248	26
순벤졸	톤	810	300	510	170
트루올	톤	150	50	100	200
카바이드	톤	110,000	55,305	54,295	98
아세톤	톤	770	26	744	2,861
메탄올	톤	11,470	682	10,788	1,581
유안	천톤	468	385	83	21
석회질소	톤	24,500	14,400	10,100	70

조선의 공산품 수요-공급 (단위:천 원·%)

연도	공급력				수요				총계	조선내 공급률	명목 자율 급
	공산액(A)	수입액(B)	조선내수요(C)	수입액(D)	C+D	조선내 공급률	명목 자율 급				
1939	1,466,188	53.2	1,291,732	46.8	2,046,349	74.2	711,571	25.8	2,757,920	36.9	72.6
1941	1,722,225	54.6	1,434,144	45.4	2,454,969	77.8	701,400	22.2	3,156,369	41.6	70.1
1943	2,050,000	64.1	1,146,764	35.9	2,470,414	77.3	726,350	22.7	3,196,764	53.6	83

비고: ① 純朝鮮內供給率=(A-D)/C, ② 朝鮮內需要=(A+B)-D, ③ 名目自給率=A/C.

조선제철 소형용광로 가동 실태

용광로	가동일시	가동중단	중단원인	비고
제1호기	1943.11.12	1943.11.19	가스폭발	1944.2.15. 재가동
제2호기	1943.12.8	1944.3	연료부족	-
-	-	1944.7	-	-
-	-	1944.12.17	수도관과	-
제3호기	1944.1.20	1944.3	연료부족	-
-	-	1944.7	-	-
-	-	-	-	-
제4호기	1944.3.28	1944.7	-	-
제5호기	1944.5.17	-	-	-
제6호기	1944.7.30	1944.10.14	-	-
제7호기~10호기	-	-	-	-

자료: 東洋拓殖株式會社. 앞의 자료, 일본국립공민서관(배석만(2010), 『태평양전쟁기 조선제철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1941~1945)』, 『사학연구』 제100호, 819쪽 제인용)

업종별 불변생산액 상황 (단위:천원)

업종	1941	1943	배율
방직공업	159,449	160,212	1.00
금속공업	73,880	139,476	1.89
기계공업	59,227	53,465	0.90
요업	35,524	41,842	1.18
화학공업	269,466	278,952	1.04
목재공업	58,639	55,790	0.95
인쇄제본	13,393	11,158	0.83
식료품공업	234,858	185,968	0.79
가스전기업	12284	13,947	1.13
합계	922,802	935,089	1.01

출전: 大藏省 管理局(1985),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通卷 第7卷 朝鮮編 第6分冊

1944년도 철강 생산계획과 실적 (단위: 천톤, %)

생산품목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총계획	총실적	실적비
보통선	377,800	310,062	392,200	374,980	770,000	685,042	89
보통강강괴	59,100	57,216	60,900	59,100	120,000	116,316	97
보통강강재	50,600	44,927	50,400	43,100	101,000	88,027	87
저인선	12,400	17,181	12,600	12,600	25,000	19,781	79
제강원철	35,900	29,979	45,100	36,700	81,000	66,679	82
특수강강재	10,000	10,619	15,000	15,000	25,000	25,619	102
합금철	5,193	5,442	7,507	5,595	12,700	11,037	87
보통강단강	835	1,415	3,165	1,830	4,000	3,245	81
보통강주강	7,030	7,581	7,970	7,890	15,000	15,471	103

출전: 近藤一編(1964), 太平洋戰下ノ朝鮮 第5卷, 23쪽.

조선석탄의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과 실적 (단위: 천톤)

연도	유연탄				무연탄				합계		
	예정계획	수정계획	실적	수입비중	예정계획	수정계획	실적	수입비중	예정계획	수정계획	실적
1942	3,000	-	2,730	17.4	4,100	-	3,931	-	7,100	-	6,661
1943	3,000	2,900	2,430	26.5	4,500	4,200	4,132	0.2	7,700	7,100	6,589
1944	3,000	2,600	2,519	55.6	5,100	4,500	4,530	24.3	8,100	7,100	7,049
1945	4,530	3,460	-	-	6,100	5,890	-	-	10,630	9,350	-
1946	4,730	-	-	-	6,710	-	-	-	11,440	-	-

금속 및 금속제품의 수급 (단위:천 원·%)

연도	공급력		할당력		총계	
	공산액(A)	수입액(B)	조선내 수요(C)	수출입액(D)	순조선내공급률(E)	명목자급률(F)
1941	137,883	212,608	184,148	166,343	-15.4	75
1942	207,547	175,441	219,558	163,430	20	95
1943	280,000	147,668	233,210	194,458	36.7	120
1944	350,000	168,425	216,503	247,922	47.1	162

비고: ① 純朝鮮內供給率(E)=(A-D)/C, ② 朝鮮內需要(C)=(A+B)-D, ③ 自給率(F)=A/C.
출전: 朝鮮銀行調査部(1949), 朝鮮經濟統計要覽, 87쪽의 [표 30]에서 재작성.

1940년도 조선 내 기계제품의 수급상황 (단위:천 원)

분야	종목	생산액	수입	수출	조선내수요	조선내공급률
정밀기기	기관 및 부속품	97	2,802	320	2,579	3.7
	원동기	1,609	22,044	888	22,765	7.1
	제조가공용기계	24,936	104,323	11,200	116,059	19.6
	소계	26,642	175,976	14,994	187,624	14.2
일반기기	도량형기	1,153	840	35	1,958	60
	의료기	51	1,663	250	1,464	3.5
	전신·전화기	15	5,251	87	5,179	0.3
	자동차 부속품	15	5,744	1,061	4,698	0.3
	선박	5,575	5,914	523	10,966	50.8
	소계	22,742	82,016	12,089	92,669	35.7
총계	-	75,699	257,992	27,083	306,609	24.7

조선의 기업정비

1943년 10월 26일 기업정비위원회 제1회 위원회 「기업정비기본요강」 입안

- (1) 정비의 주체로서 일본본토는 통제회가 중심인 반면, 조선은 통제회가 없었고, 「상공조합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부 기업정리위원회가 주도
- (2), 조선의 경우는 “제1종과 제3종 공업의 엄밀한 구분이 곤란하고 제1종에 속하는 것이 유난히 적었기 때문에 정리계획도 제2종 공업부문의 확충과 중소기업자의 정리”로 귀결

1944년 2월 18일에 일본본토에서 「제2종 부문 기업정비에 관한 건」 공포

총독부 「제2종 공업부문의 기업정비 조치」, 「기계공업정비요강」 공포 → 항공기의 증산을 위한 기업정비 개시

- 1944년 2월 18일(제1차 기업정비 지정 업종)
- ◆ 총독부 소관업종- 제3종 공업 가운데 제약업·어유비제조업·유리제품제조업·제사업·진면제조업·양곡가공업·소주제조업·아미노산공업·인쇄업 등 10개 업종
- ◆ 총독부-도(道) 공동소관- 제3종 공업 중에서 견(綿)·인견(人絹)·직물업·메리야스업·피복제조업·가구제조업·왜나막신제조업·과자제조업·제면업 등 7개 업종 등 총 17개 업종

제2차 정비- 1944년 6월에 정리위원회의 답신안 형식으로 결정되었고, 8월부터 실행

- ◆ 총독부 소관- 식육가공업[통조림과 식료품제조업 제외], 경화유·지방산·글리세린제조업
- ◆ 총독부[총독부-도 공동소관]소관은 제3종 공업 중 제면업 및 피모가공업 등 6개 업종

9. 공업 시설(설비)의 붕괴 과정

폐품 회수 단계 대용품 공업화와 연계

금속 회수 단계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과 연계- 강제양도 명령제(1942.9)

기업 정비 단계 - 결전비상조치요강(1944. 2. 25) 및 기업정비(1944.2)와 연계
- 중요물자영단 발족(1944.2)

시설 회수 단계 유휴시설 정리요강(1943.7, 개정 금속회수령(1943.9- 신규 57종 회수) 등 기반 44년 3월부터 시설회수

기업 소개 단계 도시 및 인력, 기업 및 공장 통폐합 및 근교 이전(1945.4.1)

본토에서 「전력증강기업정비요강」(1943.6.1) 공포

1943년 10월까지 “섬유공업에서는 면사방직업·스프사방직업·직물제조업·메리야스제조업 등 20여종의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특히 방직업 분야는 제23차 정비가 진행 중, 화학공업에서는 고무·피혁·도자기·유리·비누 등 15종의 정비가 완료, 도료·염료 등 10여종이 진행중이다. 금속공업에서는 함석·삼류·기계·칼[刃物] 등 소위 철강부문의 제2차 제품공업의 정비가 진행중. 기계공업은 「기계철강제품공업정비요강」에 기초하여 현재 전반에 걸쳐서 정비중,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것은 20개 업종, 정비중인 것이 20개 업종.”

- 총독부 상공과 구리아(栗屋幸衛) 사무관(1943.10)

업종별 전력수용자수

연도 업종	1943년			1944년			증감상황		
	조선 북부	조선 남부	합계	북부	남부	합계	북부	남부	합계
금속공업	773	883	1,661	543	890	1,433	-230	7	223
기계기구	269	355	624	366	434	800	97	79	176
요업	100	135	235	121	183	304	21	48	69
화학공업	177	330	507	233	382	615	56	52	108
제재목재	800	909	1,709	917	975	1,892	117	66	183
중공업	2,119	2,612	4,736	2,180	2,864	5,044	61	252	313
방직공업	552	632	1,184	522	635	1,207	-30	3	-27
인쇄제본	187	242	429	187	244	431	0	2	2
식료품	2,966	4,927	7,893	3,106	5,078	8,181	140	151	291
잡공업	1,245	518	1,763	1,051	570	1,621	-194	62	-132
경공업계	4,950	6,319	69	4,866	6,527	11,393	-84	218	134
*기타업체	28,760	47,578	76,338	3,855	23,953	27,808	-23,953	-23,625	-47,578
광업	250	209	459	190	110	300	-60	-99	-159
농수산업	76	245	321	95	278	373	19	52	71
총계	36,160	56,963	93,123	11,183	33,782	44,965	-24,997	-23,181	-48,178
증지수	100	100	100	31	59	48	69	41	52

총독부 지정 경성부 내 소개공지대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4월 7일 및 19일자

지정 일	번호	지대명	기점	종점	폭(미터)	길이(미터)
제1차 지정	1	鐘路西四軒町線	鐘路5丁目	西四軒町線	50	1,100
	2	宗廟大和町線	宗廟	大和町2丁目	50	1,180
	3	慶雲町南山町線	慶雲町	南山町3丁目	50	1,800
제2차 지정	4	京城驛竹峯町線	京城驛	竹添町3丁目	30(일부절도선로 양측)	1,080
	5	京城驛岡崎町線	京城驛	岡崎町	30(절도선로동쪽)	1,400
	6	大和町新堂町線	大和町2丁目	新堂町	40	1,680
	7	京城驛旭町線	吉野町1丁目	旭町2丁目	40	1,080
	8	太平通線	太平通2丁目	太平通2丁目	50	380
	9	古市町三板通線	古市町	三板通	30	500
	10	岡崎町線	岡崎町	岡崎町	40	300
	11	元町大島町線	元町2丁目	大島町	40	330
	12	靑葉町線	靑葉町2丁目	靑葉町	40	190
	13	西界町線	西界町	西界町	40	220
	14	天然町松月町線	天然町	松月町	40	480
	15	內賣町社樓樓線	內賣町	社樓町	40	350
	16	靑洞町嘉會町線	靑洞町	嘉會町	30	900
	17	清涼理驛回基町線	典農町	回基町	30(절도선로서쪽)	1,100
	18	永登浦驛跨線橋線	永登浦町	新吉町	30(절도선로북쪽)	150
	19	道林町線	道林町	道林町	30(절도선로남쪽)	70

1945년 4월 19일에는 소개지역으로 경성-부산-인천-평양 등 4곳이 지정되었고 4월 20일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重要都市 疏開協力運動 要綱」이 공포되었다(『每日新報』, 1945.4.19).

製材業 사례

시기별 특징	연도별	공장수	증감	노동자 수	증감상 황
기업정비직전	1943.4 ~ 1944.3	1,359	0	14,598	0
기업정비기간	1944.4 ~ 1945.3	1,074	-285	8,985	-5,640
기업소개기간	1945.4 ~ 1946.3	576	-498	5,886	-3,072
해방후기간	1946.4 ~ 1947.3	542	-34	11,315	5,429

출전: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III-174, 175쪽

8.15 직전의 비극

태평양전쟁 전에 1사람 당 쌀 수요량이 본토의 5분의 1정도였다면, 전쟁이 진행되던 그 때 조선에는 허기를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음식물이 배급되었다. 말을 막 배우는 아이의 첫마디와 죽어가는 노인의 마지막 말, 그것이 '하이규[배급]'라는 말을 우리는 조선인에게서 수없이 들었다. 배급표로 지급되는 쌀, 정확히 말해서 대체물(옥수수수수)은 아무리 길어도 2주일을 넘기지 못하였다. 생선도 같, 그밖의 다른 식료품은 일본인에게만 지급되었다. 채소도 조선인들에게 부정기적으로 배급되었다...(중략) ...서울에서 대부분의 가게와 수리점이 문을 닫았다. 배급소 근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굶주림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고통을 당하였다. 1944~1945년 겨울에 거의 모든 집이 불을 때지 못하였다."

파나시아악교브나 사브쉬나 저, 김명호 역(1996), 식민지 조선에서, 한울

본 저작의 결론 : 총독부의 공업정책은...

- ① 조선독자 공업화 가능성을 배제한 **본토 위주 공업화**
- ② 민족 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난 **민족 차별의 공업화**
- ③ 분절적이고 지역 할거적인 **전쟁 편승 공업화**
- ④ 산업연관이 결여된 대체재 생산과 조악한 **대용품 대체자원 중심의 공업화**
- ⑤ 투자와 노동의 주체여야 할 조선인의 능력 신장보다 노동자 희생과 **시장 질서의 희생** 위에 **균림하는 '내핍과 복종의 공업화'**

4. 결론 : 파탄과 왜곡과 차별과 희생 위에 선 전쟁편승의 비극적 공업화

- ◆ 8-15때 조선 내에서 **일본인 자본지배율이 94%** 기계공작산업의 자급율 1940년 24.7%에 불과- 그나마 정밀기기 분야는 14.2%
- ◆ **국민경제 재생산에 기여도 낮음.** (예)고품위 철강 생산 → 일본으로 유출 → 국내 기계산업과 연관 못함. → 자급률 미미
- ◆ 기능공 양성 미약(기능 2중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중소공업에서는 2급신고표준에 해당하는 고급물. 마이크로미터(측미기). 지그(jig), 측정기 등의 사용법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殖銀調査月報 1944년 6월호, 17面).
- ◆ 고급기술자 양성은 식민지 말기 시도는 되나 미약함. **국토종합계획, 시가지계획 등 국책사업에 조선인 기업(가) 철저 배제**
<국토계획위원회규정>(1940.9.29)으로 설립된 위원회의 구성에서 조선인 경제인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고 간사회(幹事會)에도 전혀 조선인이 포함되지 않음.
- ◆ 영도대교 건설 사례(1934)- **일본인 거주 지역에 집중적 공민 구제 사업 실시**
- ◆ **기업허가령 이후 전면 조선인 기업 설립 퇴조-->** 귀속기업체 중 조선인 출자회사 증가

	10%미만	10-50%	50%이상	합계
중앙	14	21	26	61
지방	183	230	277	690
합계	197	251	303	751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

향후 과제

- ◆ 단위 지역사, 기업사, 경영사 등의 심화 축적
- ◆ 공산품 시장 동향과 물가 변동 이해 폭 확대
- ◆ 정책 동향에 더하여 공업화 실상 규명
- ◆ 조선인 자본의 형성과 지역 네트워크(연고) 이해
- ◆ 조선에서의 물자수급구조와 그 변동상 확인

감사합니다.

제5발표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허광무
(강평연)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허광무
(강평연)

1.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노동력 동원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이 자행한 한인 인력동원은 지역, 대상, 유형 등에 있어서 가히 한반도 인력을 ‘몽땅’ 동원할 정도의 기세와 규모에 있었다. 한인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위안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동원되었으며, 그 지역은 일본‘제국’의 침략적 야욕이 닿는 모든 곳이 해당되었다. 동원 대상자는 청장년은 물론이거니와 학생, 여성 그리고 어린 아이와 고령자, 심지어 수형자¹⁾도 예외가 아니었다.

1] 대표적으로는 중국 하이난도(海南島)에 동원된 조선인 수형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명 남방파견대로 명명된 수인 노동으로 한인 2,000명 중 1,200명 넘는 사람이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다. 강제동원 피해 사망·행방불명자는 최소 21~2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반도내 제외). 수인(囚人)의 한반도내 노무동원에 대해서는 이종민, 「태평양전쟁 말기의 수인(囚人) 동원 연구(1943~1945)-형무소 보국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33, 2017 ; 동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부산형무소의 수형자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42, 2022 참조.

1)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 인력동원의 규모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제가 조선인을 한반도 내외로 동원한 인원은 연인원으로 780만 명에 육박한다.

출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 135쪽.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동원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무동원으로 총 750만 명(중복포함)에 육박한다. 군인동원은 20만 9,279명, 군무원(군속) 동원은 6만 668명이었다. 노무동원 중에서도 한반도 내 동원이 648만여 명으로 한반도 외 동원 104만여 명을 압도했다.

〈표 1〉 강제동원 피해 현황

유형	구분		동원자수	소계
군인 동원	한반도내		51,948	209,279
	한반도외		157,331	
군무원 동원	한반도내		12,468	60,668
	한반도외		48,200	
노무자 동원	한반도내	도내동원	5,782,581	6,488,467
		관알선	402,062	
		국민징용	303,824	
	한반도외	국민징용	222,217	1,045,962
할당모집, 관알선		823,745		
계				7,804,376

2) 최대규모의 인력 동원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 내 동원은 법적 강제력을 용인한 ‘국민징용령’에 따른 동원에서도 30만 명에 이르러 한반도 밖의 지역으로 혹은 한반도 외 지역에서 동원한 22만 명에 앞서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동원에 대한 인식이 한반도 외 동원에 비해 낮은 이유는 근로보국대와 같은 형태로 동원한 까닭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근로보국대는 국가의 요청에 부응해 온 전래의 ‘부역(賦役)’과 같이 국가에 요청에 보답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어 한반도 내 동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부역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다보니 강제동원·강제노동이라는 피해의식이 약하다. 피해자단체조차도 한반도 내 동원은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한반도 내 동원은 한국 정부의 피해자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시기별 강제동원 연구현황²⁾

① 1960년대~1980년대 :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에 관해서는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1965, 미래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겠다. 그 후 강제동원 연구는 박경식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회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1972년 총련 산하에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결성되면서 오키나와지역을 시작으로 홋카이도·남사할린·치시마(1973), 규슈지역(1974)에 대한 자료발굴 및 지역별, 산업별 강제동원의 실태 규명에 의존한 바가 컸다.

② 1990년대 :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강제동원 관련자료의 요청으로 강제동원 명부류 등이 한국에 제공되면서 한일 양국의 관심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기업책임을 추궁하는 김영달과 고쇼 다다시 등의 연구가 주목되는 가운데 동시기 한국에서의 연구는 주제와 대상이 일본에 비해 제한적이면서도 사가현 탄광 노무자의 피해를 천착한 김민영의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에 관한 연구』(1995)가 발표되었다. 한국정부차원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작성한 『해외희생자유해현황조사사업보고서』(1995~1996)가 있다. 동 보고서는 일본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현황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한 최초로 보고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그런데 특히 1990년대에는 일본정부

2] 신주백은 강제동원 연구 현황을 제1기:연구의 태동(1970~80년대), 제2기:한일관계의 비판적 재검토와 신진 연구자의 등장(1990년대~2000년대 초), 제3기:동원과 통제를 결합한 강제동원사 연구의 본격화(2005년경~)으로 나누고 있다. 신주백,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7호, 2014.

3] 특히 1990년대에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명부를 한국정부에 인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촉발되어 각종 자료집이 편성된 것이 주목된다. 金英達·飛田雄一編, 『朝鮮人·中國人強制連行·強制労働資料集』, 전5권, 神戸學生青年センタ出版部, 1990~1994. 長澤秀編,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 綠蔭書房, 1996; 同, 『戰時下朝鮮人中國人連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全4卷, 綠蔭書房1992. 林えいだい,

가 한국정부에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촉발되어 각종 관련 자료집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시기였다. 가령 김영달·히다 유이치(飛田雄一) 편 『朝鮮人・中國人強制連行・強制動勞資料集』(전5권)을 비롯하여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편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과 『戰時下朝鮮人中國人連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전4권) 등이 편찬되었고,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일본 지역별 피해조사 기록을 집중적으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③2000년대 : 이 시기는 강제동원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각변동이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지각변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 연구분과와 한국정부 조직인 강제동원위원회이다.

2000년에 창립한 한일민족문제학회는 일찌감치 학회내에 강제연행문제 연구분과를 조직하여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2002년~2022년 현재까지 강제동원 관련으로 수록된 논문만 약 60여 편에 육박한다.

그 후 강제연행문제 연구분과는 2011년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로 분리·독립하여 자료수집과 연구, 대중강좌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현재 총29권의 장서를 발간하였다.⁴⁾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1~4, 明石書店, 1991. 同『中國人・朝鮮人・オランダ人・イギリス人』上・下巻, 明石書店, 1991. 樋口雄一編, 『協和會關係資料集』全5巻, 綠蔭書房, 1995; 同,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集』, 綠蔭書房, 2000.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지역별 조사를 정리하여 출간한 것도 이 무렵이다.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四國編』, 柏書房199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兵庫編』, 柏書房,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大阪編』, 柏書房,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中部・東海編』, 柏書房, 1997. 2000년대에는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中國編』, 柏書房, 2001;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關東編』, 柏書房, 2002을 출간, 홋카이도 등 북쪽지역은 1974년에 출간. 『朝鮮人強制連行強制勞働の記録; 北海道・千島・樺太篇』, 現代史出版會, 1974.

4) 2000년대 단행본 연구로 박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1938~1945)』, 신서원, 2001 및 정혜경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된다.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연구』, 경인문화사, 2003;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1-일본편』, 도서출판 선인, 2006; 『조선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노동』, 도서출판 선인, 2013; 『봄날은 간다-방적공장 소녀, 징용』, 도서출판 선인, 2013;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18; 『팩트로 보는 일제 말기 강제동원1-'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무자』, 도서출판 선인, 2019;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등 참조.

〈표 2〉 『한일민족문제연구』에 수록된 강제동원 관련 논문

연도	수록논문
2002	정혜경, 공문서의 미시적 구조 인식으로 본 남양농업이민(1939~1940) 표영수,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2003	박명수,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의 "조선인" 강제연행 자료에 대하여 김민영, 식민지시대 노무동원 노동자의 송출과 철도·연락선 한혜인,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1939 40년의 조선총독부 정책과 부산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04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原爆被害者)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정혜경, 국내 강제연행 연구, 미래를 위한 제언 윤명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1990년대를 중심으로
2005	시라토 히토야스,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日鐵輪西製鐵所朝鮮人殘留遺骨と北海道の戦後遺骨處理問題 오일환,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1950년대 재중일본인, 재일화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연구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의 거울- 정혜경,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일제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제언 야마다 쇼지, 朝鮮女子勤勞挺身隊の動員と鐵工業への朝鮮人男子の戦時動員との比較検討 -日本「内地」の工業分野への朝鮮人戦時動員方式の特徴について- 신주백,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 1942.12.~1945- 남상구, 전후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골 정책 -「한국인 전몰자」유골문제를 중심으로-
2007	우쓰미 아이코, 강제연행에 관한 역사인식과 일본의 내셔널리즘 허광무, 전시기 조세이(長生)탄광과 조선인 노무동원 -생존자증언에 의한 수몰사건의 재구성과 노동실태- 배영미, 일제말기 조선인 특공대원의 '지원'과 '특공사(特攻死)'
2008	정혜경, 1944년에 일본 본토로 '전환배치(轉換配置)'된 사할린(樺太)의 조선인 광부 김명환, 1943~1944년 팔라우(Palau)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관계철」분석을 중심으로- 김윤미,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개로(國民皆勞)' -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김광열,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 -일제강제동원피해 규명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표영수, 오일환, 김명옥, 김남영, 조선인 군인·군속 관련 '공탁서'·'공탁명세서' 기초분석
2009	김명환,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남양군도 이주실태(1914~1938) 김민영,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 전북지역의 사례 정혜경, 국내 소장 전시체제가 조선인 인적동원 관련 명부자료의 실태 및 활용방안 모리야 요시히코, 기업 자료 중 각종 명부류의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자에 관한 사실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연행기 조선인 명부 조사 현황과 과제 김윤미,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박인철, 1930~1940년대 조선인의 만주이주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 정혜경, 전시체제가 일본 본토 조선인노무자의 '전환배치(轉換配置)' -광산 명부를 중심으로- 박정애, 총동원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형업' 억제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오일환,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봉환을 둘러싼 한일 정부 간 협상에 관한 소고 -1969년, 제3차 한일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연도	수록논문
2010	김윤미, 전시체제기 조선인 '만주개척청년의용대'에 관한 연구 김명환, 일제말기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인 동원실태 김광열, 1945년 전반기의 일본육군 농경근무대(農耕勤務隊)와 피동원 한인 -나가노(長野)현 배치 부대를 중심으로- 정애영, 귀국해난사고를 통해 본 강제동원과 귀환
2011	허광무,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강정숙, 제2차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의 간호부 편입에 관한 연구 유수명부를 중심으로-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노무자의 경험과 서사 조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조선인 포로감시원 강제동원 하승현, 한국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해결모색
2012	김윤미, 일제말기 거문도 요새화와 조선인 동원 윤지현, 사망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1925~1945)
2013	심재욱, [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자료(2009)]의 미시적분석 정혜경, 일제말기 경북지역 출신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저항
2014	권미현, 일제말기 강제동원 기록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제언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과 문화콘텐츠 구축 방법론- 신주백,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2015	조건, 일제 말기 관동군(關東軍)의 한인(韓人) 동원과 피해 실태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관련 통계 자료
2016	정혜경, 일제말기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업소 조선인 노무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조건, 일제 말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전쟁미담' 생산과 조선인 군인 동원
2017	심재욱, 『육군운수부군속명부』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운수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이종민, 태평양전쟁 말기의 수인(囚人) 동원 연구(1943~1945) - 형무소 보국대를 중심으로 - 정혜경,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
2018	정혜경, 일제말기 제주도 군사시설공사에 전환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한반도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배경을 중심으로- 허광무, 일제말기 경찰기록으로 본 일본지역 강제동원 조선인노무자의 관리와 단속 -'도주'노무자 수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김경남, 전시체제기 중층적 구조로 본 강제동원
2019	김광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22	이종민,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부산형무소의 수형자 동원 김광열, 이연식,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군수동원법제 정비와 조선인 동원의 강화 -군수지정회사 노무동원 연구의 시론-

그런데, 본격적인 자료조사, 발굴, 연구의 일대전기를 가져온 것은 한국정부기관인 강제동원 위원회가 수립되면서이다. 2004년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출범한 위원회는 정치 풍파에 휘둘리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조직으로 거듭났다.⁵⁾

2004년 11월에 출범하여 2015년 12월 해산되기까지 강제동원위원회는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신청접수한 52건 중 28건을 조사개시하고,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개시한 5건을 포함한 33건을 조사완료하고 그중 30건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표 3〉 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현황

구분	계	조사개시			각하	취하
		소계	완료	판별		
계	57	33	32	1	4	20
신청 접수	52	28	27	1	4	20
직권 조사	5	5	5			

이 외에도 강제동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강제동원 피해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경우도 4건 있었다. 그중에는 2015년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혁명 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한 일명 '군함도'=하시마(端島)탄광에 관한 실태조사도 포함되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당사자를 직접 면담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술기록집으로 발간하였다. 2005년 『당꼬라고요?』의 발간을 시작으로 2013년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총 16권의 구술기록집을 발간하였다. 생존자의 체험은 그동안 한일의 어느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어, 문서와 문서, 문서와 명부 간 괴리나 간극을 좁히는 길라잡이가 되었다.

5) 한국정부 위원회의 탄생, 활동, 해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는 허광무·정혜경·오일환, 『일제 강제동원, 정부가 중단한 지상규명-11년의 비판적 회고』, 도서출판 선인, 2020 참조,

〈표 4〉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발간 현황

	제목	발간일
1	강제동원구술기록집1 『당교라고요?』	2005.12.
2	강제동원구술기록집2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2006.08.
3	강제동원구술기록집3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뿔 뻗 했네』	2006.10.
4	강제동원구술기록집4 『가긴 어딜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2006.10.
5	강제동원구술기록집5 『갑자·을축생은 군인에 가야한다』	2006.12.
6	강제동원구술기록집6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2007.05.
7	강제동원구술기록집7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1』	2007.10.
8	강제동원구술기록집8 『지독한 이별 : 사할린 이중징용 진상조사 구술기록』	2007.12.
9	강제동원구술기록집9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	2008.04.
10	강제동원구술기록집10 『굴 파러 군대 갔어』	2008.10.
11	강제동원구술기록집11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홋카이도 강제동원 피해 구술자료집』	2009.12.
12	강제동원진상조사구술자료집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이 아니다』	2008.08.
13	강제동원진상조사구술자료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	2008.12.
14	강제동원진상조사구술자료집 『내 몸에 새겨진 8월』	2008.12.
15	강제동원사진자료집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일본 홋카이도편』	2009.12.
16	강제동원구술기록집12 『들리나요? - 열두 소녀의 이야기』	2013.02.

이와 같이 한국정부 위원회의 조사 지원활동과 학술단체의 연구활동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그간 규명하지 못했던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의 여러 유형과 연구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이 시기는 강제동원·강제노동 연구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본서 구성의 특징 및 내용

본서는 조선인 노동자의 인력 동원이 노동자 개인과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한 정책적·조직적·계획적·집단적·폭력적인 방법에 따른 강제동원·강제노동이었음을 회사 및 정부측 문서자료, 노무담당자 수기 등 기록물, 피해당사자 체험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동원을 모집·관알선·징용

과 같이 동원형태(이입경로)에 국한시켜 그 후 작업장에서 자행된 비인도적·비인륜적 강제노동의 실태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는 동원형태(동원방법)에 의해 규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송출 지역의 실태를 시작으로 동원지에서의 노동생활, 노동환경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내용은 제1장부터 제6장에 이르기까지 전권에 걸쳐서 규명하고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1부 전시체제와 노무동원

- 제1장 국가총동원체제와 노무동원
 - 제1절 국가총동원체제와 국민동원
 - 제2절 조선의 노무동원 시스템(행정조직)
- 제2장 노무동원 경로: 모집, 국민징용, 관알선
 - 제1절 모집에 의한 노무동원
 - 제2절 '국민징용령' 제정과 적용
 - 제3절 관알선에 의한 노무동원
 - 제4절 동원 방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제3장 근로보국대 제도
 - 제1절 근로보국대 제도 수립
 - 제2절 근로보국대 운용과 실태
- 제4장 동원 지역별 직종별 노무동원 실태
 - 제1절 일본
 - 제2절 한반도
 - 제3절 기타
- 제5장 여성과 아동동원
 - 제1절 노무자가 된 여성
 - 제2절 조선여자근로정신대
 - 제3절 아동동원

제2부 끝나지 않은 역사청산 : 현안과 과제

- 제6장 전시 노무동원이 남긴 과제
 - 제1절 광복과 해방, 돌아오지 못한 이들
 - 제2절 돌려받지 못한 임금과 권리
 - 제3절 전시 노무동원의 강제성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력 동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명령권 발동의 정점에는 1938년 4월 1일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이 있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정책적, 조직적 통제 관리의

정점에 위치하며 각종 규제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가령 아래 표와 같이 칙령으로 공포되는 각종 명령은 ‘국가총동원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발동되었다.

〈표 5〉 「국가총동원법」 발동으로 제정된 칙령 현황

국가총동원법	칙령	비고
제4조	국민징용령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국민근로동원령	
제5조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제6조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노무조정령으로 통합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청소년고입제한령	노무조정령으로 통합
	노무조정령	
제13조	선원사용등통제령	
	공장사업장관리령	
제21조	의료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선원직업능력신고령	
	수의사직업능력신고령	
제22조	학교기능자양성령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	
	선박운반기능자양성령	

본서에서 다른 내용 중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정부가 주목하는 동원형태, 모집, 관알선, 징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노무동원의 동원형태, 경로에 대해서는 통상 모집(1939~41), 관알선(1942~1943), 징용(1944~1945)로 나누어 이해하는 하는데, 이를 ①모집→관알선→징용의 단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②단계적 이행이다 보니 단절될 뿐만 아니라 강제성의 강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노무동원의 강제성은 모집, 관알선, 징용 동원형태가 달라도 동일했다. 아래는 조선인 노무동원에 직접 관여했던 관할 부서 직원, 모집원의 증언이다.

①모집은 모집취체규칙에 따른 각 사 모집종사자에 의한 모집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는 전술한 사유에 의해 조선 관권에 의해 각 도, 각 군, 각 면에서 강제공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스미토모(住友)광업, 1939년 9월 22일, [한일민족문제연구]제42호)

②탄광에서 모집하러 가서, 면사무소와 경찰에게 ‘탄광 직원이’ 가는 것을 보고서 모집이 온 걸 알게 되면 부락의 남자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집 아들이 어딘가에 도망갔다고 시내 주재소에 보고하러 갑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北海道立勞働科學研究所, 『石炭鉱業の鉱員充足事情の変遷』)

③이번에는 알선(관알선)이라고는 하지만, 도청 계원 말에 따르면 종전의 모집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중략〉 각 면장과 군, 면 계원에게 단단히 의뢰하여 교통비도 종전대로 필요한 모양으로 (닛소 데시오(日曹 天鹽)광업소 노무보도원, 1942년 9월 20일)

④현재 신청자는 전혀 없어 예정인원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각 면 담당 계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나아가 군청을 움직여서 징용령 식으로 끌어내는 수단을 의뢰할까 생각합니다. (닛소 데시오(日曹 天鹽)광업소 노무보도원, 1942년 9월 20일)

⑤전시 중 석탄은 모두 조선인이 캐다. 조선인이 없었다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뜻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어찌될지 모른다면 결국 가기 싫다…… 그래서 트럭을 몰고 가서 마을에서 강제로 끌고 온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水田直昌)의 증언, 1954년 3월 6일)

⑥징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출동은 완전히 납치와 같은 상태이다. 만일 사전에 이를 알리면 모두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야습, 유혹, 기타 각종 방책을 강구하여 인질적인 약탈, 납치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내무성 관리국장 앞 복명서」, 1944.7.31.)

이상과 같이, 인력 공출 단계에서조차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압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집, 관알선, 징용은 단계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 미쓰이(三井)광업주식회사 미이케(三池)탄광 ‘입소경로’별 동원시기

입소경로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모집	3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	1월·2월·6월	—
관알선	2월·9월·11월·12월	4월·8월·9월·11월	1월·2월·3월·4월·8월·12월	—
징용	—	—	4월·6월·7월	1월·4월

후쿠오카현에 소재한 미쓰이(三井)광업 미이케(三池)탄광은 위 표와 같이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하는데 모집, 관알선, 징용 등 모든 동원형태(동원방법)를 적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⁶⁾ 일본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은 1939년도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할당모집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전쟁이 확대된 1942년도에는 관알선으로 전환, 양자 간 단절이 있는 듯 이해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집과 관알선은 동시에 활용되고 있었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는 1944년에는 모집, 관알선, 징용의 세 가지 방법이 총망라되고 있어 당시 인력 동원의 절박함이 엿보인다. 또한 ‘국민징용령’의 조선인 적용은 1944년 9월부터라는 이해가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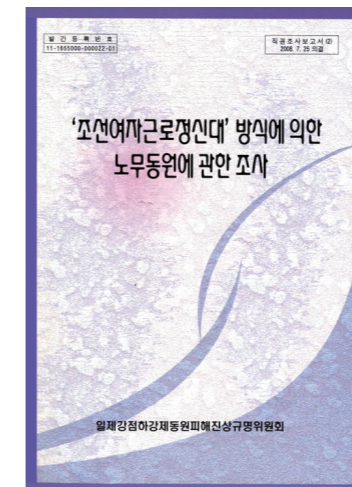
2) 여성 노무동원과 아동동원문제

특히 여성 노무동원은 여자근로정신대 조직에 의한 바 큰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강제동원위원회에서도 올바른 인식확산과

6) 미쓰비시(三菱)광업 사도(佐渡)광산의 경우, 1945년 3월에 마지막으로 조선에 직접 도향하여 조선인 노무자를 모집하였다고 한다.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通史編近・現代』, 1992, 680쪽.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향 취급요강’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한발이 심했던 조선 남부에 한정하며, 탄광 광산 등 ‘시국산업’에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집을 개시하자 할당인원수를 훨씬 넘는 인원이 응모해 왔는데, 당시 모집에 나갔던 노무계 직원은 “이것은 광산 취로를 희망한 것이 아니라 종전처럼 자유도향한 선배나 지인을 연고로 내지에서 살고 싶다는 자가 많아 시모노세키나 오사카에 도착 후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사도광산 노무과 杉本奏二의 증언, 상동).

진상규명을 위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조사에 착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2008)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생존자 인터뷰 기록을 정리하여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2008)으로 발간한 바 있다.

여성 노무동원은 동원 대상 연령의 확대로 노무동원을 강화해 온 점이 주목된다. 특히 최소 연령을 점차적으로 낮춤으로써 동원대상을 확대해 갔다. 가령, 근로보국대의 경우 20~40세 미만, 국민근로보국대는 14~25세 미만, ‘여광부갱내취업허가제’의 조선 광부부조규칙 특례의 경우 16세 이상의 부인, ‘여자정신근로령’은 12~40세 미만으로 20→16→14→12세로 최소연령이 점차 낮아져 갔다.



여자근로정신대 보고서 표지



도야마현(富山縣) 후지코시(不二越)강제(주)에 동원된 소녀

조선의 어린 아이들이 동원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공장법’(1911)에서 규정한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법적으로 평등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정부 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자 중 최연소 피해자는 아홉 살 소녀였다. 나이 어린 소녀들은 한반도 내 방적공장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본 본토 항공기제작소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다. 방적공장의 가혹한 노동환경과 중노동으로 동원된 지 수개월만에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의 나이 12살~14살이었다. 소년의 경우, 나이 어린 광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1944년 일광광산(철, 아연)에 동원된 종원의 나이는 13살이었다. 그보다 앞선 1942년에 동원된 복득은 동원 당시 12살이었다. 동원지에서 탈출하거나 혹은 징용을 기피하다 검거되어 옥중에서 사망하는 소년들도 있었

다. 이렇듯 조선의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노동력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⁷⁾

3)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본서에서는 동원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이나 노동조건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작업 중 사고사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군의 도시 공습과 귀환의 과정에서 사망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① 도시 공습 : 도시 공습에 의한 피해로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핵폭탄)에 의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피폭당한 한인 사례로는 합천이 유명한데, 식민지 조선의 경제침탈로 유민화된 합천 출신 한인들이 히로시마에 다수 거주하면서 피폭을 당했다. 그런데 히로시마는 청일전쟁 당시 대본영이 세워질 정도의 주요 군사도시로 당시 미쓰비시(三菱) 히로시마조선소, 도요(東洋)공업 등 대규모 군수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작업장에는 경성 등 경기도 일대의 조선인 청년들이 징용되었다.

나가사키의 경우에도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를 비롯하여, 가와나미(川南) 조선소, 미쓰비시 병기제작소 등 군수공장이 즐비했고, 그곳에 황해도, 함경도 등 이북출신자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충청도 등 출신자들이 동원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각 1945년 8월 6일, 8월 9일에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되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안고 귀국했다.

② 작업장 재배치(전환배치)에 따른 귀로 차단 : 사할린의 탄광이나 벌목장에 동원된 조선인은 소련의 진주로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했다. 심지어 사할린 작업장에서 규슈 탄광으로 '전환배치'된 광부들은 해방과 함께 귀로가 끊겨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③ 귀환 시 조난 : 귀환길도 녹록치 않았다. 아오모리현(靑森縣) 오미나토(大湊)항을 출발한 '우키시마호'에 승선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귀환 중 교토 마이즈루(舞

7) 조선의 소년·소녀들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정혜경, 『봄날은 간다-방적공장 소녀, 징용』, 도서출판 선인, 2013 ; 동,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참조.

鶴)항에서 폭파되어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귀환 시 조난은 한반도 외로 동원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옥매광산의 광부들은 제주도 해안 등지의 동굴을 구축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가 돌아오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⁸⁾

이와 같이 강제동원은 강제노동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강제동원 피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까닭이다.

4. 미해결 과제, 중단된 진상규명

전시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진상조사이다. 한국정부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지원을 담당하던 당시 정리한 진상조사과제만도 300여 개를 훌쩍 넘었다. 그중 위원회가 30여 개의 진상조사를 완료했으나 10%를 진행했을 뿐이다. 나머지 규명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사개시가 우선 중요하다.⁹⁾

둘째, 돌아오지 못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문제, 즉 희생자 유골 봉환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¹⁰⁾ 일본 유텐사에 안치 중이던 한인 군인·군속의 유골은 일본정부 책임하에 한국측에 봉환된 바가 있다. 그 후 한·일 양국은 일본 각지 사찰에 안치했던 노무자 유골의 국내 봉환을 준비해 왔다.¹¹⁾ 군인·군속 유골 봉환과 동일한 조건하에 일본 지

8) 옥매광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전라남도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 기초조사』, 2012년을 참조.

9)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해마다 진상조사 과제의 일부를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진행하던 때와 달리 자료접근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조사개시가 절실하다.

10) 대상지역은 중국, 하이난섬, 태평양 도서지역, 시베리아, 한반도 이북 등 방대하다. 사할린 한인 희생자의 경우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내봉환이 성사되었다.

11) 일본 지역 한인 노무자의 유골봉환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는 정혜경·오일환·허광무, 『일제 강제동원, 정부가 중단한 진상규명』, 도서출판 선인, 2020 참조.

역 노무자 유골의 봉환이 성사되어야 한다. 물론 한인 사망·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규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강제노동의 대가로 응당 받았어야 할 미수금문제이다. 일본정부가 노무자 관련으로 제공한 공탁금 명부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1부 15현의 극히 일부자료뿐이다. 자료부재로 미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관련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넷째, 해방 후 소련의 강제역류로 귀환할 수 없었던 사할린 피해자 문제이다. 사할린 광부의 경우 일본 본토로의 작업장 ‘전환배치’ 조치로 말미암아,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들과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역사가 있다. 1992년부터 영주귀국이 실현되지만 순차적 귀환이라는 굴레 때문에 한국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유족들이 있다.

다섯째, 일본의 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련의 역사왜곡 문제와 같이, 강제동원 피해를 은폐, 혹은 부정하는 움직임에 일관성 있는 태도로 문제제기하며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피해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을 지속해야 한다.¹²⁾

마지막으로 한반도 내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문제도 금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는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걸림돌로 남아 있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2) 최근, 국가기록원은 일본지역에 남겨진 한인 노무자 관련 자료를 발굴,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기업이나 일본정부 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은 물론, 일본 연구자 개인 소장의 1차 자료 등도 중요한 수집대상이다.

제6발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이송순
(고려대)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이송순
(고려대)

1. 들어가며

20세기는 인류사 최고의 생산력 발전과 함께 이를 둘러싼 이념과 전쟁의 시대였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제국주의로 나아갔고, 그 모순의 격화는 2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이라는 사건을 만들었다. 제국주의 체제는 각 '제국(국민국가-식민지)' 단위로 무한 확장을 꿈꾸며 대립했고,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제국' 공동체 내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총력전(Total war)체제를 통해 전쟁을 수행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열전은 끝났지만 이념의 대립은 냉전으로 이어졌다.

20세기 한반도는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하에 침략으로 형성된 일본제국주의는 동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며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 1945년 패전으로 일본제국주의는 막을 내렸다. 근대 세계전쟁은 군대만의 전쟁이 아닌 전장과 후방의 구분이 없는 총력전 형태였다.

서구 열강에 비해 공업생산력 수준과 물자 수급에서 상당한 핸디캡이 있는 일본제국

주의는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했다.¹⁾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생산력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군부와 관료를 중심으로 국가 내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천황제’를 앞세워 강력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파시즘 체제를 형성했다. 이것은 근대 국민국가가 지향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국가권력의 민주적 집행이라는 기본적 요구를 일축한 폭력적·억압적인 체제였다.

2. 학계의 연구동향

1) 일본제국주의 전시체제의 성격 문제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전쟁 도발은 근대제국주의 질서를 종결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의 전시체제는 지배체제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성·비합리성·반민주성을 드러냈고 이는 전후 질서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전시체제는 특정 시기의 돌출적인 현상이 아닌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이자 귀결이라 할 때 이 시기 사회질서 및 체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본학계의 동향에 대해 모리 다케마로(森武麿)는 과거 주류적 위치를 점했던 맑스주

1)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대 추축국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는데, 참전국들은 모두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고 전쟁에 돌입했다. 총력전 수행을 위한 각국의 전시경제는 전쟁 이전의 정치·사회·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미국은 중공업 부문의 우월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그것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대기업이었고, 전쟁을 통해 ‘전시 고착구조’를 형성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미국 군수산업의 토대가 되었다. 영국은 식민지와 대외투자를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미국의 원조로 상당한 정도의 전쟁 수행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성상 해상 수송력·석탄·노동력·식량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독일은 고도의 중공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고, 선제적으로 전쟁을 준비했기에 초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합국 및 그 식민지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서 석유·식량·외화 수급에서 큰 차질이 생겼다. 일본은 침략 대상인 중국·동남아시아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기에 병력 및 군수 이동에 이점이 있었지만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했을 때 중공업 생산력이 낮은 수준이었고 해상 수송력과 외화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原朗, 1995, 『日本の戦時経済 - 國際比較の視点から』 『日本の戦時経済 : 計畫と市場』, 東京大學出版會, 36쪽).

의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역사학을 포함하는 ‘전후역사학’,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관점에서 역사인구학·세계체제론·국민국가론·탈식민론 등 다양한 조류로 구성된 ‘현대역사학’, 신자유주의 역사관을 내걸고 국가주의를 창도하는 ‘역사수정주의’라는 세 계통의 역사학 조류가 상호 대항·병존하고 있는 상황²⁾이라 정리했다.³⁾

‘전후역사학’이라 통칭되는 연구는 ‘일본파시즘론’으로 대표된다. 1970년대 전반까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천황제파시즘론’과 시민사회와 사회과학을 주도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일본파시즘론’이 주목받았다.⁴⁾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체제 몰락과 냉전 해체, 탈근대론·탈식민론의 확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우익 국가주의인 ‘역사수정주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일본학계에서는 일본파시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파시즘 개념을 부정하여 논쟁을 촉발시켰던 ‘전시체제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파시즘의 ‘사회변혁’적 성격과 근대성 및 전시·전후 일본사회의 체제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총력전체제론’이 확산되었다.

‘전시체제론’은 이토 다카시(伊藤隆)가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선악’의 가치 판단이 개입

2) 森武麿, 2004, 「戦時日本の社會と經濟 - 總力戦をめぐる -」, 『一橋論叢』 131-6, 705-706쪽.

3) 일본제국주의 戰時期(1937~1945) 성격에 대한 연구사는 방기중·전상숙, 2006, 「서장:일본파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식민지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해안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02년~2004년 3년간 진행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공동연구프로젝트 ‘일제 파시즘체제와 한국사회’는 한국 근현대사학계에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제식민지기 전시체제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집단적 연구를 통해 해방후 한국사회의 식민유제 청산의 미완과 정치적 민주화, 분단극복의 과제에 대한 성찰과 역사적 재인식의 틀을 제시하려는 연구였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1930년대 후반 일제 식민통치기를 ‘식민지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이 관점에서 식민지 역사상과 그 유산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후 한국사학계에서는 일제 침략전쟁기의 강제동원, 전향 등의 친일협력, 언론·사상통제, 일상사 등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근대화론’의 일제 침략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논의가 대중적으로 유포되며 역사 인식의 대립과 갈등이 현존하고 있다.

4) 마루야마의 견해는 일본파시즘은 유럽과 달리 대중적 파시즘운동이 결여된 채 군부·관료 등 기존 국가기구가 소부르주아층을 기반으로 ‘위로부터’ 추진되었다는 것이다(丸山眞男, 1964, 『日本ファシズムの思想と運動』, 『増補版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일본파시즘론은 논쟁과 연구를 통해 그 본질을 폭력성·침략성·관념성 등의 비합리성과 토대·기구의 후진성·전근대성으로 정리했다. 미국이 주도한 ‘전후개혁’ 평가와 관련된 전전·전후 일본사회의 연관성 문제에서 ‘전후개혁’이 일본파시즘의 토대·기구를 해체시켰다는 점에서 전전·전후의 단절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후 민주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문제의식의 과잉을 반영한 것으로 전전·전후 일본사회의 연속성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된 정치용어로 역사연구의 분석 도구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대신 ‘혁신’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면서 ‘일본파시즘논쟁’을 촉발시켰다. 19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냉전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후루가와 다카히사(古川隆久)는 이토의 입론에 반공적 ‘전체주의론’과 근대화론 입장의 기능주의적 ‘사회시스템론’을 도입해 ‘전시체제론’을 보강했다.⁵⁾ ‘전시체제’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전쟁 수행 중에 선택된 임시체제로서 전체주의 체제의 지표인 정치집권화·경제계획화·사회동질화 등 사회시스템의 효율화를 높이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제 파시즘 체제의 폭력적·침략적 본질과 식민지 전시수탈과 강제동원의 역사상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역사수정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90년대 제기된 ‘총력전체제론’은 근대화·합리화·동질화 문제를 일본파시즘론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자체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연구의 주 관심을 ‘총력전체제’로부터 전후 일본의 ‘원형’을 찾는 전시·전후 연속적 관점이다.⁶⁾ 본격적으로 일본학계에서 ‘총력전체제론’을 제기한 것은 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 대 뉴딜의 대결이 아닌 ‘총력전체제에 의한 사회적 재편성’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도 파시즘 국가도 모두 국가총동원을 대전제로 하는 총력전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차이·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의 자원으로 국가위기인 전쟁에 동원했다. 국민을 총동원의 이름으로 총력전체제 구조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강제적 균질화가 도모되어 사회적 신분제도 철폐의 진전, 평등화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사회적 재편성’이고, 그 결과 총력전사회는 ‘계급사회에서 시스템 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이다.⁷⁾

‘총력전체제론’의 시스템사회론적 인식과 함께 핵심적인 것은 전시·전후의 연속성이다.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는 전전의 총력전체제라는 전시체제는 전후에도 형태를 변화시켜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즉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 강제에서

자발이라는 내용으로 크게 전환되었지만 전전=전쟁, 전후=경제라는 단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총력전체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⁸⁾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은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지만 노구치는 그것을 가장 첨예하게 구체적으로 전개했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도 총력전체제의 연속성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총력전체제를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해 20세기 말 동서냉전 종언으로 끝난 글로벌한 정치체제라고 규정하고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형태로 일본 국내에는 적용되지 못했고 ‘만주국’이 실험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1940년대 들어 ‘만주국’ 경영에서 획득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 국내에 총력전체제가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고바야시는 그것을 ‘일본형 총력전시스템’이라 했다.⁹⁾

한편 일본 전시 총동원체제를 ‘20세기 시장제도’라는 측면에서 전후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일본 경제사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마자키 시로(山崎志郎)의 일련의 연구¹⁰⁾는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변동과정에서 일본 독점자본이 성장했고 군국주의 파시즘 세력에 의한 2.26사건과 중일전쟁 도발로 시장 조직화, 재정·산업정책에 의한 시장개입이 전면화되는 경제 총동원체제가 시작되었다는 것, 전시 총동원체제는 물자동원계획과 식량증산정책, 노무동원정책, 식민지 및 지역 개발 등에서 계획적 자원배분정책이 전개되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조정정책, 시장 조직화도 진전되었다는 것, 이러한 정책과 시장 설계는 총동원 과정에서 시행되거나 실험되며 생겨났고, 그것은 전후 부흥기에도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패전 이후 점령 하의 일본에서 여러 점령개혁이나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의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한편에서 전시에 가능한 자원동원정책을 이용해 경제부흥이 진행되었고 단기적이었지만 정부 주도로 전시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통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관점은 총동원체제는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시에도 활용되는 보편적 체제라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책임과 침략성, 반인권적 행태가 가려질 수 있다.

5) 伊藤隆, 1976, 「昭和政治史への研究一視覚」, 『思想』624; 古川隆久, 1993, 『昭和戦中期の総合國策機關』, 吉川弘文館. 이토 다카히는 일본의 극우보수주의적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후소사(扶桑社) 역사교과서의 ‘역사수정주의’를 지원했다.

6) ‘총력전체제론’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 경향은 고우케츠 아쓰시(岡厚)의 정리를 참고했다. 岡厚, 2010, 『總力戦体制研究 - 日本陸軍の國家總動員構想』, 社會評論社, 270-281쪽.

7) 山之内靖, 1995, 「方法的序論 - 總力戦とシステム統合」, 『總力戦と現代化』, 柏書房.

8) 野口悠紀雄, 1995, 『1940年體制 - さらに戦時體制』, 東洋經濟新聞社.

9) 小林英夫, 2004, 『帝國日本と總力戦體制 - 戦前・戦後の連続とアジア』, 有志舎.

10) 原朗·山崎志郎 編著, 2006, 『戦時日本の經濟再編成』, 日本經濟評論社; 山崎志郎, 2011, 『戦時經濟總動員体制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山崎志郎, 2012, 『物資動員計畫と共榮圈構想の形性』, 日本經濟評論社; 山崎志郎, 2016, 『太平洋戦争期の物資動員計畫』, 日本經濟評論社.

11) 山崎志郎, 2011, 『戦時經濟總動員体制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はしかき(vii~xvi)쪽.

이러한 일본학계의 연구경향에 대해 방기중은 “전시체제론’이나 ‘총력전체제론’의 관점을 취하지 않더라도 논쟁의 소지가 많은 파시즘 용어를 기피하고 제국주의 세계전쟁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적 용어인 ‘전시체제’(또는 ‘전쟁체제’), ‘총력전체제’(또는 ‘총동원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¹²⁾라고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총력전체제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공주의 입장에서 파시즘론을 ‘선악사관’ 논리로 치부하고 일본파시즘의 침략성·폭력성과 전쟁 책임 문제를 은폐하며 ‘역사수정주의’의 내밀한 참모본부 역할을 하는 ‘전시체제론’과는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 파시즘체제의 역사상을 희석화·형해화시키는데 보조를 같이하고 있고, 일제·일본 중심의 지배질서 공간인 ‘전시체제’의 혁신성·효율성, ‘총력전체제’의 근대성·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동아시아의 역동적 역사상을 왜곡하거나 배제시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파시즘을 식민지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조선의 전시통제와 동원체제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조선인의 능동적 대응을 분석하는 틀로 ‘식민지파시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¹⁴⁾ 이와 함께 ‘전시파시즘기’¹⁵⁾ ‘총동원체제기’¹⁶⁾로 시기 규정을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일본 본국은 독립적 국민국가로서 국가 운영을 했지만, 식민지는 식민본국의 요구에 의해 운영되는 무권리의 공간이었다. 일본에서 하나의 국민국가 단위로 전개된 ‘총력전체제’가 식민지 조선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될 수는 없었다. 이에 식민지 조선의 ‘총력전체제’는 파시즘적 총동원체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7~45년간의 식민지 조선사회는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적 총동원체제 하에 놓여 있었고, 그 식민유제는 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12) 방기중·전상숙, 2006, 26쪽.

13) 방기중·전상숙, 2006, 64-65쪽.

14) 방기중 편, 2004,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 방기중 편, 2005,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 방기중 편, 2006, 『식민지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해안.

15) 변은진, 2013,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도서출판 선인.

16) 안자코 유카, 200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 식민지 조선의 전시 총동원체제 하 물자동원 관련 연구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 하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물자동원에 대한 연구는 각 부문별로 진행되었다. 조선은 전시 군수식량공급기지로 중요시되었던 만큼 식량 동원과 수탈 관련해 식량 증산정책, 공출·배급, 지주소작관계, 농민생활에 대한 연구,¹⁷⁾ 도시지역의 생필품 배급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⁸⁾ 이러한 배급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암거래 문제가 다루어졌다.¹⁹⁾ 식량의 공출·배급 실시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 도시지역 노동자·서민의 일상과 그 파탄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²⁰⁾

식량과 함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전체의 생산력확충계획 실시 하에 조선에서도 이루어진 조선생산력확충계획 연구[21],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로 중요시되었던 금·석탄·철 등의 광물자원 증산과 동원에 대한 연구,²²⁾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17) 최유리, 1997,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이송순, 2008,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경제』, 도서출판 선인.

18) 허영란, 2000,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배급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 ; 김인호, 2002.8, 「태평양전쟁시기 조선 농촌에서의 물자통제 연구」, 『인문학논총』 6 ; 김인호, 2002.12,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총독부의 생필품 정책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 김인호, 2006, 「태평양전쟁기 서울지역의 생필품 배급통제 실태」, 『서울학연구』 26.

19) 이송순, 2003, 「전시기(1937~1945) 조선의 농촌 장시통제와 암거래 확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4 ; 이은희, 2014, 「1940년대 전반 식민지 조선의 암시장- 생활물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66.

20) 이송순, 2001, 「일제하 전시체제기 식량배급정책의 실시와 그 실태」, 『사람』 16 ; 이송순, 2002, 「일제하 1930·40년대 농가경제의 추이와 농민생활」, 『역사문제연구』 8 ; 이종민, 2004, 「도시의 일상을 통해 본 주민동원과 생활 통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 소현숙, 2006, 「‘근대’에의 열망과 일상생활의 식민화」,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 공제욱, 2006, 「의복통제와 ‘국민’만들기」,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 이송순, 2011, 「일제말 전시체제하 ‘국민생활’의 강제와 그 실태 일상적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4.

21) 김인호, 1999, 「조선에서의 제1차생산력 확충과 대용품 공업화(1938~1941)」, 『사총』 49 ; 김인호, 2000, 「조선에서의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과 실상(194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6.

22) 박기주, 1998, 「조선에서의 금광업 발전과 조선인광업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7, 「일제의 한국 석탄산업 침탈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현, 2009, 「조선총독부의 전시경제정책, 1937~1945 자금·생산·유통 통제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현, 2010, 「중일전쟁기 조선총독부의 금집중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55 ; 박현, 2011, 「조선총독부의 금 생산력확충계획 수립과 전개」, 『한국근현대사연구』 59 ; 배석만, 2016,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소형용광로건설사업 추진과 귀결」, 『인문논총』 73-1.

금속에 대한 회수 및 헌납에 대한 연구,^{23]} 삼림자원에 대한 통제와 공출 연구^{24]}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이후 실시된 ‘조선공업화’ 정책이 전시 동원과 수탈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광산물 및 삼림자원의 수탈은 자원의 절대량이 유출·소비되는 것인 만큼 일제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 동원의 피해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은 물자의 약탈적 소비뿐만 아니라 자금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

영·미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서 외화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침략·점령지역의 엔블릭권을 대상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살포하며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다. 전시 총동원체제가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금융조합·간이생명보험 등 식민지 특수금융기관의 자금 운용과 동원에 대한 연구^{25]}, 강제저축 등 민간자금 동원정책에 대한 연구^{26]}를 통해 전시 인플레이션과 금융·화폐제도의 형해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군국주의 파

23] 김인호, 2008, 「중일전쟁 시기 조선에서의 폐품회수 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7 ; 김인호, 2010,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에서 금속회수운동의 전개와 실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 김인호, 2014, 「『반도의 총후진』을 통해서 본 조선인의 국방헌납」, 『역사와경계』 93.

24] 최병택, 2004, 「전시체제 하 일제의 물자수급 및 통제정책·경성의 신탄수급 통제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53 ; 최병택, 2008,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 임업동원책과 삼림자원 공출」, 『한국사학보』 32.

25] 문영주, 2001, 「일제말기(1937~45) 금융조합 농업대출금의 운용실태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6 ; 이경란, 2002,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해안 ; 정병욱, 2004, 『한국근대금융연구·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 경제』, 역사비평사 ; 문영주, 「일제하 도시금융조합의 운영체제와 금융활동(1918~1945)」,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명근, 2011, 「일제의 국책금융기관 조선은행 연구」,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일영, 2019.8, 「일제 식민지기 조선간이생명보험을 통해 본 ‘공공의 기만성」, 『역사학연구』 75.

26] 권대웅, 1986, 「일제말기 조선저축운동의 실체」, 『민족문화논총』 7 ; 문영주, 2003, 「1938~45년 ‘국민저축조성운동’의 전개와 금융조합 예금의 성격」, 『한국사학보』 14 ; 조명근, 2009, 「일제말(1937~45) 조선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공채의 발생 실태」, 『대동문화연구』 65.

시즘적 총동원체제^{27]}하에서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일제가 행한 식량 및 각종 물자동원 시스템과 그로 인한 수탈상을 정리했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시 물자동원은 식량, 공업생산물, 광물자원, 자금이 그 대상이었다. 전쟁은 모든 자금과 자원을 동원해 막대한 무기와 물자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행위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과 물적 성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 동원과 수탈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빼앗아 써버리는 지극히 약탈적인 소비행위였다. 일제의 전시 총동원은 ‘내선일체’ ‘황국신민’의 통합 이데올로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의 차별과 억압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되었기에 식민지민들은 민족의식·저항의식을 내면화하며 저항을 멈출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가 물자 동원과 수탈은 일제 식민지배와 정책에서 특수한 상황의 돌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닌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며 식민지 통치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 파시즘으로의 전환, 전시 동원과 수탈은 전쟁이란 돌출적 상황의 산물이 아닌 일본제국주의의 전개과정과 연관하여 계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행한 전시 동원과 관련해 주요한 쟁점은 동원의 ‘자발성’ 여부이다. 일본 본국의 전시 총동원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파시즘체제 하에서 자발적 동원과 억압적 상황이 착종된 면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자발적 동원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전시 동원의 강제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전시 통제정책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와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폭력적 권력을 활용했고, 침략전쟁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식민지 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27] 이 책의 연구대상 시기는 1937~1945년간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에 참가,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결국 1945년 패전할 때까지이다. 학계의 연구를 통해 이 시기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전시체제기’ ‘파시즘기’ ‘총력전체제기’ ‘총동원체제기’ 등이 제기되었다. 역사적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종합적·총체적·인식론적인 작업이고 역사의식이 투영되는 것이다. 일제 식민권력은 근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자유·평등·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황국신민’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적인 사회통합을 강요하는 파시즘적 정치·사회질서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제 식민권력은 제도 시행과정에서도 자의적·폭력적·강제적 형태로 식민지민의 일상과 인권을 파탄시켰다. 이 책에서는 분석대상인 전시 물자동원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파시즘적 사회질서를 전제로 한 ‘전시 총동원체제’로 이 시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파탄시킬 정도로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원은 불가능했다는 인식이다.

전시 동원의 자발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정책에 협력’했던 측면이 있으며 이는 ‘내선일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 아닌 ‘물질적 동기부여’에 의한 것이었다는 관점이다. 근대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배가 개발과 수탈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정책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이 곧바로 식민지 인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다. 문명과 효율의 이면에 있는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더 크고 선명했기 때문이다.

전시 동원과 수탈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 사실과 양적 데이터가 확보되어 그 실체가 정리되어야 한다. 일제의 사상 및 언론·정보 통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1920년대 이후 소위 문화통치라는 명목하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일정 정도의 조선인들의 자기표현과 저항의 목소리는 ‘유언비어’ ‘불경(不敬)’ ‘불온(不穩)’ ‘비국민’이라 칭해지며 경찰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인신적·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기 사료는 대부분 정책 홍보와 선전, 전쟁 상황에 대한 호도를 통한 협력 강요를 목적으로 일제 정책당국에 의해 생산된 문서와 자료이다.²⁸⁾ 이에 어느 시점보다도 치밀한 사료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료를 통해 동원과 수탈의 구체적 양상을 추출해 낸다면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일제 전시 동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에 대한 배상 요구를 정치적 레토릭이라 호도하며 여전히 역사전쟁을 이끌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될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은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사회 내부의 통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강제한다. 일제는 그들의 승리가 식민지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 주장하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 ‘멸사봉공’ ‘공익우선’ - 를 강요했고, 전쟁을 위해 극단적 내핍을 강요하며 일상의 삶마저 파탄시켰다. 폭력적 식민권력 하에 식민지 민중들은 쉽게 저항할 수 없었지만 점차 생존권마저 확보되지 못하는 극한적인 동

28)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기 사료에 대한 문제는 이준식, 2006, 「파시즘기 정책사자료의 현황과 성격」, 『식민지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참고.

원과 수탈이 진행되면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대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식민권력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나 저항운동의 양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일제 식민권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 총동원체제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서 행한 군수물자 동원의 실태와 생필품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전시체제기 조선 식민지배의 실상과 의미를 분석했다.

1장에서는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총력전’이라는 근대전쟁의 양상을 체득하고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대외 팽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논리를 정리했다. 일본 내부는 메이지유신의 주역으로 발언권을 강화한 원로·군부세력,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에서 성장한 정당정치 세력, 일본 자본주의의 주역인 독점재벌, 근대정부체제 하에서 새롭게 성장한 관료엘리트 간의 역관계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 목표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한 일본의 성장이었다. 세계대공황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블록경제가 형성되면서 일제 역시 그 길을 선택했다. 1931년 일본 군부 주도로 ‘만주사변’을 도발했고, 괴뢰 ‘만주국’ 수립을 통해 만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는 일본의 전시 총동원체제 형성의 시험대였고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일제의 식량공급 기지로 설정되었던 식민지 조선은 20여 년간의 식민지배와 세계대공황으로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농공병진’으로의 식민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물적 자원을 활용한 ‘조선공업화’를 통해 일본 블록경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타임을 찾고 있었다.

2장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생산력 확충과 물자동원을 축으로 전개된 전시 총동원체제의 실상과 파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정치사회체제는 군부의 무력쿠데타(2.26사건)를 거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파시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를 토대로 침략전쟁을 도발하며 전쟁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갔고 절대적인 물자 부족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극단적이고 희화적이기까지 한 전시 총동원이 이루어졌다. 조선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병참기지’가 되면서 적극적인 군수물자 동원과 생산력 확충에 투입되었다. 조선의 전시 총동원체제는 일본제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총동원체제의 일환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법적·정책적 시행이 이루어졌으나 조선의 상황은 일본 본국과 같을 수 없었다.

3장은 조선의 지하자원(광물)과 자금 동원·수탈의 메커니즘과 그 실상, 그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과 일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은 1930년대 ‘조공업(粗工業)지대’로 설정되었는

데 이것은 고도의 정밀기계공업이나 중공업이 아닌 소비재·경공업 및 원료가공 공업이 중심이었다. 1940년대 들어 전쟁이 확대되고 서구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에 돌입한 일제는 주요 군수자원의 수입이 막히자 일본제국권 내의 자급자족체제 구축에 나섰고 조선에서 산출되는 지하자원과 그에 대한 가공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조선의 광물 자원 수탈은 극에 달했다. 또한 전쟁자금 동원을 위해 일본 본국과 식민지 전역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했다.

4장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량공급기지인 조선의 역할이 전시 하에서 강화되어 군수 식량 확보를 위한 전시 증산정책이 실시되는 과정과 내용,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1937년 중일전쟁 도발 당시까지도 낙관했던 일본제국권의 식량수급 사정은 1939년 한반도와 일본 중서부의 대가뭄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제는 조선에서 다시 적극적인 식량증산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각종 자재 부족으로 토지개량과 같은 근본적인 증산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비료 역시 무기원료로 동원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쌀 중심의 증산정책을 벗어나 잡곡을 포함한 식량 전체의 증산을 도모했으나 이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시 일본제국의 식량사정은 계속 악화되어갔다.

5장은 식량 증산이 한계를 보이자 결국 유통과 소비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동원이 실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40년부터 본격화된 식량 공출은 식량 생산의 정제·감소와 맞물려 매년 범위와 수량이 확대·강화되어갔고 식량 외에 군수물자로서 중요한 의류·작물인 면화·대마에 대한 공출도 실시했다. 강제적 유통통제인 공출은 농민들의 생산비 보전이 어려울 정도의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농민들의 자가소비도 어려울 정도로 과대한 양이 강제 공출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삶의 유지·보전을 위한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저항을 이어나갔다.

6장은 식량 생산의 한계, 강제 공출된 식량의 군수로의 이용을 위해 민간 소비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소비통제를 위해 실시된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의 배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절대적인 물자 절약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캠페인과 소비통제, 도시지역 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식량·생필품 배급, 농민들의 자급적인 생활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출한다는 자가보유미제도 실시의 내용과 실행 과정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삶의 지속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루어진 암거래의 실태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막대한 소비행위인 전쟁을 위한 동원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일본 본국과 식민지 사회는 단순 재생산도 불가능한 축소 재생산 과정에 빠져들면서 일본제국주

의의 몰락은 단지 시간 싸움에 불과했다. 마침내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식민지배의 제도와 모든 결과를 봉인시키고 청산케 하지 못했다. 전시 물자동원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제도와 시스템, 인식은 해방 이후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여러 흔적을 남겼다.

4. 향후 과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의 전쟁이 총력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대륙의 스케일을 감당하며 영·미 선진제국주의 국가와 대적하게 된 것은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도발이었다. 일본자본주의의 기술 및 자본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해 고급 정밀기계나 주요 원료는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수입해야 했고, 주요 동력원인 석유 역시 자급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확대는 감당키 어려운 것으로 결국 일본 본국과 식민지 전역에서 기존의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고도 모든 자원을 약탈적으로 동원해야 했다. 이를 위해 행정권력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파시즘적 통제를 강화했지만 민중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자발적’ 동원은 불가능했다.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는 물론 생명에 대한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력의 강제동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는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산업의 생산력 상승이나 새로운 산업의 발흥이 있었지만, 1937년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조선의 생산력은 고갈되어갔다. 또한 전시 하에서 전쟁승리라는 목표하에 ‘공익’과 ‘효율’을 내세운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동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책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과 구조가 외부로부터 이식되어 상호간의 갈등과 모순 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시 총동원체제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일본제국주의의 전시 총동원체제기 정책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진행된 식민정책의 일환이며 총결산이었다.

제국주의 일본은 패전과 이어진 미국에 의한 ‘전후개혁’으로 파시즘적 질서를 청산해갈 수 있었고, 전시 총동원과 통제의 경험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하에서 활용되었다. 여기에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체제의 수혜자로 고도성장과 선진자본주의국가로의 부

활이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이 행한 전쟁과 그로 인한 식민지와 주변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단절적’ 인식 속에서 부인하고 있다. 일본의 전전·전후 역사인식은 선택적·기능적 연속과 무책임의 단절이라 할 수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있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식민지였던 조선은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의 최전선이 한반도에 걸쳐지면서 분단되었다.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기의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 분단과 전쟁, 독재체제 수립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지배계층 및 특정 집단들에 의해 다시 이용되며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해방 후 한국사회의 빈곤과 정치적 미숙함,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기의 파시즘적 사회질서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滅私奉公’ ‘公益優先’의 이데올로기- 가 여전히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남북한 정권 모두 분단과 정치적 혼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경제적 빈곤의 탈피(급속한 경제성장)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파시즘적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계급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기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체제는 역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물자 및 인력 동원, 통제를 위한 조사·집행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행정, 정경유착적 구조가 만연했다. 그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경찰력의 증원 등 국가기구·관료층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식민유제 청산의 핵심은 이러한 일제의 전시 총동원체제의 파시즘적 인식과 사회질서를 해체하고 자유·평등·인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뿌리내리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회인식의 변화라 할 것이다. 해방과 함께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의 인적 청산 기회를 잃고, 70여 년이 지나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적극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 평가의 엄중함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사회시스템과 인식에 남아있는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은 그 뿌리인 전시 총동원체제의 실상을 명확히 하여 청산해 가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 각 분야에 남아있는 전시 총동원체제의 유제를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이 추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전시동원>분야 / 토론요지

김민영
(군산대)

<전시동원>분야 / 토 론 요 지

김민영
(군산대)

1. 시작하며

연구총서와 자료총서, 교양총서 등으로 구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 침탈사 편찬사업’과 그 결과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특히 연구총서는 관련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해방된 지 70여 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를 통한 학문적 논리 정립과 기초 사료 구축 및 향후 활용 등 그 결과가 주목됨.

2. 개별 주제에 대한 소감 및 질

오늘 개최되는 ‘일제 지배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하의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는 ‘전시동원’이라는 틀에서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허광무 외)’과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이송순)’에 대해 약간의 소감과 질문을 통해 소임의 일부를 담당하고자 함.

1)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허광무 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부는 전시체제와 노무동원, 제2부는 끝나지 않은 역사청산을 다루고 있음. 1부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 일본 '제국'과 점령지역으로 노무동원된 역사적 사실을 동원방식, 동원유형,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고 있음. 2부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미결 과제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동원의 희생자와 유골문제, 미불금문제, 강제동원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특히 앞으로의 과제로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진상조사의 속개, 희생자 유골 봉환문제, 미수금문제, 사할린 피해자 문제. 일본의 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강제동원 피해를 은폐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한반도 내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음.

[질문요지]

- 1)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태평양전쟁기, 아태전쟁기 등 용어의 통일성 문제
- 2) 유사하게 식민지 조선인, 한인, 한국인 등 용어의 혼용 문제
- 3) '한반도 내 동원'과 관련하여 특히 '전래의 부역과 같은 국가적 요청에 대한 보답 등과 관련하여 약한 피해의식 문제'를 극복하는 논리
- 4) 위 3)과 관련하여 그 조사연구의 방향과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 등 걸림돌'에 대한 해안

2)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이송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군국주의 파시즘적 총동원체제 하에서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일제가 행한 식량 및 각종 물자동원 시스템과 그로 인한 수탈상을 분석 정리하고 있음. 특히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가 물자동원과 수탈은 일제 식민지배와 정책에서 특수한 상황의 돌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닌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며 식민지 통치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전시 동원과 수탈은 전쟁이란 돌출적 상황의 산물이 아닌 일본제국주의의 전개과정과 연관하여 계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역설함.

또한 향후 과제로서 '일본의 전전·전후 역사인식은 선택적·기능적 연속과 무책임의 단절이라 할 수 있으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 있는 인식이 필요하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 각 분야에 남아있는 전시 총동원체제의 유제를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이 추후 계속되어야함'을 강조함.

[질문요지]

- 1) '전시체제(전쟁체제), 총력전체제(총동원체제)' 등 일반적인 견해 가운데 식민지 조선의 총력전체제를 '파시즘적 총동원체제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일본제국주의의 특수성, 제국주의 일반이 갖는 보편성의 관계
- 2) 전시동원의 강제성, 수탈이 갖는 역사적 의미 :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일관계사
- 3) 일본의 전쟁수행 방법의 특성, 전비 조달 방법의 특수성과의 관련성

이상의 두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학계에서 활발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일제 침탈사' 연구에 대한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함.

MEMO

MEMO
